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1996. 12.

강 원 식
(국제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요약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한국 안보의 위협인지 동반자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한·러 안보협력방안을 강구·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바람직한 한·러 안보협력방안을 정치·경제·군사·기타 등 각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1. 러시아의 국가능력 평가

95년 12월 총선과 96년 대선 결과 노정된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립구도와 엘친의 건강문제로 인한 권력투쟁 가능성으로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당분간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급진개혁계와 공산·민족계, 정권파와 반정권파가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지향 및 러시아의 국가·민족적 영광을 강조하면서 서로 비슷한 중도주의적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의 국가이념은 중도주의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당면하여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상을 보일지라도 러시아 국내정세가 점차 안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병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단기간내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행기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95년이후 인플레이율의 둔화, GDP와 공업생산 저하율의 둔화, 일부 산업부문에서의 플러스성장 조짐, 루블화의 환율 상승과 통화총량에 접하는 비중 증대, 무역고와 무역흑자 증대 등 몇가지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막대한 부존자원과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을 감안할 때, 러시아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병력 부족, 주택 부족, 급료 지체, 보급 중단, 무기·장비 횡령, 마약 횡행 등 각종 문제점이 빈발하면서 구소련 해체후의 전환기적 혼란속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경제난에 따른 국방비의 대폭 삭감과 국민의 신뢰저하에 기인하는데, 정치·경제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군사력도 점차 정비될 것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150만 대군대를 보유한 군사대국인 것이다.

CIS 통합과 관련해서는 구소련과 같은 강력한 연방국가가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러시아의 적극적인 근외중심정책과 역내 국가들의 러시아와의 연계 필요성에 따라 CIS 보다는 결속력이 강한 형태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합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2. 러시아의 외교정책기조

러시아는 「전방위 강대국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획득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방위 강대국외교」가 중심적인 외교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미국의 균형자·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현안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는 미국의 돌출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여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는 「강대국외교」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모든 부문에서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대립·갈등소지를 줄여 강대국들의 대러시아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지원을 확보하여 국력을 신장하려는 「전방위외교」를 의미한다. 이 정책은 NATO 확대문제, 군축문제, 지역문제 등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러시아는 NATO가 동서대립 개념을 유지한 채 자국 접경으로 군사력을 팽창하는 것을 자국 안보에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동유럽국가의 PFP 참여 및 NATO의 정치구조 가입 등 NATO와의 정치안보협력은 가능하나, NATO 군사조직 참여와 NATO의 구소련 국경외곽지역내 핵무기 배치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군축문제에서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핵·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START와 CFE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문제에서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보스니아, 쿠바 등지에서 미국의 국익과 충돌하면서까지 자국의 입지를 모색하고,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인도와 ASEAN 등에 대한 적극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수산업 전환과정의 문제점 해결, 외화가득, 군부의 불만해소 등 다양한 정치·경제·외교·군사·사회적 효과를 목표로 「무기수출외교」를 추진하여 왔으며,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서방의 경제지원이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지원획득외교」를 강화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경제지원획득외교」는 특히 러시아가 과거의 친서방노선에서 탈피하여 전방위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러시아의 시장경제화 계획과 연계시켜 온 「서방이 요구하는 식의 외교패턴」에서 탈피하여,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기위해 다른 국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강대국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서방의 경제지원을 요구·유도하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식의 외교패턴」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극적 구걸외교」에서 「적극적 요구외교」로의 전환이다.

이는 냉전종식 직후 팽배된 「패배한 초강대국」으로서의 패잔병인식을 탈피하고, 러시아가 구소련을 해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승리자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구소련에서 민주러시아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서방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3.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전방위 강대국외교」의 차원에서 러시아는 기존의 소극적·수동적 외교에서 탈피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즉 러시아는 미·일의 신안보동맹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천명하였고, 남북한에 대한 중재자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복원에 들어갔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 정책이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의 대러 접근을 유발시켰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경제지원획득외교」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이는 역내 모든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혀 새로운 적극정책이다. 중국·일본·남한·북한 등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관계발전을 통한 역내 입지 확보전략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러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다. 동상이몽의 협조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뿐이다. 또한 러·북한관계 복원도 한계를 갖고 있다. 쌍방이 모두 경제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서 일차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일과의 실질관계가 발전할 경우, 러시아 보다는 오히려 미·일이 북한의 입장을 균형있게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도 북한을 궁극적으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로지 북한이 정책추진의 지렛대로서의 적절

한 역할을 담당해 주기만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동북아 및 아·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리적 기반으로서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최근 극동개발이 본격화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새롭게 「극동장기발전계획」을 정비하여 공표하고, 극동지역 지방정부들도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독자적 활동을 개시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러시아는 바야흐로 먼 유럽에 위치한 「모스크바·러시아」가 아니라 「극동러시아」로 되어 아시아국가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극동시베리아 개발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극동개발이 본격화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는 동북아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동력을 가질 수 있다.

4.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대체로 ①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 ②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③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궁극목표는 ①과 ②를 통한 ③의 성취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러시아가 아·태정책 추진의 「돌파구」로서 한국을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아·태지역에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

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역내 정세변동의 시금석인 한반도정세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반도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서 나타날 전반적인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변화에서도 러시아가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러·중관계, 러·일관계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고 러·북한관계도 문제가 있다면, 결국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정책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점차 적극화·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방위 적극외교」라는 러시아 외교의 새로운 정책추진방향에 의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수단은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양자주의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소집 주장 등 다자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들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인 바, 그것은 대체로 ①한국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면적 관계발전 추진, ②북한과의 관계복원, 북한외 국제관계 지원, 미·북한 접근 지원·중재 모색, ③남북대화의 중재역할 자임, 3각협력 제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군축 중재, ④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제안 계속, NEASED 개최 주선 등의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강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며, 남북대화 중재정책들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쌍방에

대해 공히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5. 한·러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

<호혜적 접근>

한국은 경제발전과 통일실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여 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데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국내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해서는 ①한·러간 쌍무관계 발전을 통한 경제·외교·군사적 국익 증진, ②러시아의 대북한 변화 유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원 확보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와 같은 대러시아 정책목표가 러시아의 국익을 훼손시키지 않고, 러시아의 대한국 정책목표가 한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러 양국은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즉 러시아의 대한 정책목표중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러시아의 경제실리 획득과 이를 통한 아·태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러시아의 국력신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계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나, 당면하여 러시아의 패권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국력신장은 역내질서 또는 세계질서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유용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러 정책목표중 러시아의 한반도통일 지원이 문제시될 수 있으나, 러시아가 「돌파구 개념」에 입각하여 한반도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통일과

정에 개입함으로써 통일이한국이 적어도 러시아에 적대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것이 러시아의 국익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러 양국의 안보협력은 互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점은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차별된다. 예컨대 중국과 일본은 역내 또는 세계패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한국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목표에서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소극적 지지 또는 반대측면에서도 구별된다. 대북한 정책에서도 갈등측면이 크며, 경제이익이 상호충돌하는 측면은 더욱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이 한국의 국익과 상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은 결국 한·러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러 양측이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경우, 발전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면적 접근>

전세계적 차원의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의 지역적 반영으로서 동북아의 신국제질서는 「1+3 체제」로서 균형자·조정자인 미국이 최상단에 있고, 중국·일본·러시아가 상층부에, 남북한이 중간부에 위치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구조속에서 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상층부로 진입하는 요체는 첫째, 최상단에 있는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되 체제유지 비용분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력신장을 위한 여력을 저

축하는 것이고, 둘째, 상층부 국가들간의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중·대일·대러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간부에 속하여 상층부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상층부내 약세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러시아의 상층부내 살아남기」와 「한국의 상층부 진입하기」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결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약자간의 제휴전략(合從)이다. 즉 한·러 제휴를 통해 중·일의 영향력 확대에 견제·대항하면서 상호 실리를 확충하여 국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약자의 국력 소진을 통한 중·일의 패권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국력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군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은 정치·경제·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 일본은 경제, 인구대국 중국은 정치, 영토대국 러시아는 군사로 각각 특화되어 있다. 상층부 국가와 중간부·하층부 국가간의 관계 설정에서 상층부 국가의 특화부분에서 관계를 강화할 경우, 중간부·하층부 국가가 당해 상층부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예측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상층부 국가가 패권화를 추진할 경우 중간부·하층부 국가의 국력수탈을 통한 자국의 국력신장이 필요불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대일 외교에 있어서 경제 보다는 기존의 대일 경제의존도를 줄이면서 정치·외교협력에 치중하고,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 변수를 고려한 정치·외교협력 보다는 경제 협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층부 국가로서도 취약한 부분

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국력신장을 위해 진력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일방적이 아니라 호혜협력의 소지가 크다.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避實擊虛)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군사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외적 군사투사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군사관계를 고려할 때, 한·러 군사협력을 강화하여도 한국의 대러 군사적 예측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영토대국·군사강국으로 특화되는 러시아이지만, 오히려 방대한 러시아 영토의 잠재력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는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경제 등의 제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되 일·중의 패권화 노력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층부 약자인 러시아와는 호혜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국력을 비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한·러 안보협력 세부방안

<정치분야>

- 러시아내 친한·지한세력 형성
 - 정부·의회지도자 교류, 민간교류 활성화
 - 차세대 지도자와의 연계, 러시아내 한국전문가 양성
 - 공산·민족계와의 유대
- 지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고위급대화 정례화

- CIS 국가와의 개별적 유대 강화
- 북한의 변화유도 모색
 - 북한 변수를 배제한 쌍무적 한·러 관계 구축 필요
-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협력 모색
 -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심 표명
 - 러시아 핵기술의 북한 반입 가능성 봉쇄
 - 러시아의 KEDO 참여 지원
 -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 촉구
 -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 설립을 위한 공동보조

<경제분야>

- 통상 확대
 - 수출주종상품의 러시아내 비교우위 제고노력 경주
 - 러시아 시장상황 변동에 대응하는 적응체계 완비
 - 한국 상품전시회 확대, 판촉전략 적극화
 - 한국 무역관 확대 개설
- 투자 확대
 - 중장기적 접근
 - 신규 투자대상의 발굴
 - 극동지역 투자 적극화·활성화
- 한·러·북한 3각협력 추진
 - 북한 유인조치 강구 추진
 -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추진

- 경협차관문제의 전향적 해결
 - 대러 정책 전반과의 연계속에서 검토
 - 경협차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필요
- 경제협력 제도화 추진
 - 부총리급 경제공동위원회 조기 개최
 - 러시아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지원, 다자간 협력 모색

<군사분야>

- 남북대치구도하의 제한적 협력과 통일지향구도의 자주적 협력
- 군사교류 확대
 - 군인사교류 활성화
 - 해군 함정 교류 정례화, 항공기 상호방문 추진
 - 군사연구교류 활성화
 - 군사교육교류 확대
- 무기·기술이전 확대
 - 러시아제 첨단무기 적극 도입
 - 기술협력 중심의 경협상환협상 추진
 - 전반적인 과학·기술협력과의 연계
 - 울곡예산과의 연계
- 군사협력 제도화채널 구축
 -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 한·러 군사협력협의회 설치·운영
 - 위기관리체제 구축

<기타분야>

- 극동지역에의 한인정착 지원
 - 민간 차원의 지원 확대, 고려인 노동력 적극 활용
 - 정부 차원의 신중 접근, 나호트카 공단 등 배후시설 건립 지원, 교민청 신설
- 환경협력
 - 동해 핵투기 방지 협의
 - 다자적 환경보호 협력체제 구축
- 탈북자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 협력
 - 러시아의 탈북자 난민 인정 및 신변보호 요구
 - UNHCR의 중재·지원을 통한 한·러 협력
 - 탈북자의 러시아 정착 유도
 - 북한 벌목장 인권개선 촉구, 러·북한 임업협정 개정

- 目 次 -

I. 서론	1
II. 러시아의 안보상황	5
1. 정치	5
가. 1995년말 총선결과	5
나. 1996년 대선결과	12
다. 전망	18
2. 경제	23
3. 군사	26
4. CIS 재통합	31
III.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	40
1. 러시아 외교의 일반방향	40
가. 러시아 안보정책의 일반 기조	41
나. 전방위 강대국외교	45
(1) NATO 확대문제	48
(2) 군축문제	51
(3) 지역문제	53
다. 무기수출외교	57
라. 경제지원획득외교	59
2. 동북아 안보정책방향	64
가. 러·중 관계	69
나. 러·일 관계	76

IV.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책	86
1. 한·러 관계	86
가. 정치관계	86
나. 경제관계	88
다. 군사관계	95
2. 러·북한 관계	98
가. 정치관계	99
나. 경제관계	105
다. 군사관계	110
라. 기타관계	112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책방향	113
V. 한·러 안보협력 방안	121
1. 기본방향	121
가. 호혜적 접근	122
나. 전면적 접근	126
2. 정치분야 협력방안	130
가. 러시아 국내정세 변화에 대응	130
나. CIS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134
다. 북한의 변화 유도 모색	136
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협력 모색	138
3. 경제분야 협력방안	141
가. 통상·투자 및 극동진출 확대	142
나. 한·러·북한 3각협력 추진	146
다. 경협차관문제의 전향적 해결	148
라. 경제협력 제도화 추진	150
4. 군사분야 협력방안	151

가. 군사교류 확대	153
나. 무기·기술이전 확대	154
다. 군사협력 제도화채널 구축	155
5. 기타분야 협력방안	156
가. 극동지역에의 한인정착 지원	156
나. 환경협력	163
다. 탈북자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 협력	166
VI. 결론	170
참고문헌	176

- 表目次 -

<표 1> 국가두마의 정당별 득표 및 의석획득 상황	6
<표 2> 1996년 6월 16일 대통령선거 1차투표 결과	13
<표 3> 1996년 7월 3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결과	13
<표 4> 러시아의 국방비 추이	26
<표 5>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90
<표 6> 한·러 경제협력차관의 내역	93
<표 7> 한·러 경제협력차관 원리금상환 일정표	94
<표 8> 구소련·러시아의 대북한 교역현황	107

I. 서론

일반적으로 안전보장 또는 안보란 외부의 침략에 대해 국가가 자기보존 또는 자기존립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외부적 침략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무력침략 즉 전쟁이었으므로 안보란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國防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 연구도 “군사력에 의한 위협, 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의 제어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전보장만으로는 사실상 국민생활의 안전을 모두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국가가 지켜야 할 대상을 領土와 國民 및 財産으로 볼 때,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 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타 분야의 위협과 침략도 안전보장과 관련한 중요한 국가목표로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안보의 개념을 단순히 군사적 차원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정치·외교·경제·환경·문화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과학·기술의 교환,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대처, 문화침략에 대한 대응 등의 영역도 포괄하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안보란 국외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내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소시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보에는 외부로부터의 각종 위협 제거 뿐만 아니라 내부의 취약성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국내적 사

1)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June 1991), p. 212.

회·경제정책 및 이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²⁾ 결국 안보개념은 최근 이처럼 매우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고 정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서의 안보개념은 러시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국방법은 제1조에서 “본 법에서 국방(оборона)이란 무력방위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사회·법적 그 밖의 조치 체계, 러시아연방의 무력방위 및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安保會議도 사회·정치, 경제, 군사, 환경 및 그 밖의 제반 위협의 방지와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방안보국, 사회·연방안보국, 경제안보국, 정보안보·전략예측국 등 4局을 설치하고 있다.⁴⁾ 즉 러시아에서도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사회안보, 정보안보, 환경안보 등 제반 안보위협 요소로부터의 국가보존을 고려한 안보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안보정책은 군사와 비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정책과,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정책과 중첩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안보개념을 적용하면, 국가가 취하는 정책은 모두 안보정책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연구라는 학문영역이 일반적인 국가정책연구와 동일시되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지언정 국가에 대한 위협을 규정하고

2) Barry Buzan,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2nd ed.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1991) 참조.

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июня 1996г.에 전재된 러시아연방 국방법 제1조.

4)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6 июля 1996г.에 전재된 「러시아연방 안보회의의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참조.

그것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상정하여 국내외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안보연구의 독자적인 입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안보개념을 원용하여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환경안보 등 국제정치외교의 제반 연구가 안보연구로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⁵⁾ 즉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의 안보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포괄적인 안보위협요인으로부터의 안전보장방안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안보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안보협력도 군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한·러 안보협력방안」은 총체적인 韓·러關係 發展方案 또는 한국의 對러시아 政策方向과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에게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구소련 해체이후 우리 사회내에서는 어느 틈에서인가 무슨 이유에서인가 러시아는 “우리에게 30억 달러를 빌려간 가난한 나라”, “냉전에서 패배한 힘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과연 이런 인식은 타당한 것인가? 러시아는 한국에 위협적인 국가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향후 한·러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

5) 냉전이후 신국제질서하의 안보연구의 변화된 모습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David A.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Vol. 48, No. 1 (October 1995), pp. 117~141 참조.

석과 평가를 내린 다음 그런 러시아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부문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제반 영역에서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분석·전망하는 포괄적 안보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먼저 II장에서 러시아의 종합적인 상황을 정치·경제·군사 및 연방장래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러시아의 단기적·중장기적 미래를 개관한다. 러시아가 과연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무기력한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전세계적 일반기조와 동북아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평가한다. 러시아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외교정책의 실제 모습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한·러 및 러·북한관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방향을 분석·전망한다. II장과 III장에서 도출된 러시아의 국가능력과 외교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보위협적인 것인지 또는 호혜적인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V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한·러관계를 정치·경제·군사·기타 분야로 세분하여 각 분야별 안보고려사항을 검토하는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면서 바람직한 한·러 안보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러시아의 안보상황

1. 정치

1995년 12월 17일 실시된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선거결과 공산당 등 반엘친세력이 승리한 반면, 1996년 6월 16일과 7월 3일 실시된 러시아 연방대통령 선거에서는 엘친(Борис Н. Ельцин)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립이라는 신생러시아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政治不安을 재차 노정되게 되었다. 더욱이 집권 2기 출범과 동시에 엘친 대통령이 심장수술로 국정을 일시 관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일찍부터 포스트·엘친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등 엘친의 健康問題까지 중첩되어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당분간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는 엘친 집권2기의 정치상황을 총선·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가. 1995년말 총선결과

1995년 12월 17일 실시된 연방의회⁶⁾ 국가두마 선거 결과는 쥘가노프(Геннадий А. Жуганов)의 러시아공산당이 의석의 3분의 1을

6) 연방의회(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는 상원인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와 하원인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로 구성되는데, 상원 의원은 89개 연방구성주체의 입법·집행기관 대표 1명씩 총 178명이며, 하원 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전국구에서 각각 반수가 선출되는 총 450명이다. 1993.12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결과는 姜元植,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内外政策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4-04 (1994.3) 참조.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반열친세력의 대대적인 승리로 특징지어졌다.

<표 1> 국가두마의 정당별 득표 및 의석획득 상황

선거단체	비례구 득표수 (득표율)	의석		의석 총계
		비례구	소선거구	
러시아연방공산당	15,432,963 (22.30%)	99	58	157
러시아자유민주당	7,737,431 (11.18%)	50	1	51
우리집 러시아	7,009,291 (10.13%)	45	10	55
야블로코	4,767,384 (6.89%)	31	14	45
러시아여성	3,188,813 (4.61%)	0	3	3
공산노동소련	3,137,406 (4.53%)	0	1	1
러시아인공동체회의	2,980,137 (4.31%)	0	5	5
노동자자치당	2,756,954 (3.98%)	0	1	1
러시아의 민주적 선택	2,674,084 (3.86%)	0	9	9
러시아농업당	2,613,127 (3.78%)	0	20	20
대국-루쯔코이	1,781,233 (2.57%)	0	0	0
전진러시아	1,343,428 (1.94%)	0	3	3
권력을 인민에게	1,112,873 (1.61%)	0	9	9
공화당	1,106,812 (1.60%)	0	2	2
노조산업가-노동동맹	1,076,072 (1.55%)	0	1	1
환경당 케드르	962,195 (1.39%)	0	0	0
트리프킨 블록	769,259 (1.11%)	0	3	3
기타 선거단체	5,516,587 (7.97%)	0	8	8
무소속			77	77
총계	69,204,819 (100.00%)	225	450	450

* 43개 선거단체중 비례구 득표율이 1%를 상회한 선거단체만을 게재

* 유권자 107,496,558명중 69,204,819명 투표. 투표율 64.38%. 모든 당에 반대한 투표는 1,918,151명(2.77%), 무효표 1,320,619표(1.91%)

*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января 1996г.

총 43개의 선거단체가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 자민당, 「우리집 러시아」, 야블로코 등 4개 정당만이 비례구 의석 확보에 필요한 득표율 5%를 넘어, 전체 450석중 공산당 157석(34.9%), 자민당 51석(11.3%), 우리집 러시아 55석(12.2%), 야블로코 45석(10%)을 각각 차지하였다. 여타 39개 선거단체들은 5% 장벽으로 전국구 배정을 받지못하여 소선거구에서만 총 142석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무소속이 77석에 달하였다. 그 결과 反엘친세력이 하원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국가두마 개원후 院內交渉團體(35석 이상 등록가능) 구성 과정에서 농업당이 공산당으로부터 8석을 지원받고 좌파무소속을 영입하여 37석으로 등록하고, 「권력을 인민에게」도 무소속 및 타 정당 인사들을 규합하여 40석의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공산당의 149석과 함께 공산세력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226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외 자민당 51석, 야블로코 47석, 「조국러시아」 65석, 「러시아지역」 41석으로 각각 등록하였다. 기타 무소속은 20석이었다. 이로써 의회는 총선직후 4대 정당 구도에서 7개의 교섭단체로 재편되었다.

국가두마 제1차 회의가 1996년 1월 16일 개막되어 하원 의장에 공산당의 셀레즈노프(Геннадий Н. Селезнёв) 전 프라브다 편집장을 선출하고, 「우리집 러시아」의 쇼힌(Александр Н. Шохин)을 제1부의장, 공산당의 고라체바(Светлана П. Горячева), 자민당의 구제리에프(Михаил С. Гущериев), 「러시아지역」의 칠린가로프(Артур Н. Чилингаров), 「권력을 인민에게」의 바부린(Сергей Н. Бабурин)을 부의장에 선출하고, 29개의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다.⁷⁾

89개 연방구성주체의 행정수반 및 의회의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상원인 聯邦會議는 1996년 1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트로에프(Егор Т. Строев) 오를 주지사를 상원의장으로 선출하고, 리하초프(Василий Н. Лихачёв) 타타르스탄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코로료프(Олег П. Королёв) 리페츠크주의회 의장, 후보프(Валерий М. Зубов)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행정장관, 코코프(Валерий М. Коков) 카바르지노·발카리아공화국 대통령 등 4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8개의 상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다.⁸⁾

이상과 같은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회 구성이 향후 러시아정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특징을 몇가지 적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소련 인민대의원대회 선거가 처음으로 복수정당제로 실시된 이래 구소련·러시아에서는 수차례의 선거와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나, 동일한 법률에 입각한 동일한 선거가 거듭 실시되기는 이번 하원선거가 처음이다. 이 점에서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7) 국가두마 의정운영상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입법, 예산, 국제문제, CIS문제 등 4개 위원회 위원장인데, 의장 직책은 일반적인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부의장은 단순히 명예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2 декабря 1995г. 입법위원장은 루키야노프(Анатолий И. Лукьянов, 공산당), 예산위원장은 자도르노프(Михаил М. Задорнов, 야블로코), 국제위원장은 루킨(Владимир П. Лукин, 야블로코), CIS위원장은 티호노프(Георгий И. Тихонов, 「권력을 인민에게」)이다.

8) 상원은 개원당시 89개 연방구성주체의 행정수반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행정수반은 96.12까지 전원 재선출된다. 그 동안 21개 공화국은 자체 헌법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행정수반을 선출하여 왔으나 사하·하카시야 등 4개 공화국에서는 임기만료로 96.12~97.1간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68개 주·변강·자치주·자치관구·시의 경우, 아직 주민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48개 지역에서 96.9.1~연말간 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制度化·民主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993년 12월 의회선거의 투표율이 54.3%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선거의 64.38% 투표는 전혀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⁹⁾ 93년 총선의 경우, 엘친의 최고회의 무력제압 이후 대통령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는 신헌법이 채택되고 의회의 권능이 유명무실화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총선의 투표율 상승은 의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구의 5% 장벽을 넘은 선거단체수가 4개에 불과하고, 그 득표를 모두 합하여도 전체의 5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死票가 적은 것이 이점이라고 하는 비례대표제선거에서 러시아의 경우 거의 반수가 사표로 되어버렸다는 이상사태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의 승리자도 각 선거구에서 평균 12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선거가 치뤄져 겨우 20~40% 정도의 득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표가 훨씬 많았다. 이 점은 가뜩이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제도적으로 약세에 있는 의회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93년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共產·民族系의 득표수를 비교해 볼 때, 공산당의 약진은 약 50% 내외의 공산·민족계 표밭내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3년의 경우, 자민당이 공산·민족계내에서 우세하였으나, 이번의 경우, 공산당이 자민당, 러시아어

9)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95.6 제정된 국가두마 선거법에서는 선거불성립 사태를 피하기 위해 최저투표율을 25%로 규정한 바 있었다.

성, 농업당의 득표를 잠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⁰⁾ 결국 공산·민족계의 지지기반은 대체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러시아 정치에서 코포라티즘(корпоративност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귀속된 특정의 직업적 동기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해지나, 러시아 정치에서 코포라티즘적 동기는 아직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브로프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오늘날 러시아사회가 코포라티즘적 원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별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¹¹⁾

포포프라는 학자는 러시아의 정치사회에 석유, 가스, 야금, 군산 복합체, 자동차, 금융·유통, 농업 등 9개의 로비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¹²⁾ 러시아 유권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특정기능별 기준에 따라서 투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93년 총선에서 국영기업의 이해를 대변한 시민동맹의 몰락처럼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서 상품생산자연맹을 대표하는 러시아인공동체회의, 1,300만 농민의 러시아농업동맹에 의해 지지된 러시아농업당, 5,000만 노조원의 러시아독립노조연맹을 배경으로 한 「노조·산업가-노동동맹」 등이 모두 5% 장벽조차 넘지못하였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의 이해를 결집하였다는 「우리집 러시아」의 약세도 이를 실증하고 있다.¹³⁾

10) 93년과 95년 총선의 전국구 득표율을 비교할 경우, 공산당 12.40%와 22.73%, 자민당 22.92%와 11.40%, 러시아여성 8.13%와 4.70%, 농업당 7.99%와 3.85%이다. 95년의 경우, 4개 선거단체 이외에도 공산·민족계내 군소정파의 참가가 적지않았다.

11) «Сегодня», 29 декабря 1995г.

12)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6 декабря 1995г.

넷째, 중도파 정당의 몰락과 中道主義의 승리이다. 93년 총선에서는 급진개혁파와 보수파라는 양극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민주당, 러시아여성 등 중도파의 존재의의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우리집 러시아」는 물론 심지어 공산당과 자민당까지 모두 대체로 중도주의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중도파 정당의 입지가 좁아져 결국 중도파는 5% 장벽을 넘지못하였다. 이는 정치단체로서의 기존 중도파의 몰락을 의미하지만, 러시아 정치 전반에 걸쳐 중도주의적 사상과 정책 특히 중도좌파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알렉사첸코라는 연구자는 러시아인공동체회의의 폐인을 분석하면서 현재 러시아에서 중도주의는 선거가 없을 때에는 그럴듯하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그 기반을 상실해버린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 이는 러시아에서 중도주의가 1994년 결성된 러시아사회민주동맹과 사회민주당의 실패에서 나타나듯이, 사상적·정책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만 구체적인 정당으로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 결국 이는 러시아 중도주의 이념의 몰락이라기 보다는 정당정치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와 개혁의 대결이 아니라 현 체제와 정권에 대한 신임표와 불신임표, 즉 親엘친표와 反엘친표라는

13) 물론 이 현상을 코포라티즘이라는 시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미성숙에 따라 각종 직업단체들이 직업적 대표성을 충실히 갖지 못한다는 측면과 그들이 이익집단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없다는 政治文化的 制約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포라티즘과 관련하여 투표행태를 논급한 것은 러시아 정치를 분석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조직의 특정 이익집단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14) «Сегодня», 27 декабря 1995г.

형태로 이분화되어 나타났다. 신임표는 「우리집 러시아」와 5% 장벽을 넘지 못한 가이다르의 「러시아의 민주적 선택」에 던져졌고, 불신임표는 공산당, 농업당, 「권력을 인민에게」 등 좌파세력과 자유민주당에 향해졌다. 야블린스키의 야블로코와 표도로프의 노동자자주관리당의 지지자는 주로 현체제 존속을 바라지만 현정권의 정책에는 불만인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하여 엘친의 기존정책 실패와 중도주의적 선택의 불가피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중도주의적 정책 추진이 강조되는 동시에, 나아가 정당정치 성숙도에 따라서는 중도주의적 정당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 1996년 대선결과

1996년 6월 16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엘친과 쥬가노프가 35.28%와 32.03%의 근소한 차이로 각각 1, 2위를 차지함에 따라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으며, 7월 3일의 결선투표에서 엘친이 53.82%를 득표하여 40.31%를 얻은 쥬가노프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이와 같은 엘친 대통령의 재선은 선거자금과 전국적인 선거조직, TV를 위시한 매스컴의 독점, 서방 선진국의 일방적 지원, 적극적인 지방공약 등 현직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특전에 도움받은 바가 컸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선거문화 또는 향후 정세 전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특징을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1996년 6월 16일 대통령선거 1차투표 결과

후 보 자	득표수	득표율
엘친(Борис Н. Ельцин)	26,665,495	35.28
쥬가노프(Геннадий А. Зюганов)	24,211,686	32.03
레베지(Александр И. Лебедь)	10,974,736	14.52
야블린스키(Григорий А. Явлинский)	5,550,752	7.34
지리놉스키(Владимир В. Жириновский)	4,311,479	5.70
표도로프(Святослав Н. Фёдоров)	699,158	0.92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 Горбачёв)	386,069	0.51
샤쿰(Мартин Л. Шакум)	277,068	0.37
블라소프(Юрий П. Власов)	151,282	0.20
블린차로프(Владимир А. Бринцалов)	123,065	0.16
모든 후보에 반대	1,163,921	1.54
무효표	1,072,120	1.42
투표총수	75,587,139	100.00

* 유권자 108,495,023명중 75,744,549명이 투표. 투표율은 69.81%.

*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2 июня 1996.

<표 3> 1996년 7월 3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결과

후 보 자	득표수	득표율
엘친	40,208,384	53.82
쥬가노프	30,113,306	40.31
두 후보에 모두 반대	3,604,550	4.82
무효표	780,405	1.04
투표총수	74,706,645	100.00

* 유권자 108,600,730명중 74,815,898명이 투표. 투표율은 68.89%

*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0 июля 1996г.

첫째, 엘친진영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향후 러시아의 選舉文化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월 23일 사회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되어 발족된 「대통령선거운동평의회」는 현대적인 선거공학에 입각하여 엘친이 러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TV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는 등 각종 여론선도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유세시에는 지방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지지 확보를 위해 대중문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러시아의 선거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문화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엘친진영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권과 금권을 악용하여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하였음도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문화라는 측면에서는 投票率의 신장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엘친진영은 강력한 지지기반인 20대에서 4대에 이르는 도시주민의 표를 확보하는 것을 재선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투표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결선 투표에서는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7월 3일을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휴일로 하고 당일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하는 등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였다.¹⁵⁾ 이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소련방 붕괴후의 투표에서 가장 높은 결과로 되었

15) 이에 비해 유가노프 진영에서는 고령자와 연금생활자 등 자신의 지지층이 고정적이므로 오히려 선거열기를 식혀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슬로건과 정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투표율을 낮추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다.

둘째, 옐친이 지방에서 예상외의 득표를 한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즉 선거 직전인 5월과 6월에 걸쳐 옐친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인정해주는 權限分割條約을 수많은 지방정부와 체결하여, 이를 통해 득표에는 성공하였으나, 연방문제와 관련한 갈등소지를 남겼다는 점이다.¹⁶⁾

러시아내 중앙·지방관계 또는 연방구성주체간의 관계는 현재 연방조약과 신헌법 및 권한분할조약 간에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당초 1992년 3월 체결된 연방조약에서 공화국의 특수지위를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область)·변강(край) 등 여타 연방구성주체들의 반발로 이들이 공화국을 선포하는 공화국독립선언이 이어지자, 연방구성주체간의 평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을 1993년 12월 채택하였다. 그러나 연방조약과 신헌법간의 상위로 인해 각 지방의 불만이 제고되자, 먼저 공화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한분할조약을 체결하여 각 지방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였다. 그 시초가 1994년 12월 타타르스탄 공화국과의 권한분할조약이었는데, 그후 각 연방구성주체의 정치적 발언력에 비례하여 목소리가 강한 곳에는 조세권 등을 보다 많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다가 이번 대선에 임박하여 지방에 대한 선심차원에서 동 조약을 주·변강과 대거 체결하였던 것이다.

결국 권한분할조약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을 대폭 인정하는 방향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위헌문제, 연방구성주체간의

16) 선거전이 개시된 96년이후 1월 4건, 3월 1건, 4월 1건, 5월 7건, 6월 4건의 권한분할조약을 연방구성주체와 체결하였다.

불평등, 연방세입 축소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연방에 대한 재정의 존율이 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¹⁷⁾ 나아가 향후 러시아 정치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레베지와 관련한 문제이다. 레베지의 14.52% 득표는 레베지 자신이 체첸전쟁의 종결과 법·질서의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이며, 레베지의 카리스마적 성격이 러시아의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5월이래 엘친이 레베지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5월초 엘친진영에서는 레베지와 제휴하여 레베지를 별동대로 활용하여 쥬가노프와 제3세력의 표를 분산시키고 나아가 결선투표에서 레베지를 엘친측에 영입함으로써 그의 지지표를 흡수한다는 고등전략을 구상하였다. 이 구상에는 야블린스키도 고려되었지만, 야블린스키의 지지자는 성향적으로 대부분 결선투표에서 엘친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효용성의 측면에서 레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야블린스키와의 협상은 실제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 엘친은 5월 5일 야블린스키와 회담하고 선거 협력을 협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야블린스키는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선거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5월 16일 2차 회담에서 야블린스키는 현정권파와 야블로코의 연립정부 수립, 내각의 권한 강화와 총리의 정부인사권 장악, 연립정부

17) 권한분할조약의 대상은 연방구성주체 내부의 천연자원 이용·처분권과 독자적인 지방세 징수권, 대외관계권한 등의 문제인데, 특히 지방세 징수문제는 연방재정 담세율과 연계되기 때문에 연방장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 야블로코 정책 추진, 5월 25일까지 총리·제1부총리·국방장관·대통령부 행정장관 해임 등을 조건으로 한 자신의 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엘친은 제1부총리를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던 것이다.¹⁸⁾

한편 엘친은 5월 2일 레베지와 회담하였으나, 이 회담은 짧게 끝나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후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레베지는 야블린스키와 쥬가노프 진영의 선거협력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엘친진영으로부터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받고, 대통령진영이 장악하고 있던 TV방송에 출연하는 동시에, 저명한 스피치 라이터(레오니드 라지홉스키)와 개혁파 경제학자(비탈리 나이쥬리)의 파견 등 전반적인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다.¹⁹⁾ 엘친은 레베지에게 이미 안보회의 서기 또는 안보담당 제1부총리직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그라초프 국방장관 해임도 약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²⁰⁾ 그후 6월 14일 고향 예카제린부르그에서의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자신이 레베지를 후계자로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면서 선거운동을 종료하였다. 이는

18) 이와 같은 내용은 야블린스키의 요구에 따라 언론에 공개되었다. «Известия», 18 мая 1996г. 야블린스키는 당시 자신의 출마가 쥬가노프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민주진영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엘친 지지를 천명하기에는 개혁파 야당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야블린스키는 이 협상에서 엘친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독자적인 정치입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이로써 오히려 여론의 비판을 받게되는 결과로 되었다.

19) 岸田芳樹, “レベジはポスト・エリツィンのトップランナーか,” 「世界週報」, 1996年 8月 13日, pp. 28~29; 上野俊彦, “エリツィンはこうして勝利した,” 「世界週報」, 1996年 8月 20~27日, pp. 30~31.

20) 이미 6월초 레베지는 TV 인터뷰에서 곧 그라초프가 해임될 것이라고 자신 만만하게 공언하였다.

엘친이 레베지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서 결국 체첸문제 해결과 치안확보라는 레베지의 정책이 향후 엘친의 후계자로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레베지의 득표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결국 자금과 조직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던 레베지로서는 엘친의 지원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약 15%의 득표를 얻을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엘친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레베지의 지지율 상승은 투표 1개월전인 5월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레베지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56%가 6월 이후에 투표를 결정하였다고 한다.²¹⁾ 이 점은 러시아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레베지의 지지기반과 정치적 장래를 분석·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²⁾

다. 전망

엘친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러시아인의 전통적인 짜르신앙에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상으로는 대통령 취임식도 짜르의 대관식처럼 행하려 하였다. 이처럼 짜르와 같은 절대적 권력자인 엘친

21) «Сегодня», 25 июня 1996г.

22) 한편 엘친은 1차 투표직후 레베지를 안보회의(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서기 및 국가안전보장담당 대통령보좌관으로 임명(6.18)하고 안보회의의 관할대상을 정치·경제·사회·국방·정보·환경 등 제반 안보문제로 넓혀 권한을 강화(7.10)한 대신에, 군사정책문제를 전담하는 국방회의(Совет обороны РФ)라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7.25)하고 바투린(Юрий М. Батулин) 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을 서기로 임명함으로써 안보회의의 권한을 견제하였다.

의 健康危機는 정치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집권이래 여러차례 지병인 심장병이 재발되던 엘친 대통령은 마침내 1996년 11월 5일 심장수술을 받았다. 위태로우나마 생명이 연장되고 불완전한 건강이나마 위기가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갑자기 엘친의 물리적 생명이 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74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병세가 악화된 이래 안드로포프, 체르넨코를 거쳐 1985년 젊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까지 10여년동안 병약한 최고지도자하의 국정운영 경험을 가졌기에 엘친의 건강위기도 무난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더욱이 엘친 정권내 엘리트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엘친의 병세를 틈탄 특정인물·세력의 권력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政權內에는 체르노미르진(Виктор С. Черномырдин) 총리, 추바이스(Анатолий Б. Чубайс) 대통령부 행정장관, 루시코프(Юрий М. Лужков) 모스크바시장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추바이스(55년생)는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기반없이 엘친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포스트 엘친을 바라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권 내부에서는 체르노미르진과 루시코프의 각축이 점차 표면화될 것이다.

체르노미르진 총리(38년생)는 헌법상 대통령유고시 국정운영권을 이양받아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주관하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²³⁾ 실질적으로도 가스·연료산업의 경제력과 1992

23) 현행법 규정은 대통령 유고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3개월 이내 대

년 12월이래의 총리 경력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1992년 6월이래 모스크바 시장인 루시코프(36년생)는 1996년 6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시장선거에서 약 90%의 득표라는 압도적인 신임으로 재선되었다. 지난 4년간의 시정 경험과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배경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엘친의 후광하에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추바이스와의 관계가 사유화정책을 둘러싸고 극도로 나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체르노미르진과 추바이스 양측으로부터 견제되고, 지방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²⁴⁾

反政權派 중에서는 대통령선거 1차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후 엘친진영에 합류하여 엘친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되었으나 그후 정권에서 축출(10.17)된 레베지(50년생)와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40%의 지지를 얻은 쥘가노프 공산당 당수(44년생)가 여전히 정권과를 위협하는 최대의 정적이 될 것이다.

한편 야블린스키와 지리놉스키 등 여타 대권후보들은 이번 대통

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엘친 유고시 체르노미르진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3개월, 선거관리 6개월 정도, 취임식 1개월 정도를 합하여 모두 약 10여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 만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되면 憲法改正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기 위한 강권을 동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24) 러시아의 7대 재벌그룹은 에너지산업의 가스프롬(Газпром), 루코일(ЛУКОЙЛ), 자동차산업의 압토바스(АвтоВАЗ), 로고바스(ЛогоВАЗ), 금융산업의 오넥심(Онэксим), 메니테프, 모스트(МОСТ) 등인데, 체르노미르진 총리는 가스프롬과 오넥심의 후원을 받고 있고, 루시코프 시장은 모스트와 유착관계에 있다. 정권내에는 압토바스 카단니코프(Владимир В. Каданников) 회장이 경제개혁담당 제1부총리(96.1.25)로, 로고바스 베레조프스키(Борис А. Березовский) 회장이 안보회의 부서기(96.10.29)로 각각 영입되었다.

령선거를 통하여 대권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사실상 거의 상실하여 도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권주자간의 힘겨루기는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노인지배정치의 오랜 경험을 가진 러시아에서는 엘친이 생존하는 한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체르노미르진과 루시코프 등 정권파 내부의 인물이 유리할 것이다. 한편 레베지가 반정권파의 구심점으로서 제3세력을 통합할 수 있다면 강력한 민족주의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물론 유가노프도 사회민주당으로의 변신 등 앞으로의 정책성향에 따라서는 지지기반을 좀더 확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25) 레베지의 득표가 엘친이 만들어 준 것이라면 兎死狗烹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레베지가 안보회의 서기로서 체첸문제 해결에 큰 공이 있었으나, 사면초가의 상황속에서 부통령을 요구하는 등 너무 무리한 권력욕을 내비친 것은 정적들의 협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레베지의 政治的 未成熟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레베지가 자신의 카리스마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최고 정치인이 되려면, 제3세력의 선두주자로서 향후 세련된 정치력(예컨대 제3세력의 통합후보)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강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베지·유가노프 제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레베지의 장래와 관련, 러시아에서 「카리스마의 시대」가 1991년 엘친을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레베지의 정치적 운명도 끝났다는 지적도 있으나, 해임후에도 레베지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Moscow News*, No. 39, October 6, 1996.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은 국가와 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막연한 탈출구로서의 기대감일 것인데, 현재 러시아 사회에서는 危機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메시아적 카리스마의 출현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전사회적·국민적으로 완전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분적인 半카리스마 또는 疑似카리스마가 출현할 수는 있을 것인 바, 지난 대선에서 레베지는 범죄소탕이라는 측면에서의 위기의식을 대변한 半카리스마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6) 러시아 공산당은 유가노프, 샤바노프(Иван М. Шабанов) 부의장, 페시코프(Вяч

앞서 언급하였듯이 작년 총선과 금년 대선을 통하여 검증된 러시아정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中道主義의 승리와 중도파 정당의 몰락이다. 93년 총선의 경우, 급진개혁파와 보수파라는 양 극단이 존재하였기에 중도파 정당이 존재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파와 반정권파 또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정책이 수렴되어 “공산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엘친진영이 집행한다”고 지적될 만큼 모두 중도주의노선을 표방하였고, 그 결과 군소 중도주의 정당은 모두 몰락하고 말았다. 결국 오늘날 러시아 정치인들은 시류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시장체제에 대한 기본적 지향은 대체로 일치하며, 러시아의 국가·민족적 영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구동성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국가이념이 중도주의적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비록 당면하여 권력투쟁의 양상을 포함하여 혼란상을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치의 미래가 급격한 변동없이 점차 안정화되어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еслав П. Пешков) 조직담당서기 등 民族主義派와 쿠프쑈프(Валентин А. Кушов) 부의장, 셀레즈노프 국가두마의장, 마슬류코프(Юрий Д. Маслюков) 전 소련 고스플란 의장, 르이시코프(Николай И. Рыжков) 전 소련총리 등 社會民主主義派, 루키야노프(Анатолий И. Лукьянов) 전 소련최고회의 의장, 전 코무니스트 편집장 코솔라포프(Ричард И. Косолапов) 모스크바대학 교수, 마카쇼프(Альберт М. Макашов) 장군 등 正統派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통파는 소수파로서 작년 1월 당대회에서 결성된 140명의 중앙위원회에 불과 10명정도의 위원만이 선출되고 간부로는 한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족파와 사민파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선이후 러시아공산당의 사민주의화가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르이시코프 전 소련총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러시아인민애국연합」이 창설(8.7)되고 유가노프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社會民主主義로의 指向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 경제

엘친 대통령의 재선은 엘친정권의 정책 성공 때문이 아니라 선거전략의 승리 때문이었으며,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양자택일적 선택앞에서 엘친이라는 次惡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1월경에만 해도 엘친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항상 10% 미만을 기록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저조한 지지율은 엘친의 정책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인데, 그 不滿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농업을 불문한 산업 전반의 생산 저하이다. 구소련시대에 비하여 공업생산은 거의 반으로 저하되었으며, 농업생산도 계속 감소되고 있어 95년도 곡물수확량은 전년대비 8% 감소되어 최근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²⁷⁾ 루블의 달러환율도 5000분의 1로 폭락하였다. 둘째,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конверсия)과 사유화(приватизация) 정책의 불공평이다. 특히 사유화과정에서 초대형 국유기업의 거대한 이권이 구 노멘클라투라와 마피아 등 「검은 부르조아지」(чёрная буржуазия)의 수중에 넘어가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빈발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함께 줌도둑과 강도에서부터 마피아에 이르는 치안불안의 증대이다. 특히 마피아경제는 국민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²⁸⁾ 넷째, 실

27) 柴崎嘉之, “農業荒廢を放置する政府に高まる不信,” 「世界週報」, 1996年 6月 4日, p. 28.

28) 寺谷弘壬, “經濟の40%を牛耳るロシア・マフィア,” 「世界週報」, 1996年 7月 23日, p. 9.

업율의 증대와²⁹⁾ 빈부격차 확대이다. 최부유층 10%와 최빈층 10%의 소득격차가 시장화 개시전의 4.4배에서 94년에는 15배, 95년에는 13.5배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격차가 20배에 이른다고 한다.³⁰⁾ 다섯째, 강력한 소련방과 무료교육 등 무료 사회복지에 대한 향수이다.

이와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엘친이 재집권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한편으로 쥘가노프의 득표가 40.31%에 이르렀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엘친의 경제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향후 經濟政策의 기본 기조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즉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충실을 동시 달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개혁과정에서 소외된 연금생활자 등 3,500만 빈민층의 생활보호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연금인상과 체불임금 지불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사회보장책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93년 총선시의 적색벨트가 96년 대선에서는 서부와 남부국경지대로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유권자들의 반개혁정서가 특히 농업지역에서 강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도농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엘친진영이 쥘가노프를 공산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악령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의 정권 복귀는 러시아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

29) 실업율은 1992년 4.7%, 93년 5.5%, 94년 7.0% 등으로 점차 증대추세에 있다. 통계청, 「러시아 주요경제사회지표」(1995.12), p. 68.

30) 小川和男, “大統領選挙の裏で進む市民の窮乏,” 「世界週報」, 1996年 5月 28日, p. 44.

고 주장하는 등 이번 선거를 공산세력과 민주세력간의 대결로 몰아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러시아 사회내 國論分裂 양상이 빈부격차와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화합을 겨냥한 새로운 정책개발도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시장경제화 정책 추진과 사회주의적 정책고려 사이의 갈등이라는 경제발전모델 또는 경제정책이념과 관련한 개념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財源 확보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의 국가재정은 항상적인 세수부족과 그것의 대외경제관계 수입에 의한 보전, 재정적자의 대외차입과 국내채무(국채 발행) 충당으로 특징지어져 왔다는 점에서 재정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³¹⁾

일반적으로 현재의 러시아경제에 대해서는 悲觀的 展望과 樂觀的 展望이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단기간내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이행기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95년이후 인플레이션의 둔화, GDP와 공업생산 저하율의 둔화, 일부 산업부문에서의 플러스성장 조짐, 루블화의 환율 상승과 통화총량에 점하는 비중 증대, 무역고와 무역흑자 증대 등 몇가지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³²⁾ 막대한 부존자원과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고급인력

31) 音羽周, “ロシア大統領選挙後の經濟政策をめぐって,” 「ロシア東歐經濟速報」, No. 1029, 1996年 7月 25日, p. 2; 러시아聯邦經濟省マクロ經濟豫測局, “大統領選挙後のロシア經濟: マクロ經濟の「安定化」と悪化する財政狀況,”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卷 第7號 (1996年 7月), p. 45.

32) 예컨대 IMF는 러시아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

의 존재를 감안할 때, 러시아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는 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군사

두다예프와 무장집단과의 체첸전쟁을 단기간에 제압하지 못하였던 것에서 나타나듯이, 군사대국 러시아의 군사력은 병력 부족, 주택 부족, 급료 지체, 보급 중단, 무기·장비 횡령, 마약 유흥 등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면서 구소련 해체후 전환기적 혼란속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표 4> 러시아의 국방비 추이

(단위: 10억 루블)

	1992	1993	1994	1995	1996
국가예산(세출)	3,319.3	18,725.1	194,495.3	248,344.3	435,750.0
국방비	715.7	3,115.5	40,626.0	48,577.0	80,185.1
국방비/국가예산	21.6%	16.7%	20.9%	19.6%	18.4%
소비자물가상승율	26.1배	9.4배	3.2배	2.3배	1.3배

*자료: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1 августа 1992г.; 1 июня 1993г.; 6 июля 1994г.; 7 апреля 1995г.; 10 января 1996г. 乾一字, “ホロホロになったロシア軍,” 「世界週報」, 1996年 7月 9日, p. 11.

표하였다. 즉 러시아의 95년 수출액은 790억 달러를 기록하여 94년 662억 달러에 비하여 20% 증가하였고, 외환준비고, 금비축량, 해외자산 등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리는 94년에 비하여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는 197%로 상당히 높으나 94년 337%에 비해서는 크게 안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日本經濟新聞」, 1996年 5月 10日.

군을 약체화시키는 최대의 요인은 國防費의 대폭 삭감이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은 실질 국방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94년 국방예산은 필요량의 46%, 95년은 50%에 불과하였다고 하며,³³⁾ 식량보급의 경우만 해도 95년은 필요량의 76.3%, 96년은 61%에 지나지 않는다.³⁴⁾ 이처럼 부족한 국방비로는 배블리 먹일수도 훈련시키기도 장비를 개량하기도 어렵다. 군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군사기 저하가 불가피한 것이다.

더욱이 그나마 작은 국방비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어, 무기·장비의 조달과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료가 제때 지불되지 못하고 있다. 군인의 특수성으로 부업이 곤란하고 군인의 처가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적당한 일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남편의 급료가 유일한 수입원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장비 횡령 등 각종 오직과 부정부패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³⁵⁾ 이로 인한 일반병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으며, 열악한 보급상태로 인해 병사들의 건강상태는 점차 나빠지고 있다.³⁶⁾

33)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7 января 1996г.

34) «Красная звезда», 19 апреля 1996г.

35) 95년 러시아의 범죄발생율은 94년에 비해 5.6% 증가하고 특히 군에서의 발생율은 30%가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도난은 32%인데 그 대부분이 무기절도라고 한다. 江畑謙介, “「晝餅」に終わる?: ロシアの徴兵制廢止,” 「世界週報」, 1996年 6月 18日, p. 42.

36)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병참담당 당국은 관찰구역내 병력의 반 정도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전체 85%는 조기제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上掲論文, p. 43.

한편 군에 대한 國民의 信賴 低下도 군을 약체화시킨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련군은 혁명의 군대이며 대조국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광의 군대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적어도 고르바초프의 평화·군축노선이 추진된 이래 군삭감이 공론화되자 군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비대한 조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말기 트빌리시와 빌리우스에서의 무력진압과 91년 8월쿠데타 등으로 군대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시작하고, 소련방의 해체와 함께 초강대국의 모습을 잃으면서 냉전패잔병으로서의 자조적 이미지까지 부가되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대륙국가의 특성상 徵兵制를 채택하여 높은 동원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냉전 종식과 함께 우적개념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국방의식이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경제난에 따른 국방비의 삭감으로 군생활이 실제로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기피자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시장경제화에 따른 배금사상의 만연으로 젊은이들은 징병을 기피하고 돈벌이나 각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1993년의 경우 약 7만명이 불법적으로 징병을 기피하였으나, 고등교육의 계속, 가정사정, 예술·교육직 및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징병을 연기·면제하는 자도 많다.³⁷⁾

1994년초 하사관·병의 충족율은 54%로서³⁸⁾ 장교가 많은 병력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교가 경비근무를 하는 것도 다반

37)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5 января 1994г.

38) «Красная звезда», 21 января 1994г.

사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1995년 10월 1일부터 병역기간을 18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충족율을 향상하려 하였으나, 병역기간의 연장은 오히려 징병기피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되었다.

이에 따라 엘친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6년 5월 17일 2000년 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이행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³⁹⁾ 러시아 경제에 가능한 한 적은 부담을 주면서 효율성 높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최신장비를 갖춘 전문가집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병제로의 전환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직전의 선심공세에 불과하다. 군인이 매력적인 직장이 아닌 상황에서 지원병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군인·군속은 180만명, 선거권이 있는 가족·친족은 700만명, 군산복합체 및 군사관계연구·개발 관련근무자와 그 가족 700~900만명, 군관련 연금생활자와 그 가족 2,000~2,100만명, 코작 200만명이다.⁴⁰⁾ 이를 모두 합하면 약 4,00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1억1,000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이 밖에 국내치안군·국경경비군 등의 요원과 그 가족도 1,000~1,500만명에 이른다. 이는 군부의 동태가 러시아 국내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군부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⁴¹⁾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軍事大國인 것이다.

80년대 전반부터 소련군부에서는 양을 중시하는 공업화사회의

39) «Красная звезда», 18 мая 1996г.

40) *Moscow News*, September 5, 1995.

41) 95년 총선의 경우, 의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군인으로 정식 등록한 당선자는 소선거구 8명, 비례구 2명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을 것이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7 января 1996г.

전쟁에서부터 질을 중시하는 정보화사회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으로 전환하는 군사개혁, 더욱이 하이테크장비를 갖춘 현대군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소련방 해체후 러시아군도 이를 계승하여 국경 주변에 펼쳐져 있는 방어부대를 최소한으로 하고 중앙에 위치한 기동군으로 대처 하되 현황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와 같은 전략하에서 2000년을 목표로 하는 軍改革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대폭적인 국방비 삭감, 공업생산의 저하, 정보화시대의 전쟁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많은 보수적 장군들의 존재, CIS 국가와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 분쟁에의 대응 등으로 군개혁의 진전상황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치·경제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군사개혁도 한층 진전될 것이다. 결국 러시아군의 미래는 국내정치 안정화와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강대국 부활을 목표로 한 국내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와 성장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구·추진될 것이다. 전환기적 혼란 속에 있는 러시아 군의 오늘날 모습을 러시아 군사력의 전체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러시아군이 확실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나,⁴²⁾ 外敵에 대한 경우에는 전

42) 군복무환경의 악화, 그라초프(Павел С. Грачёв) 해임과 로디오노프(Игорь Н. Родионов) 신임 국방장관의 감군계획 등으로 인한 군내부 갈등 심화 등을 배경으로 軍部危機說까지 제기되고 있다. 레베지는 봉급체불로 인한 무장폭동 가능성을 경고(《Известия》, 26 сентября 1996г.)하고, 로디오노프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되기 전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10.1)하였다. 그러나 군복무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군내부에서 조직적인

혀 다른 모습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 현재에도 러시아군은 전략 핵무기를 가진 150만 병력의 대군대이며, 위협이 현재화할 경우 또는 침략받았을 경우,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왔듯이 러시아의 군사력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4. CIS 재통합

러시아연방내의 문제는 앞서 논한 연방조약·헌법·권한분할조약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불안소지를 안고 있을 뿐 연방의 장래를 전반적으로 위협할 만한 요소는 현재 없다. 체첸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으나, 설령 체첸전쟁이 계속된다고 하여도 체첸전쟁의 여파가 러시아 정치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쟁초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여타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연방내 민족·지역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러시아의 안보상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러시아내의 민족·지역문제 보다도 구소련내 민족·지역문제, 특히 CIS가 최종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을 것인지 또는 러시아가 구소련의 어느 범위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재차 통합할 것인지 등의 역내 재통합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언론에 보도(«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 сентября 1996г.)되고 있으나, 불만을 결집할 중심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쿠데타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내부문제는 단기간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당분간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혼란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1996년에 들어서 러시아 외교에서의 독자성 추구를 전면에 내건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취임으로 CIS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CIS 국가들이 슈가노프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옐친의 재선전략과 크게 연계되어 있었다.⁴³⁾ 이에 따라 1996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CIS 정상회의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공산당으로부터 비판될 정도로 옐친 지지가 발표되고, 1996년 3월 29일에는 장차의 「통합국가공동체」(Сообщество интегрир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형성을 목표로 한 러시아·벨라루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간의 「경제·인도분야의 통합심화조약」, 1996년 4월 2일에는 러시아·벨라루시간의 「공동체(Сообщество)창설조약」이 각각 체결되었다.⁴⁴⁾ 이로써 CIS 재통합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옐친은 구소련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유권자의 표를 모으는데 성공하

43) 특히 국가두마에서는 96.3.15 공산당의 주도로 소련방 해체결정을 무효화하는 「소련방 국민의 통합촉진과 91.12.12 러시아최고회의 결정의 번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찬성 250, 반대 98)하고, 소련방 존속을 지지한 「소련방 유지 국민투표」(91.3.17)의 법적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채택(찬성 252, 반대 33)하였다. 이에 대해 옐친 행정부는 물론 CIS 국가들이 모두 비난하고 나섰으나, 동 결의안이 소련시대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향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44) 그동안 CIS 재통합과 관련, 軍事分野에서는 집단안보조약을 체결(92.5)한데 이어, 평화유지군 창설(92.7), CIS 집단안보개념 채택(95.2), 공동 국경수비조약 체결(95.5), 단일방공체계 구축협정 가조인(96.3.27) 등 러시아 주도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러 군사예속화 및 러시아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여 큰 진전은 아직 없다. 현재 러시아는 CIS지역내 30여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면서 타지키스탄(15,000명)과 그루지야(3,000명) 등 내전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經濟分野에서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통화통합을 통해 EU형 단일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방침하에 95.5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간 관세동맹이 체결되고 96.3.29 키르기스스탄이 추가 가입하면서 4개국간 「경제·인도분야의 통합심화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였다.

사실상 소련방 해체에 의해 러시아 이외의 CIS 국가와 발트3국에 약 2,500만명의 러시아계 주민을 남겨두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러시아계 주민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안보적 차원에서도 CIS 국가와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⁴⁵⁾ 그러나 이에 대한 CIS 국가들의 입장은 전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소련방 해체 당시처럼 모스크바로부터의 원심력만이 작용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되었으나, 그렇다고 모스크바로의 구심력

45) 예컨대 소련시대인 88년의 경우 소련구성공화국의 역내무역의 총무역에 대한 비율은 러시아 57.8%와 우크라이나 79%를 최저로 그 밖의 공화국들이 모두 80%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소련시대의 계획에 의한 분업체제의 결과였으나, 이것이 소련방 해체와 함께 붕괴되어 이미 각국은 독자적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방 해체이후 이미 5년을 경과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통합의 효용성도 의심받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자신도 서방국가와의 무역에 중점을 두고 경화 획득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경우 CIS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이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井澤正忠, “エリツィン政権の直面する經濟問題,” 『海外事情』, 第44卷 第9號 (1996年 9月), pp. 37~38.

한편 96년 상반기동안 러시아의 CIS 역외교역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으나, CIS 국가와의 교역은 34.9% 증가하여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 CIS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년의 19.3%에서 2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경제』, 제5권 제10호 (1996년 10월), p. 24. 동시에 CIS 역내교역구조에서 러시아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95년의 경우, 국가별로 「대러시아 수출 / 수입」을 나누어 「전체 교역총량에 대한 CIS 교역량의 비율과 그중 러시아의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제르바이잔(40, 45.5 / 34, 38.7), 아르메니아(61, 54.5 / 49, 41.1), 벨라루시(62, 71.3 / 66, 80.6), 그루지야(52, - / 40, -), 카자흐스탄(53, 79.9 / 69, 71.4), 키르기스탄(66, 38.9 / 68, 32.3), 몰도바(63, 77.1 / 68, 48.9), 타지키스탄(34, 37.9 / 60, 28.4), 투르크메니스탄(68, 2.7 / 87, 11.3), 우즈베키스탄(39, 49.5 / 41, 64.3), 우크라이나(52, 83.5 / 63, 81.6) 등이다.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36, сентябрь 1996г. 이는 CIS 경제통합의 유인이 충분하고도 절실하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이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가장 독립지향이 강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은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러시아계 주민의 처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완전분리독립이 불가피하고 모스크바도 이를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러시아와 발트3국 관계에서 최대의 쟁점은 발트3국의 NATO 가입문제일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이 필요불가결한 벨라루시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주도하에 독립을 유보하고 러시아와의 통일된 재정·금융체계 구축과 공동 통화도입 등 통합된 경제·정치체제 창설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가연합에 들어갔다. 그러나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적 경향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지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관세동맹의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민스크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현재 다른 CIS 국가에서 이러한 모델을 추종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우크라이나는 CIS 재통합을 러시아에의 예속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서방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정치·경제·군사 등 현재의 안보난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흑해에서의 NATO 함대연습에 참가하는 등 NATO의 동방확대를 사실상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NATO 참가 용의를 비추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벨라루시와의 통합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이 실패로 끝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재통합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크림야와 동우크라이나의 주민 구성상 러시아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흑해진출 차원에서 러시아가 크림

야와 동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편입을 추진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분열하는 우크라이나의 유고슬라비아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⁴⁶⁾

몰도바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민들은 루마니아와의 통합보다는 독립국가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도바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드니에스트르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반러시아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자카프카지에(закавказье)의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3국은 기본적으로 영토문제가 해결되면 CIS 재통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미국의 개입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있다. 그루지야의 경우, 남오세찌야 자치주와 아브하지야 자치공화국문제로 인해 러시아와 갈등관계에 있다. 러시아는 남오세찌야 문제에 관해서는 그루지야의 영토보전에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아브하지

46) 양국관계의 관건은 흑해함대 분할문제인데, 러시아 하원이 96.10.23 흑해함대 전체가 러시아의 재산임을 규정한 법안을 채택(찬성 334, 반대 1, 기권 4)하는 등 국내에서의 강경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친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관계 긴밀화가 CIS 재통합 및 NATO 확대문제의 핵심이라는 인식과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 경제협력 필요성이 어우러져, 흑해함대 분할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어 양국관계 발전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흑해함대 분할문제는 합정분할과 기지사용문제로 대별되는데, 760여척의 艦艇分割의 경우, 쿠츠마 대통령 취임(94.7) 이후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95.6 전체함정을 50:50으로 나누되 우크라이나 몫에서 대러시아 채무변제용으로 일부를 러시아에 양도하는 식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가 680여척, 우크라이나가 80여척을 운용중이다. 그러나 세바스토폴基地 사용問題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99년 단독조차를 요구한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20년 공동사용을 주장하는 등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왔으나, 최근 쿠츠마의 방러(96.9.28~29, 10.24~25) 결과, 러시아의 20년 단독조차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합의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야에 대해서는 흑해진출 차원에서 1992년 독립을 방조하고 그후에도 군사적 원조와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여 왔다. 앞으로 그루지아가 아브하지야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 경우 아브하지야를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아브하지야를 지원할 것이므로 그루지아의 유고슬라비아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석유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으로 모스크바의 의향을 무시하는 정책을 취하여 外國境(구소련 국경)에 대해서도 자카프카지예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 국경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문제에서 아르메니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은 모스크바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아브하지야와 달리 전략적 중요성도 크지 않고 러시아계 주민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부담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옹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아르메니야의 경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모스크바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최근 미국이 적극적인 후견과 원조를 제의하고 있어 러시아가 전면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의 통합이 득책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관세동맹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中央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러시아·벨라루시와 함께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러시아국경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있지만, 벨라루시형의 통합에는 명확히 반발하고 있다. 독립지향이

강한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간 역내 자유경제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가 관세동맹국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을 간접적으로 얻으려 하고 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러시아에게 안전보장상으로는 중요하나 경제적으로는 부담이며, 지리눅스키와 같은 강경한 남진론자 이외에는 통합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내정세의 혼란이 변수가 될 것이나 지금까지 사실상 CIS의 존재를 무시하고 쌍무관계 중심으로 CIS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 CIS 재통합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일본의 러시아연구자 아끼노·유타까 쓰쿠바대학 교수는 최근 CIS 재통합문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제1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으나 제1시나리오에서 제2, 제3시나리오에로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⁴⁷⁾

제1시나리오는 兩極分化 시나리오이다. 러시아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과의 배타적 관세동맹을 축으로 정치·경제의 통합을 급진전하고, 아르메니아도 운명을 결국 러시아와 함께 하며,

47) 秋野豊, “ブリマコフ外交を評價する,” 『海外事情』, 第44卷 第9號 (1996年 9月), p. 13. 한편 아끼노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CIS 재통합의 핵심관건임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재통합에 실패하면, 첫째, 발칸과 중부유럽에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상실하고, 특히 몰도바 유지가 매우 곤란하게 된다. 둘째, 러시아의 흑해 진출구가 소치 주변의 일부 지역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그루지야를 예측화하거나 아브하지야를 편입할 수밖에 없다. 셋째, 슬라브민족으로서의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 上掲論文, p. 10.

타지키스탄도 러시아의 비호를 받는다. 한편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은 독립노선을 강화한다.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 등의 협력으로 카스피해와 흑해에 걸친 러시아 대항의 친서방 횡축이 형성되고, 이것이 러시아·아르메니아·이란의 친러시아 종축과 충돌한다. 우크라이나의 오데сса가 횡축의 서단인 그루지야의 포찌와 연계되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으로서의 기반이 강화되고, 이로써 역내 양극분화가 고정된다.

제2시나리오는 EU형 시나리오이다. CIS의 틀을 보존하는 형태로 경제 중심의 통합이 진행되고, 발트3국도 이와 연계된다. 러시아가 역내 에너지자원 독점을 단념하고 국제메이저와 협력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양보를 얻고 다른 CIS 국가보다는 신중하지만 러시아 중심의 통합움직임을 수용한다.

제3시나리오는 모자이크형 시나리오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NATO간의 완충지대로 되고, 몰도바도 루마니아와 통합하지 않고 발칸지역에서 러시아의 교량으로 된다.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터키·러시아 간의 중개자로 된다. 타지키스탄도 자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종료 후 서서히 러시아의 전진기지 역할에서 탈피하여 러시아와 페르샤어권 지역과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로 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과의 완충지대로 된다. 구소련 각국이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자의 근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4시나리오는 유고형 시나리오이다. 러시아의 민족주의·대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병합하고, 러시아·벨라루스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방이 형성·확대된다. 大 러시아 또는 小소련 시나리오이다.

향후 구소련지역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현재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IS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질서가 매우 불안정하며 내부의 역동성으로 인해 새로운 질서 창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95년 총선과 96년 대선 결과로서 나타났듯이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강대국 부활을 지향하면서 적어도 CIS 재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화될 것이고, 동시에 적지않은 역내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새로이 형성될 구소련지역내 국제관계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넓은 지역을 포괄할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보다는 결속력이 강한 형태의 통합조직을 보일 것이다.⁴⁸⁾ 이에 따라 결국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여타 지역문제에서도 러시아의 발언권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48) 구소련은 Союз(연방)이었으나, 소련방 해체후 등장한 CIS는 일반적으로 「독립국가연합」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상 국가간의 막연한 友好聯合을 의미하는 Содружество이다. 최근의 「러시아·벨라루시 공동체」는 Сообщество로서 社會的 結合 또는 共同社會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Содружество 보다는 결속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

1. 러시아 외교의 일반방향

1995년 12월 총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고 1996년 1월 서구파의 대표 코지레프(Андрей В. Козырев) 외무장관이 경질되고 국익중시 주의자 프리마코프(Евгений М. Примаков)가 임명(1.9)되는 등 러시아 외교의 국내적 환경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외교는 보다 국익중시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 외교의 國益重視傾向은 이미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서 최근의 정세변화에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러시아 외교의 일반적인 추세는 구소련 해체이후의 변화된 외교환경하에서 대서양주의와 유라시아주의간의 논쟁을 거쳐 적어도 1992년 12월 러시아 외무부의 「외교정책문서」가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외교환경의 변화에 조용하면서 국익중시노선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변영과 러시아 민족의 이익 담보를 위한 근위 중심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획득외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⁴⁹⁾ 여기에 국익중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強大國 外交 또는 全方位的 勢力均衡外交의 모습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위중심정책은 형식적으로

49)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방향에 대해서는 姜元植, “러시아의 外交環境變化에 따른 새로운 外交政策方向” 『中蘇研究』, 제17권 제4호 (1993/4년 겨울), pp. 91~121 참조. 이 논문에서 필자는 러시아외교의 일반방향으로서 근위 중심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획득외교를 제시하였다.

외교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정책이나 유럽·아시아 등 지역정책과는 달리 특수한 정책범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정책적 차원으로까지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외교정책의 원칙과 수단이 근외정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컨대 외교원칙으로서 비동맹을 강조하지만 근외지역에서는 예외이다. 따라서 러시아 외교의 일반적인 방향을 논하는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즉 러시아 외교의 일반방향으로 전방위 강대국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획득외교는 러시아의 세계정책 및 지역정책속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투영되고 있으나, 근외중심외교는 근외지역정책에 국한되는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타 방향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다만 외교정책추진의 핵심기조로서 여타 어떠한 지역보다 근외지역 정책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1996년 6월 엘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표한 安保敎書를 중심으로 러시아 안보정책의 일반방향을 살펴본 후, 러시아 외교의 특징을 전방위 강대국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외교로 대별하여 검토하여 본다.

가. 러시아 안보정책의 일반 기조

러시아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한 교서를 발표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안보교서가 발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1996년 6월 엘친 대통령은 처음으로 1996~2000년간의 국가안보에 대한 교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교서는 러시아의 국내외 안보환경

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전망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⁵⁰⁾

우선 안보교서는 러시아가 국가규모, 경제·인구·지적 잠재력, 유라시아대륙에서의 독특한 전략적 위치, 부존자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 전략핵무기 보유 등 군사·기술력을 감안할 때, 強大國임을 지적하면서 강대국에 상응하는 국내외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長期的 國家利害는 세계사회에서의 자기정체성(самобытность) 유지, 국가안보와 주권 확보, 사회·경제발전에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국민 번영, 영토 보호·건설, 국민문화 보존·발전이라는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는 시민사회, 법치국가, 시장경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96~2000년간 러시아의 國內的 利害는 개인·사회·국가의 발전, 헌법구조 강화, 경제위기 극복, 영토적 통일성 확보에 있다. 國外的 利害는 전지구적 수준에서 러시아가 역사적·정치적·경제적·지적 중요성과 군사정치적·대외경제적 잠재력과 수요에 상응하게 자리매김하면서 국제관계체제 건설을 위해 활동적이고도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지역협력메카니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확보하고 세계무대에서의 군사정치적·경제적 위치를 증진·강화하는 것이며, 하부지역 수준에서는 신생독립국과

50) 1996~2000년간 국가안보에 관한 엘친 대통령의 교서는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г.에 게재되었으며, 안현수 역,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p. 336~352에 완역되어 있다.

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이들과의 통합과정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안보교서가 러시아 안보에 대한 主要 威脅要素로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적인 국내적 도전은 민주적 권력 및 행정기관 구조의 미비 및 불안정, 지역분리주의와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대외적 위협은 政治分野에서는 러시아의 국가주권 및 영토적 통일성을 파괴하려는 국가 및 국가연합의 활동, 주요 국제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 또는 역할저해 기도, 구소련과 중·동유럽국가 및 기타 러시아의 국가이해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통적인 협력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러시아어 사용주민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권리·자유 침해 및 이로 인한 유민 발생 등의 국제분규, 러시아에 대한 기존·잠재적 영토주장, 러시아가 참여하는 지역적·세계적 안보 체제의 부재 등이다. 經濟分野에서는 러시아의 막대한 외채, 일련의 해외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진출 제한, 지적 재산권 및 숙련기술자의 해외 유출, 외화 및 전략적 원료물질·상품의 해외유출 및 그 수입의 비효율적 사용과 범죄적 이용, 구조적으로 왜곡된 상품 유통의 조장 및 국내 기계생산기반의 파괴, 러시아의 수출지원 및 수입구조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재정적·조직적·정보적 하부구조의 미발달 등이다. 軍事分野에서는 지역분쟁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시도, 국제테러리즘의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의 극단적 정치집단과의 연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최신 군사 기술의 확산과 폭력국가·조직·테러집단의 군사·정치적 목적의 실현 시도, 러시아 인접국가에서의 강력한 부대조직 설립 가능성 및 군

사력 증강, 해외주둔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이다. 環境分野에서는 러시아 영토를 방사능물질과 독성화학물질 및 기타 환경에 극히 유해한 물질의 매립장소로 이용하고 유해생산시설을 러시아에 배치하려는 기도, 인접국에서 발생한 생태학적 재앙이 러시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서는 러시아의 國家安保課題 및 政策方向으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외분야에서는 CIS 국가들과의 「선린호혜관계」(добрососедско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е) 설정, 서유럽국가들과의 「안정적·현실적 동반자관계」(стабильное реалист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유지·강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럽국가가 참여하는 전유럽안보메카니즘 마련 및 경제·정치·군사적 유럽통합구조에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 아·태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조직과의 완전한 통합 추구,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ёрство) 발전,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노력 활성화,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관계」(равноправное партнёрство) 유지, 중근동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중재자적 역할 강화 등이다. 그리고 군사분야에서는 지역적·세계적 국제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군사위협을 관리하고, 현실적 억지원칙에 따라 전략·전역·전술핵 및 충분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 정책의 효력을 뒷받침하되, CIS 국가들에의 핵보장 제공, 미국과 양자주의 원칙에 따른 전략핵무기 균형 유지와 핵무기감축 지속, 방위충분성 원칙(принцип оборонной достаточности)에 따른 재래식무기·병력의 감축, 종합군사개혁 추진 등이다.

나. 전방위 강대국외교

1995년도 엘친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강대국지위 회복과 국익확보를 외교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설정(95.2.16)하였는데, 프리마코프 외무장관도 취임후 첫 기자회견(96.1.12)에서 러시아의 민족적·국가적 이익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強大國外交를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프리마코프는 「이즈베스찌야」와의 인터뷰(3.6)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회복과 서방과의 「대등한 동반자관계」 정립을 주장하였는데,⁵¹⁾ 이는 “냉전종식 이후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된 상황에서 러시아도 다극체제내 하나의 극으로서 어느 한 나라(미국을 지칭)의 세계질서 주도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⁵²⁾

이와 같은 「강대국외교」에 대한 요구는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친서방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구소련시대의 독자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요구와 결부되어 있다. 1992년말 당시만해도 “러시아에 잠재 적국은 없다” 그러나 “CIS

51) 프리마코프는 여기에서 과거의 대결과 냉전으로의 회귀를 방지하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러시아의 對外政策 基調라고 지적하면서, 서방과의 대등한 협력을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상호협의를, 합의전 행동 및 기결정사항의 사후통보 지양, 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의 사전통보, 합의사항 준수, 합의실패시 상호 수용할 만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등의 기본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Известия》, 6 марта 1996г.

52) 프리마코프의 인터뷰, 《Труд》, 26 июня 1996г. 엘친 대통령의 1996년도 안보교서에서는 미국의 對러시아 二重性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편으로 세계정치·경제에서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담당하는 충분히 결속된 세력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г.; 안현수 역,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p. 338.

형제국가들은 적과 조우하고 있다”는 안전보장관을 바탕으로 남부 방면의 이슬람원리주의 정도를 경계하고 있었으나, 이슬람원리주의로부터의 위협이 타지키스탄 정도로 한정되고 동유럽 및 CIS 국가의 NATO 가입과 그에 따른 NATO군의 동방확대문제가 부각되자 서방이 위협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국 문제는 “러시아에게 간접적이거나 적은 존재하는가”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CIS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의 배타적 세력권에 있는가”의 물음과 직결되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면 “러시아에게 적이 있다”로 되고, 반대로 아니라면 “러시아에게 적은 없다”는 것으로 된다. 결국 최근 러시아는 NATO 확대를 구조적 위협문제로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에게 적은 있다”는 인식이 올바른 것으로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정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⁵³⁾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독일과 일본처럼 「패배한 초강대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⁵⁴⁾ 이에 따라 세계

53) 이와 같은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변화는 과정론적으로 서방의 러시아 경계 즉 NATO 확대에 자극받아 러시아가 서방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러시아와 서방간에는 융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방의 카톨릭·기독교문명권과 동방의 슬라브·그리스정교문명권 간의 상합할 수 없는 이질성을 논하고 있는 헌팅톤의 文明論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1996년도 엘친의 안보교서에서도 현단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공격 위협은 감소하고 있으나, 잠재적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г.; 안현수 역,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p. 342.

54) Dimitri Simes, “The Return of Russian History,” *Foreign Affairs*, Vol. 73, No. 1 (January/February 1994) 참조.

문제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다. 결국 러시아의 강대국외교는 이에 대한 반발인 것이며, 체르노미르진 총리가 G-7 정상회의(96.6.27~29 리용)에서 G-7의 G-8 전환과 러시아의 세계 무역기구(WTO)와 APEC 가입 수용을 촉구하면서, 러시아도 강대국이므로 서방 선진국과 대등한 협력자로 취급해 줄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전방위외교」(многосторонняя дипломатия)란 70년대 후반 이래 중국외교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국가와 모든 부문에서의 관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국제질서에서 미국의 균형자·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전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대를 세분하여 지역수준에서 또는 현안수준에서 미국의 돌출을 저지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이 「강대국외교」라면, 중국·일본·독일 등 강대국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와 모든 부문에서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강대국들과의 대립·갈등소지를 줄여 견제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지원을 확보하여 국력신장에 매진하려는 것이 「전방위외교」이다. 등거리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вноприближённости)⁵⁵⁾ 통한 세력균형정책인 것이다.

필자는 패권이후의 국제질서를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로 명명하고, 균형자·조정자로서 미국이 最上端에 있고, 러시아·중국·일

55) 본래 「등거리」는 러시아어에서 equi-distance를 의미하는 равноотстоящий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equi-proximity를 의미하는 равноприближённый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거리개념에서 친숙도 개념으로 바뀐 것인데, 모든 국가들과의 우호·협조를 상징한 등거리외교를 시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독일 등 강대국이 上層部에 위치하고, 체제유지 비용분담에 참여하는 중·선진국들이 中間部,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下層部를 구성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제시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국제협조와 새로운 패권 창출을 위한 대립과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논술한 바 있다.⁵⁶⁾ 러시아의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 하에서 국력신장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러시아는 유럽내 지역구조에서 중간부 또는 하층부에 위치하는 근외지역을 국력신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외중심외교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추진의 방법에 있어서는 OSCE 등이 직접 근외지역에 개입하는데 반대하는 한편, 유엔과 OSCE가 CIS 내부의 안전보장자로서 러시아를 인정하여 역내 문제해결을 러시아에게 위임하고, 따라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통합군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유지비용은 유엔과 OSCE 회원국 및 CIS 국가들에 의해 분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NATO 확대문제와 군축문제 및 지역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1) NATO 확대문제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해체(91.7) 이후의 안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비셰그라드(вышеградская группа)

56) 姜元植,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中蘇研究』, 제19권 제3호 (1995년 가을), pp. 15~46 참조.

3국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은 NATO 가입을 추진하였고, NATO는 동유럽국가의 가입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NATO군을 배치함으로써 유럽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하에 우선 동유럽 및 CIS 국가를 포함하여 「평화동반자계획」(Partnership for Peace)을 추진(94.1)하고, NATO 확대전담그룹을 발족(94.12)시킨데 이어, 동유럽국가의 가입조건 및 NATO에의 기여범위 등을 담은 동유럽 확대보고서를 발표(95.9)하였다.⁵⁷⁾ 현재 러시아(95.5)를 포함하여 CIS 및 동유럽국가 총 27개국이 PFP 기본문서(Framework Document)에 서명하고 PKO 활동에도 협력하고 있으나, NATO 가입 실현은 러시아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다.

즉 러시아는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가 NATO, 동유럽, CIS를 망라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정점으로 과거 NATO와 구 WTO간 협력을 위해 창설(91.12)된 북대서양협력이사회(NACC)의 조정하에 NATO와 러시아·CIS가 동유럽안보를 공동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ATO가 동서대립 개념을 유지한 채 자국 접경으로 군사력을 팽창하는 것을 자국 안보에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동유럽국가의 PFP 참여 및 NATO의 정치구조 가입 등 NATO와의 정치안보협력은 가능하나, NATO 군사조직 참여와 NATO의 구소련 국경외곽지역내 핵무기 배치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⁵⁸⁾

57) NATO에의 신규 가입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신규회원국의 안보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8) 현재 진행되고 있는 NATO·동유럽간 군사협력은 합동군사훈련과 평화유지 활동으로 대별되는데, 合同軍事訓練과 관련, 94.4 NATO 이사회 산하에 NATO와 PFP 참여국간 군사교류 및 합동군사훈련계획 등을 수립·조정하는 협의·통제기구(Partnership Coordination Cell)가 설치되고, NATO 유럽연합

이에 대해 NATO는 95년 12월 각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발전과 병행하여 NATO 확대를 진전시키기 위해 확대계획을 당분간 유보시키고, 97년 1월부터 NATO 가입희망국의 가입신청을 개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문제는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유럽의 질서재편을 결정짓는 중대변수로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하여 NATO·러시아간 연락사무실 개설과 NATO 운영방식에 대한 러시아의 일정한 영향력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NATO와 러시아측 간의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동유럽지역의 NATO 가입문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립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는 러시아의 반발 뿐만 아니라 가입희망국인 동유럽·CIS국가들의 입장도 상이하고, 더욱이 NATO 자체의 입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⁵⁹⁾

군 총사령부(ACE) 주관하에 NATO 6개국과 구소련·동유럽 7개국이 폴란드에서 최초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94.9)한 이래, 96.8.12~30간 미국에서 총 19개국이 참가한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등 다자적·쌍무적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平和維持活動과 관련, 보스니아 평화협정(95.12)에 의거, NATO 16개 회원국은 물론 러시아·폴란드·체코 등 구소련·동유럽 비회원 16개국이 포함된 총 32개국 6만여명의 평화이행군(IFOR)이 96.1~12간 평화유지활동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59) 타협방안과 관련, 엘친은 프랑스의 전례를 따라 동유럽이 NATO 군사조직에는 불참하고 정치협의에만 참여할 것을 제의(96.3.25)했고, 바투린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은 구소련 국경외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NATO 확대 반대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4.18)하였다. 이에 따라 NATO·러시아 특별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타협 내용도 조정되기 쉽지 않다. 예컨대

(2) 군축문제

STARTⅡ와 CFE 등 기존 군축합의 이행에 대한 러시아의 소극적인 반응도 기본적으로 NATO 확대 반대와 동일한 안전보장상의 위기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략무기 감축에서 자국 핵전력의 중추인 SS-18등 다탄두 ICBM은 대폭 감축하고 미국이 우위인 SLBM 및 전략폭격기는 소폭 감축함으로써 러시아의 전력 약화가 초래되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으며,⁶⁰⁾ 이에 따라 러시아 의회는 1993년 1월 러·미 간에 체결된 STARTⅡ의 전략핵무기 보유상한선 조정을 주장하면서 비준을 연기(91.7 체결된 START I은 94.12 비준)하여 왔다. 결국 STARTⅡ 수준으로 전략무기를 감축할 경우 러시아가 이류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는 지리놉스키의 발언(96.1.29)처럼 러시아의 안보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마코프는 NATO의 핵무기와 군사력 배치 등 민감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장을 견지(10.10)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국가들의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0년내 NATO 가입 실현을 희망하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헝가리는 조기 가입을 희망하면서도 러시아의 안보이해를 고려하고 있고, 체코는 자국의 조기가입과 역내국가들의 단계적 가입을 주장하며, 루마니아는 역내국가들의 일괄가입, 그리고 불가리아는 가입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NATO 확대 찬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전망에 대해서는 양현수, “러시아와 동구의 안보관계: 동구의 나토가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술라브학회 제11차 학술대회(1996.11.8~9) 발표논문 참조.

- 60) 러시아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96.10.16~18 페리 미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시 STARTⅡ 비준 요구에 대해 오히려 STARTⅢ 협상 조기개최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STARTⅡ 비준후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자고 대응하였는데, 러시아의 STARTⅢ 협상요구는 대미 핵균형을 위한 러시아의 신규미사일 개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Washington Post*, October 16, 1996.

따라서 미국의 비준 요구(미국에서는 96.1.26 상원 비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의회는 STARTⅡ 비준을 NATO의 동방확대문제와 연계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본토방공망(NMD) 추진에 따른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 위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NATO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동유럽의 NATO 가입과 NATO 핵미사일의 동진 배치는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⁶¹⁾ 이 때문에 전략핵무기 감축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CFE)에 대해서도 조정을 요구하였는데, NATO와 구 WTO 구성 23개국 90.11 체결한 CFE는 구 WTO측에 불리한 삭감을 요구하는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카프카지에 분쟁을 고려하여 러시아측 무기배치 상한선의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NATO측은 동 조약의 수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에 반대해 오다가 마침내 96.6.1 CFE 이행검토회의에서 러시아측 군장비 삭감기한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합의하였다.⁶²⁾

61) 프리마코프 인터뷰, «Известия», 6 марта 1996г. 이와 관련, NATO 확대가 유럽의 핵긴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리네프스키(Олег А. Гриневский) 스웨덴주재 러시아대사(96.11.19)와 로지오노프(Игорь Н. Родионов) 국방장관의 발언(96.11.28)이 그것이다. 즉 NATO 확대는 유럽 방위구조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는 결국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힐 것인 바, 이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자연히 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NATO 확대는 동유럽을 겨냥한 러시아의 핵무기 배치 등 유럽의 새로운 핵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8 ноября 1996г.

62) 江畑謙介, “CFE削減に悪しき前例生んだチェチェン紛争,” 「世界週報」, 1996年 9月 17日, pp. 38~39.

한편 化學武器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화학무기 보유량을 2002년 까지 5,000톤으로 감축하는 미·러 화학무기 폐기협정(90.6)에 따라 구소련 당시 12만톤에 달하던 화학무기를 약 4만톤으로 감축(92.12)하고, 화학무기 전폐를 목표로 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서명(93.1)하였으나, 최근 예산부족으로 화학무기 폐기협정의 이행이 중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의 반발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의 군축조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서방과의 안전보장문제 재평가에 따른 위기 의식을 배경으로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핵·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표면적으로는 군축조약 이행문제를 NATO 확대와 연계시키고 지연 이유로서 조약내용상의 불평등성, 예산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즉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동시에 군축문제를 대응카드로 활용하여 재원을 획득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문제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문제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강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발하면서까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동중시외교는 1995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역내 독자적인 집단안보체제 도입을 제안(95.8 코지레프 외무장관

의 쿠웨이트 방문시)하는 등 중동 평화정착과정 주도를 모색하고, 이란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95.12 다비도프 부총리의 이란 방문시)하였다. 그후 1996년초 아랍어를 아는 중동전문가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동외교가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스스로 순방외교를 전개하고 각국 정상과의 전화외교도 빈번히 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등 유럽세력과의 협력을 표면화하여 미국의 독무대화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핵확산 우려에 따른 미국의 대이란 원전건설사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을 강행하고 유전개발 회사 및 화력발전소 합작건설사업 추진에 합의(96.2.9)하였다.

유엔의 이라크·리비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대이라크 금수조치 해제 결의안을 중국·프랑스와 공동으로 제출(95.3)하고, 유엔제재 해제시 시행을 조건으로 이라크의 알 쿠르나 유전 공동개발협력협정(95.7)과 발전소건설이행협정(96.2.7)을 체결하였다. 또한 리비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유엔의 대리비아 제재조치로 러시아가 지난 4년간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리비아와의 경험관계를 재개할 것임을 천명(96.3.29 다비도프 부총리)하였으며, 엘친은 카다피 대통령에게 유엔의 부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리비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친서를 전달(96.3.24)하였다. 러시아는 리비아와 철도·화력발전소·송전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추진에 합의(96.3.26)하였다.

한편 1996년 9월 3~4일간의 미국의 대이라크 크루즈미사일 공

격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이 유엔중심의 세계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선례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중시정책은 앞서 논한 것처럼 전방위 강대국외교의 관점에서 지역수준에서 미국의 돌출을 견제함으로써 러시아의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에 기초한 것이나, 이와 동시에 경화결제가 가능한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건설부문에서의 수출 확대와 이라크(70억 달러), 리비아(20억 달러) 등에 대한 채권회수를 통해 경제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이외에도 러시아는 보스니아, 쿠바 등지에서도 미국과의 국익충돌을 보이고 있는데, 보스니아사태와 관련, 러시아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유엔평화협정 이행 등 경제제재 해제요건을 충족시켰다면 제재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96.2.23)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권문제로 미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쿠바문제와 관련, 미국이 쿠바의 미국 민항기 격추(96.2.24)에 대한 보복으로 대쿠바 경제제재 강화법을 제정(3.12)하자, 러시아는 이 법이 자국의 이해와 국제법정신에 상치한다고 비난(3.4)하고, 쿠바와의 관계발전을 위해 경제봉쇄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3.13)하였다. 그 후 러시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바 내 원전건설공사(7억5천만 달러) 재개, 쿠바통신·정보산업 현대화 지원 등 양국간 경제협력 재개방안에 합의(5.21~23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쿠바 방문)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동북아지역을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인도와

ASEAN에 대한 외교정책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지레프가 장관재임기간(90.10~96.1)동안 한번도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프리마코프는 취임후 즉시 방문(3.30~31)하여 문화교류협정, 과학아카데미협력협정, 정상간 직통전화개설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인도 접근은 막대한 무기시장으로서의 인도의 경제적 중요성과 대중양아시아 정책에서의 연대 필요성이라는 단기적·현실적 측면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도의 강대국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고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EAN에 대한 적극외교는 이 지역이 러시아제 무기의 잠재적 수출시장이라는 경제적 고려가 일차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아·태 경제협력에서 차지하는 ASEAN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지역과의 관계강화가 긴요하다는 인식과 역내 미·중·일간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틈새를 파고들으로써 러시아가 역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아·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형성 대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가(93.7)하고, 아·태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정치안보협력체인 아세안 지역포럼(ARF)에 게스트로 참가(94.7)한데 이어 전면대화상대국(96.7.8)으로 되었다.

지역수준에서의 이상과 같은 적극외교는 균형자·조정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미처 손쓰지 못하고 있는 또는 갈등을 보이고 있는 틈새를 파고드는 低費用의 외교정책 수행인데⁶³⁾ 이와 같은 「저비용의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장

기적으로 모스크바에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무기수출외교

러시아의 무기수출외교는 군수산업 전환과정의 문제점 해결, 외화가득, 군부의 불만해소 등 다양한 정치·경제·외교·군사·사회적 효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즉 러시아의 무기수출 확대노력은 천연자원 수출과 함께 러시아의 주요 외화가득원인 첨단무기 및 기술 수출을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한 필요재원을 마련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군수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무기수출 및 기술판매 등 군사협력을 통해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⁴⁾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세계무기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면서 1991년까지 연평균 14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여 왔다. 그러다가 구소련 해체후 격감하여 92년 23억 달러, 93년 25억 달러, 94년 17억 달러, 95년 27억 달러로 되었으나, 최근 차지노비(Зиновий П. Пак) 방위산업부 장관은 2000년까지 무기수출액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5.13)하고 적극적인 무기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1996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3)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에 대해 전면적 핵실험조약에의 참가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러시아가 국제여론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으로서 「저비용의 전방위 강대국외교」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64) 무기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沈敬旭, “러시아 무기수출정책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연구』, 제1권 제1호 (1994 창간호), pp. 176~195 참조.

우선 엘친 정부는 무기수출 증대를 위한 制度를 정비하고 있는데, 대외군사협력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과 집행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95.1)된 군사기술정책국가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의 업무를 대외경제관계부로 통합(96.8.14)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국영무기수출회사 「로스보오루제니에」(Росвооружение, 94.2.19 설치)가 대외무기수출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방산업계 조업률이 급락하면서 시장개척을 위해 군수업체에 계약체결권을 직접 부여하였다. 이로써 MIG-29 생산업체인 MIG-МАРО에 독자적 무기수출 계약체결 권한을 허용(95.7)한데 이어, 이를 다시 5개사로 확대(96.2.28)하였고, 1997년까지 10여개의 무기생산회사로 수출창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방위산업국가위원회(Госкомоборонпром)의 방위산업부로의 승격(96.5.8)과 함께 정부투자·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저변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NATO 가맹국 등에서의 무기수출도 추진하는 등 輸出對象地域의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에 SU-27 전투기를 92년 26대, 96년 4월과 8월 각 11대 수출한데 이어 2000년까지 24대를 추가판매 계획으로 있으며, 인도에는 MIG-29 전투기 30기를 판매(92.11)한데 이어 18억 달러상당의 SU-30 전투기 40대 판매계약을 체결(96.10)하는 등 2000년까지 총 70~8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S-300 요격미사일, MIG-29 및 SU-27 전투기, T-80U 전차 등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란에 2011년

까지 유효한 60~70억 달러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라크에 대해서도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해제시 시행조건으로 탱크 4,000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쿠웨이트에는 BMP-3 장갑차를 판매하고, 이스라엘과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 수출용 무기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KA-62 공격용 헬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NATO 가맹국으로서는 최초로 터키에 헬기, BTR-80 장갑차 등 3억 달러 규모의 무기수출을 추진중이고, 핀란드에는 러시아 국내에도 실전배치되지 않는 최신미사일 방공체제인 BUK-M1과 부품을 96년중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의 무기수출외교는 러시아의 정책추진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러시아제 무기가 우수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기수입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꾸준히 증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도국간 군비경쟁 및 지역분쟁 촉발 가능성 및 국제무기시장 선점을 위한 군사기술 선진국간의 마찰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 경제지원획득외교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여건 조성이라는 국내경제적 필요에 따라 경제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 즉 러시아는 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서방의 경제지원이나 투자유치 촉진에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가 친서방노선에서 탈피하여 국익중시의 독자노선으로 전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은 필요불가결하다. 특히 엘친은 1996년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중 채불임금 지불과 연금 인상 등 다양한 경제공약을 남발하였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통화를 증발하거나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지원획득외교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⁶⁵⁾ 이는 친서방외교가 아니라 국익중시 차원에서 「서방협조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 러시아는, 대미관계에서 지역별·현안별로 미국과의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對美 協調外交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96년의 경우 양국의 대통령선거 필요성에 따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지원면에서의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⁶⁶⁾ 특히 미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IMF는 인플레이션 억제, 성장 촉진, 노동통제 강화, 자유시장경제 추진 등을 조건으로 향후 3년간 102억 달러 차관을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결정(96.2.22)하였다.

한편 유럽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가 러시아의 가입을 승인(96.1.25)하여 러시아가 39번째 회원국이 되는데 이어, EU·러시아 잠정무역협정이 발효(2.1, 95.7 체결)됨으로써 EU의 러시아시장 진출 확대기회

65) 야신(Евгений Г. Ясин) 경제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앞으로 15년간 경제구조 개혁에 9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3~4천억 달러의 외자 도입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한다.

66) 미국은 96.8.8 자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22개 대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및 보험 제공을 위해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에 6억2,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등 대러시아 경제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가 제공되었다. EU 주도하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러시아·동유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자본금을 100억 ECU에서 200억 ECU로 증액하기로 합의(4.16)하였다.⁶⁷⁾ 파리클럽(18개 서방선진국 채권국협의체)은 400억 달러의 공공채무를 6년 거치 14년 분할조건으로 상환한다는 합의안에 최종 조인(96.4.29)하였으며, 런던클럽(서방 민간채권은행단)은 원금을 7년 거치 18년 분할하고 이자를 7년 거치 13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9.13)하고 연내 최종합의를 조인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대러시아 투자감소의 한 요인이었던 양대 클럽과의 협상이 5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됨에 따라 대러시아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⁶⁸⁾

특히 獨逸과의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통독과정에서 독일을 적극 지원하고 독일내 러시아군 철수문제도 원만히 타결하여 예정보다 앞서 철수를 완료(94.8)하는 등 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독일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투자를 계속함으로써 러·독 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양국간 정상외교가 매우 활발하여 소련방 해체후 엘친이 2차례 독일을 방문(92.7, 94.5)하고, 콜 총리는 7차례 러시아를 방문(92.12, 93.3, 93.7, 95.5, 95.9, 96.2, 96.9)하여 콜 총리는 엘친의 가장 가까운 서방지도

67) 러시아는 95년말 현재 17억1,700만 ECU를 지원받음으로써 최대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1ECU=1.25달러.

68) 러시아의 외채는 96.1.1 현재 1,204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채무 1,030억 달러, 92년 이후 새로이 차용한 러시아 채무 174억 달러로 나누어진다. 구소련채무는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400억 달러를 포함한 공공채무 626억 달러, 런던클럽에 대한 민간채무 255억 달러,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에 대한 채무 149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러시아는 신규외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상환하고 있으나, 구소련 승계외채에 대해서는 경제난을 이유로 서방 채권단의 채무상환일정 재조정을 계속 요구하여 왔다. 「지역경제」, 제5권 제10호 (1996년 10월), pp. 23~24.

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시장경제체제 편입을 위해 최대원조국인 독일의 지원이 불가결한 상황이고, 독일도 통일이후 안정적 주변환경 조성과 에너지자원 장기 확보 및 독자적인 대러시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⁶⁹⁾

한편 러시아는 OECD, WTO, APEC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경제지원 획득 및 경제협력 여지를 모색하고 있다. OECD는 러·OECD 협력협정(94.6)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산하단체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96.1 현재 11개 산하단체에 옵서버 참여)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산하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95.5)하면서 OECD 초기가입 추진방침을 공식 표명하고, 1996년 5월 21일 OECD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다. WTO의 경우, 러시아는 가입 신청(94.12) 이후 수출할당과 면허제를 폐지(95.1)하고 수출관세율을 품목별로 수시 인하하는 등 WTO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WTO 내에 러시아가입문제 검토 실무작업반이 가동중에 있다. APEC의 경우, 러시아는 가입을 공식 신청(95.3)한 후 신규회원 가입 동결시한(96.11)을 앞두고 주요 회원국에 대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⁷⁰⁾

69) 그 동안 독일은 러시아의 경제개혁 지원을 위해 89~93년간 정부보증융자 33억 달러, 러시아군 철수비용 80억 달러, 금융지원 30억 달러 등 총 34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러시아 정부의 재정압박요인인 대독 채무상환기간을 매년 협상을 통해 연장하여 왔다. 대러 투자도 95년의 경우 총 8,241만 달러를 기록하여 최대의 대러시아 지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70) APEC은 신규회원국 영입이 양적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집력 이완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93.11 시애틀 회의에서 94.11 칠레의 가입을 허용한 이외에는 신규가입을 3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6.11.22

이상과 같이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지원획득외교가 종래의 것과는 달리 뚜렷한 差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스스로의 국력으로 경제를 부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인식과, 과거 적극적인 대서방 경제지원획득외교에도 불구하고 IMF와 G-7 등을 통한 경제지원에는 사실상 限界가 있었다는 경험에 기초한다.

종래처럼 서방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것은 같지만,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러시아의 시장경제화 계획과 연계시켜 온 「서방이 요구하는 식의 외교패턴」에서 탈피하여,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기위해 다른 국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강대국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서방의 경제지원을 요구·유도하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식의 외교패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소극적 구걸외교」에서 「적극적 요구외교」로의 전환이다.⁷¹⁾

~25간 필리핀 마닐라회의에서도 현재 11개국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향후 3년간 재차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러시아의 가입을 공식 지지하고 있다.

- 71) 특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그로미코의 「니에트」(нет)외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세바르드나제·코지레프로 이어져 온 대서방 양보노선을 상당히 수정하고 있다. 예컨대 직업외교관의 아들로서 서유럽에서 태어나 영어와 프랑스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국제조직국 차장시절에 소련외교를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명성을 얻은 코지레프가 원래부터 친서방적일 수밖에 없었다면, 아랍어를 배운 중동전문가로서 신문기자에서 학자를 거쳐 소련시대의 지도적 정치가로서 오른 프리마코프는 대서방관계에서 독자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섭행태와 관련하여 서방과의 교섭에서 대립상태에 빠질 경우, 코지레프는 상호 등을 향하면서도 손을 뒤로 내밀어 협상태도를 취하는데 반하여, 프리마코프는 등을 돌린채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 손거울을 들고 뒤의 상대방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이는 코지레프의 「구걸」에 비하

이는 냉전종식 직후 팽배된 「패배한 초강대국」으로서의 패잔병 인식을 탈피하고, 러시아가 구소련을 해체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승리자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구소련에서 민주러시아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당연히 서방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동북아 안보정책방향

러시아는 유라시아국가로서 유럽과 아시아대륙의 교량역할을 자임하여 왔으나,⁷²⁾ 그 동안 교량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또는 아·태정책이 낮은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인해 적극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외교우선순위에서 아시아는 근외지역과 미국·유럽에 이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욱이 아시아내에서도 동북아 및 아·태지역은 그 동안 중동과 근동지역에 버금하는 중요도 밖에 갖지 못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러시아의 교량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시아는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었으며, 유럽과의 만일의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적·조정자적 역할은 오히려 미국(또는 아시아국가이면서 서방국가인 일본)

여 프리마코프의 「적극 요구 또는 관망」으로 비유될 수 있다.

72) 엘친의 안보교서는 심지어 러시아가 유럽·아시아·아메리카 3대륙의 교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4 июня 1996г.; 안현수 역,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p. 351.

이 말거나 유럽과 아시아간의 양자적·다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 왔다. 더욱이 동북아시아의 경우, 여타 아시아지역과 달리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동지역에서는 냉전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영향력으로 평화정착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자임할 수 있으며, 근동지역에서도 구소련 중앙아시아지역과의 연계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구소련 해체이후 극동군사력의 능력마저 폄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일 등 역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착되어 있어 여타 아시아지역에 비하여 러시아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다.

결국 러시아는 그 동안 아시아정책을 소홀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아시아외교에 있어서 최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태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역동성이 부각되면서 그 동참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는데, 아·태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역내 핵심국가들이 군집하여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입지 확보가 필요불가결하고, 동북아국가들의 용인없는 아·태 진출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도 극동시베리아지역을 매개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국가에 속한다.⁷³⁾

73) 전홍찬 교수는 구소련해체후 地政學的 環境 변화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의 아시아정책 중시경향을 유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즉 첫째,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중앙아시아 및 자카프카지예지역에 분포된 구소련의 경제자원들을 상실함으로써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 개발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둘째, 발틱해와 흑해에 위치한 구소련의 주요 해군기지

결국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입지 확보를 목표로 외교정책을 본격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외교의 일반적 추세인 전방위 강대국외교, 무기수출외교, 경제지원획득외교와 밀접한 연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전방위 강대국외교의 차원에서 러시아는 그 동안의 소극적·수동적 외교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역내 모든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혀 새로운 적극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기수출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무기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경제지원획득외교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일본·남한·북한 등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관계발전을 통한 域內立地 確保戰略이다. 모든 국가와의 전방위외교는 특정 현안 해결과 특정 국가와의 관계진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여타 문제영역 또는 여타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배경으로 문제해결의 역동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러·중 관계발전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통하여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들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의 주요 해양출구로서 태평양연안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전홍찬, “러시아연방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12권 제1호, 통권 제23호 (1996년 봄·여름), p. 153.

이와 함께 적극적인 동북아 및 아·태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리적 기반으로서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개발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최근 極東開發을 본격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새롭게 「극동장기발전계획」을 정비하여 공표하는가 하면,⁷⁴⁾ 극동지역의 지방정부들도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⁷⁵⁾ 러시아 극동지역이 개발되어 경제력을 구비한 정치적 실체로서 등장하면,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상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고립무원의 광활한 황무

74) 96.4.15 연방정부가 승인한 「인구정착, 구조개혁, 아·태국가들을 통한 세계경제 참여를 고려한 극동장기발전계획」은 야쿠트 및 사할린 석유·가스전을 집중 개발하여 2005년까지 석유를 현재보다 10배 많은 연간 2,080만톤, 가스를 6.7배 증가시킨 220억 m^3 를 생산하고, 하바롭스크변강의 우르갈스크탄전과 연해변강의 루체고르스크탄전 등을 개발하여 석탄을 현재보다 1.7배 증가시킨 연간 8,540만톤 생산한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 총 개발비용 371조 루블(약 800억 달러)이 소요되는데, 소요비용은 연방정부가 20~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예산 및 기업투자 등으로 조달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를 통하여 고용촉진과 인구유출방지,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세계경제 참여, 환경보전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을 추구하되, 1단계(96~97)에서는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재해복구, 연료·에너지부족 완화, 전력·수송요금 상승 억제, 미분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2단계(98~2000)에서는 사회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연료·에너지공급의 안정화, 전문화부문의 부진 극복, 새로운 경제관계 강화, 경제성장조건 형성 등을 추진하며, 3단계(2001~2005)에서는 구조개혁 강화와 안정발전 확보를 목표로 소송인플라 발전, 전문화부문의 제품의 러시아국내시장에의 안정공급과 수출확대, 기계기업 특히 군수기업에 의한 역내수요 충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ロシア東歐貿易會, “始動するロシアの極東長期發展プログラム,”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卷 第6號 (1996年 6月), pp. 1~8 참조.

75) 예컨대 연해변강 정부는 95.12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처음 5년간 100% 면세하고, 다음 5년간 50% 감면, 그 다음 5년간 25% 감면한다는 법률을 채택하였다.

지 시베리아를 넘어 끝없이 먼 유럽에 위치한 유럽국가인 「모스크바·러시아」였으나,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명실공히 접경국가 「극동러시아」로 되어 아시아국가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극동시베리아 개발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극동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는 동북아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역내 국가와의 쌍무관계를 살펴볼 것이나, 美國과의 관계는 동북아 지역수준 보다는 대체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연루되어 있고, 전세계적 차원의 주요 양국현안은 앞서 이미 논의하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후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보아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주도적인 안보 역할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나 일본 등 지역국가들의 돌출을 미국이 억제·조정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점에서 미·일 안보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의 독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발전을 모색·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 러·중 관계

러·중관계는 50년대의 동맹관계가 60년대의 논쟁관계를 거쳐 70년대에 적대관계로 첨예화되다가, 80년대 들어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1992년 12월 옐친 방중시 「실질적 동반협력관계」 발전에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강택민 방러시 대립·대결관계를 청산하는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하고, 1996년 4월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즉 옐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24~26일 중국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러시아 외교의 최우선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우려(미국 견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14개의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쌍무관계 긴밀화와 대서방 공조의를 과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관계가 현저하게 긴밀화되고 있다.

91년 28억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이 95년 60억 달러로 확대되고, 96년의 경우, 무역액이 10월까지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96년 4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20세기말까지 양국 무역액이 2백억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옐친의 방중을 통하여 시베리아·중국간 석유·가스관 건설협정(80억 달러 규모), 遼寧省 원전건설협정(20억 달러) 등을 체결하고 중국이 三峽댐 건설에의 러시아 참여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

역중심의 경제관계가 합작투자·기술이전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양국관계 발전은 특히 軍事交流分野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장관 상호 방문(중국 94.7, 러시아 95.6), 劉華清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방러(95.12)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추진해 온 러·중 양국은 96년 4월 옐친 방중을 통하여 SU-27 합작생산과 신형공격기 슈퍼-7 공동개발 등 모두 52억 달러상당의 무기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92년 이후 SU-27 전투기, IL-76 군수송기, Mi-17 군용헬기, KILO급 잠수함, SA-10/S-300 PMU 방공미사일체계 발사대와 미사일, T-72 주전차, BMP 장갑차를 도입하고 기술이전문제를 협상하여 왔다.⁷⁶⁾ 특히 중국은 러시아 군사과학자들을 중국의 군수산업체에 고용하여 방산연구 개발계획에 참여시키면서 양국간 군사교류를 무기구입 차원에서 기술이전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중 양국은 국제 현안과 관련하여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데, 유엔의 대이라크 석유금수 해제 및 대이란 원전협력문제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APEC 가입,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상호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적어도 러시아에게 있어서 CIS 국가들과의 동맹을 제외한다면 최상의 국가관계이며, 정치·경제·군사 등 제반분야에서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는 1997년 1월 예정의 양국 총리간 제1차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1997년 4

76) 러·중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金泰虎, “1990년대 中·러 軍事協力の 현황과 전망,” 『中蘇研究』, 제20권 제1호 (1996년 봄), pp. 225~267 참조.

월 예정의 江澤民 주석의 러시아 방문(96.11 북경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을 통해 더욱 긴밀화될 것이다.

러·중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특별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관계」 수립을 천명하고 여타 강대국과의 전방위적 선린동거리의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천명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NATO의 동방확대로 상징되는 유럽방면에서의 대러시아 압박을 중국카드를 통해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신국제질서하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가장 위협시되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과거 중·소동맹의 심리적 효과를 노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취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대러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중국을 통한 스스로의 러시아의 立地確保 전략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전략 차원에서 미·일의 신안보동맹에 대응하고, 나아가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필요성이다. 러·중 협력을 통한 대미·일 견제라는 구상은 91년 5월 江澤民 방소시의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지만, 현재의 러·중 제휴는 91년과 달리 미·일의 반발이 중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일본의 대중국 경계심을 자극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고도의 以夷制夷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시베리아개발을 위한 외부적 환경 조성 필요성이다. 명실공히 아·태 지역국가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극동시베리아개발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접국과의 선린우호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實利 追求 필요성이다. 현재 러시아의 무기수출에서 최대의 거래선인 중국에의 무기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은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다. 구미에서는 러시아 상품을 외면하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 제품을 적극 수입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⁷⁷⁾

한편 중국측 배경은 러시아측 배경과 同床異夢의 측면이 강한데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패권화를 우려한 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중·러 연합으로 대처할 필요성이다. 미국에 대해 중국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중·소동맹의 역사적·심리적 유산을 도구로 하여 미국이 대중국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국내발전을 위한 국경지역 안정화 필요성이다.

셋째, 중국의 실리적 필요성이다. 특히 중국에는 대러 접근 자체를 유도하는 요인이 강하다. 「인민전쟁」 개념에 입각한 군사전략

77) 한편 러시아의 전방위의교는 러시아가 경제대표단을 대만에 파견(96.6) 하는 등 러시아-대만 경제관계개선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91년 2억8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이 94년 12억 달러, 95년 18억2천만 달러, 96년 30억 달러 예상으로 확대되었다. 95년의 경우 대만은 러시아의 10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臺北 무역대표부를 곧 개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을 85년 이후 「유한국부전쟁」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화력, 기동력 및 원거리 투사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현대화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방위산업의 낙후로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기술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여 중국에의 무기수출이나 기술이전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는 거의 유일한 출구이다. 더욱이 중국의 무기체계 대부분이 구소련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장비와 기술도입은 매우 효과적이다. 한편 江澤民 주석, 李鵬 총리, 李嵐清 부총리, 錢其琛 부총리·외교부장, 鄒家華 부총리, 李貴鮮 국무위원, 宋健 국무위원, 劉華清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葉選平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尉健行 북경시 당서기, 阮崇武 해남성장, 丁衡高 국가군사과학기술위 주임, 李淑靜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장, 李鐵映 국무위원 등 중국 최고지도부의 다수가 소련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내 친러시아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⁷⁸⁾ 즉 소련유학 경험으로 인한 중국 지도층의 친러시아 성향과 무기체계의 상합성, 여타 국가로부터의 무기구입 한계, 러시아의 제공능력 등이 어우러져 러·중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중관계에는 상당한 制約要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양국은 역사적·민족적으로 뿌리깊은 불신을 안고 있으며, 앞서 양국의 배경을 살펴면서도 지적되었으나, 양국은 공히 양국 관계발전을 통해 그 자체의 실리를 얻으려는 측면과 동시에 상대방을 꺾

78) 陳潔華, “太い人脈に支えられて「密月」に戻った中ロ關係,” 『世界週報』, 1996年 7月 30日, p. 24.

하함으로써 스스로 서방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이중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반발하는 국내여론도 적지않다.

그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이용하여 전투기, 미사일, 야포와 같은 자국산 주요 대외판매품목의 성능을 제고시킴으로써 장차 세계무기시장에 러시아의 경쟁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가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화살로 되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覇權化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 미국·캐나다연구소 보가투로프 박사는 러·중간 재래식전쟁 발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덜 위협적인 국가에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음으로써 러시아 군부가 대중국 무기수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현재에도 러시아 국경지역에 2,700대의 항공기를 배치하고 있고 중국내 100여개 미사일기지 가운데 절반이 북부지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중국이 현재 가상적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은 도저히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일본도 중국의 미사일로서 도달할 수는 있지만 해군력의 후진성을 고려할 때 지상군의 작전반경 밖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지상군의 가상위협은 여전히 러시아 밖에 없으며, 더욱이 중·러간 국경분쟁 소지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경분쟁 발발소지가 있으며,⁷⁹⁾ 장래의 국경분쟁은 핵전쟁이

79) 4,500km에 달하는 러·중간 국경문제에 관한 역사와 인식 차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Владимир С. Мясников,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1996г. 참조. 한편 러·중 국경획정문제

아니라 재래식 전쟁으로 나타나고, 그 경우 열세에 있는 러시아가 불리하게 된다는 인식이다.⁸⁰⁾

더욱이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의 經濟的·人口的 측면을 고려한 중국위협론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지역은 91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높은 임금 등 인구유인정책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슬라브인의 유럽지역으로의 역이주와 인구의 자연증가를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에 있다.⁸¹⁾ 따라서 노동력 부족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중국은 자기나라 잉여노동인구의 수출지역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⁸²⁾ 이로 인해 유입된 중국 인구가 야기시키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과 중국의 영토적 팽창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러시아측에 팽배하게 되었다.⁸³⁾ 현재 인접한 중국 동북3성의 1억 인구(흑룡강성 3,600만명, 길림성 2,500만명, 요령성 4,000만명)에 비하면, 극동인구는 약 800만으로서 극동지역의 중국인에 대한 위기의식은 클 수 밖에 없다.⁸⁴⁾

에 관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Anne Gordon, “中蘇 국경분쟁 調整에 관한 고찰,” 『中蘇研究』, 제19권 제3호 (1995년 가을), pp. 191~203 참조.

- 80) 알렉세이 보가투로프,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관심과 극동군사력의 장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대회(1996.8.27) 발표논문, p. 2~3.
- 81) 韓鍾萬, “러시아 聯邦政府와 地方政府의 極東地域 개발계획: 가능성과 한계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28.
- 82) M.L.티타렌코, “極東의 社會經濟的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측 관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279.
- 83) I.D.스코르바츠크, “소련붕괴 이후 極東地域의 정치변화와 현황,”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61.
- 84)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밀도는 평균 1km²에 1.3명에 불과하고, 한국은 449명, 일본 328명, 북한 178명, 중국 83명이다. 현재 극동지역의 인구학적 잠재력은 그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부를 개간하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데도 턱없이 부족하다. A.V.오스트롭스키, “社會經濟的 변화에 따른 大衆意識構造의 변화,”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153.

결국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국력신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러시아가 취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발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로서는 중국카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려는 중국의 同床異夢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覇權化가 가시화되면 될수록 점차 러·중간의 응집력도 저하될 것이다. 물론 러·중이 상호 실리를 획득하는 同床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나, 러·중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범위내에서만 작동하는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러·일 관계

러·일관계는 56년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후의 하보마이·시코탄 인도를 규정한 소·일 공동선언 채택(10.19)으로 국교가 정상화(12.12)되었으나, 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반발로 소련이 2도 인도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영토내 외국군 철수”를 추가함으로써 평화조약 체결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하여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의 국력이 증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이 강화되면서, 특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소 경제제재 속에서 일본도 이에 동조하여, 80년대부터 政經不可分の 원칙을 주장하면서 소·일관계는 일시에 냉각되고 말았다.⁸⁵⁾

그 후 소련방 해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소강상태를 유지해 온 러·일 양국관계는 1993년 10월 11~13일 옌친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북방4도 문제 해결, 평화조약 조기 체결, 양국관계 완전 정상화와 이를 위한 양국 정부당국자간의 대화·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東京宣言을 채택(10.13)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정 불안과 영토반환에 대한 부정적 국내여론에 밀려 평화조약 협상은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게 되었으며, 고위급 인사교류도 94년 3월 하다(羽田孜)외상의 방러 이외에는 일본정부 고위급인사의 방러가 중단되고, 러시아측에서는 소스코베츠 부총리(94.11),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방일(95.3)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96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관상으로 볼 때, 일본측의 주도로 양국관계 발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 출범(1.11) 이후 일본은 동경선언에 입각하여 북방4도 반환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 완전한 국교정상화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대러 정책의 기조로 삼

85) 57.12.6 「소·일 통상조약 및 무역지불협정」 조인으로 양국은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상호 최혜국대우를 공여하였으며 정기항로도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의 경우, 일본은 서방선진국 가운데 소련의 최대 무역파트너였고, 70년대 전체를 볼 경우, 서독에 이은 제2위의 무역상대국으로 되었다. 또한 68년 양국간 첫번째 경협프로젝트인 극동삼림자원개발프로젝트를 시발점으로 하여 특히 극동지역과 사할린에서 삼림자원·석유·석탄·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대규모 참여하여 동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선 후 전체적으로 무역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경협 분위기가 급냉되어 81년 제3차 극동삼림자원개발협력프로젝트(10억 달러규모)가 성약된 것을 마지막으로 80년대를 통해 그 후 한 건의 경협도 성립되지 않았다. 小川和男, “日ソ國交回復40周年に寄せて: 新しい善隣關係の構築をめざして,” 『ロシア東歐經濟速報』, No. 1037 (1996年 10月 15日), pp. 3~6.

고(96년 「外交靑書」), 엘친에게 동경선언에 기초하여 영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힘쓰자는 내용의 총리친전을 발송(1.26)하였다. 그후 G-7 정상회담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하시모토 총리는 엘친 대통령과 정상회담(4.19)을 갖고 동경선언을 재확인한 후 외무장관회담 정례화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부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간 고위급인사 접촉이 빈번하게 되어 외무장관회담이 모스크바(3.19), 리용(6.29), 자카르타(7.22), 뉴욕(9.23), 동경(11.15)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개최(4.27)되고, 루시코프 모스크바시장의 방일(10.13~17)에 이어 체르노미르진 총리의 방일도 97년초에 예정되었다. 최대의 걸림돌인 북방영토문제도 진일보하여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차관급회의가 13개월만에 재개(10.2~3 동경)되었으며,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북방4도의 주권문제를 보류한 채 러·일 양국이 공동개발할 것을 제의(11.15)하는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이는 그 동안의 러시아측의 교류우선론에 입각한 것이나⁸⁶⁾ 일본측이 수락할 가능

86) 북방영토 해결방식은 북방4도에 대한 주권소재별로 「러시아+공동관리+일본」 도식으로 살펴볼 때, 러시아의 주권하에 반환하지 않는 1안(4+0+0),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를 러시아의 주권하에 두고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공동주권하에 공동관리하는 2안(2+2+0),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게 인도하는 3안(2+0+2),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하고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를 공동관리하는 4안(0+2+2), 4도를 모두 일본에 반환하는 5안(0+0+4), 5안의 변형으로서 일본의 4도 주권은 인정하나 시정권은 러시아가 갖는 오키나와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측은 그 동안 주권문제를 차치하고 우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交流優先論을 주장하여 왔으나, 일본측은 정경불가분원칙에 입각하여 교류우선론에 반대하여 왔다. 북방영토문제의 연원과 경과 및 해결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姜元植,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러·日の 立場과 解決 展望」, 「統一研究論叢」, 제1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69~105 참조.

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⁸⁷⁾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연방정부가 아무리 북방영토를 반환하여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러시아 국내여론에서도 대일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⁸⁸⁾ 전체적으로 보아 북방영토 반환이 지금 현재 당면한 정세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국제조약·협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의회를 공산·민족계가 장악하고 있으며, 열친 대통령도 국내분위기를 반영하여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영토 요구도 거절한다」는 내용의 「러시아연방 국경정책의 기초」를 승인(96.10.9)하였다.⁸⁹⁾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일본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북방영토를 「특별구」로 하여 러시아의 사실상 통치(행정권)를 인정하고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양국관

87) 일본의 정책변화 조짐은 다음과 같다. 카라신(Григорий Б. Карасин) 러시아 아·태담당 외무차관은 러·일 차관급 평화조약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10.4)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러시아측 제안을 검토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일본의 질적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의 남부사할린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97년봄 유지노·사할린스크에 하바롭스크 총영사관의 지부를 개설하고 사할린정부와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이 현실인정·실리추구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88) 예컨대 라찌스(Отто Р. Лацис)는 북방영토가 러시아 영토임을 증명하는 공식문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북방4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Известия》, 2 октября 1996г.

89) 《Сегодня》, 10 октября 1996г. 러시아의 국경정책 문서 채택에 대해 이케다(池田行彦) 일본 외상은 10.11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북방영토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러시아도 동경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문서가 북방영토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측의 일반적인 입장은 러·일 양국간에는 국경을 확정하는 평화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북방영토 반환은 국경변경이 아니고 여타 국경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袴田茂樹, “日露關係改善への五つの課題,” 「外交フォーラム」, No. 98 (1996年 10月), p. 34.

계 조정과 경제·문화개발에 참여하는 일본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뿐이다.⁹⁰⁾ 이렇게 될 경우 국경획정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문제는 보류될 것이나, 적어도 평화조약 협상의 테두리내에서 교류우선론에 입각한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 활성화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⁹¹⁾

양국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군사교류의 시작이다. 우스이(臼井日出男)가 방위청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라초프(Павел С. Грачёв) 국방장관과 첫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안보대화 및 방위교류 확대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4.29)하였다. 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양국군 규모 및 국방기본정책 통보 등 군사투명성 확대, 고위 군당국자 대화 촉진, 합정 상호방문 등 군사교류 확대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뿌리깊은 상호 불신과 적대감에서 벗어나 전후 가상적국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안보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우스이 장관은 러시아제 무기(MIG-29, SU-27 전투기 등) 구입에도 관심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한편 일본의 구축함

90) 콘스탄친·살키소프, “ロシアに民主的な市民社會の基礎ができた: 北方領土は當面「特別區」に,” 「世界週報」, 1996年 9月 10日, p. 27.

91) 러·일간 북방영토와 관련된 현안중의 하나는 經濟水域 설정문제가 있다. 소련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76.12)를 계기로 양국은 상호 경제수역내 조업과 관련, 어업잠정협정을 체결(77.5)하고 매년 12월 공동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익년도 어획할당량 및 어로조건 등을 협의·조업하여 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러시아가 북방4도 근해조업에 대한 입어료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상황하에, 일본이 94.11 발효된 유엔해양법조약과 관련하여 EEZ 선포 방침을 각의 결정(96.2.20)하고 언론도 북방4도를 일본의 경제수역에 포함시킨 지도를 게재하자, 러시아는 어업협정 체결당시 경계선이 북방4도와 북해도의 중간선이었음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중간선 재설정과 기존 어업협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라마」호(5,200톤급)가 71년만에 러시아해군창설 300주년 기념식 참석차 7.26~29간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되었고, 치체바토프 러시아 극동군관구 사령관의 방일(5.27)에 이어 로디오노프 신임 국방장관의 방일도 추진중에 있다.⁹²⁾

경제분야에서도 양국간 교류·협력규모와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무역규모는 95년의 경우 일본의 대러 수출 12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였으나, 96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규모는 국교 정상화이후 사상 최고기록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은 80년대 전반의 매년 30억 달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에도 제3국을 통한 칼라TV 수출만도 95년 200만대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가전제품·사무용품·자동차 수출을 모두 산입하면 러·일간 교역규모가 결코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⁹³⁾

특히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정책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96년 3월 이케다 외무장관의 방러시 러·일 무역·경제위원회가 최초로 개최(3.19, 소스코베츠 방러시 기합의)되고, 일본은 극동지역 자루비노항 설비확충 조사비용 20만 달러 지원, 나호트카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인 전문가 연수비용 부담, 극동장기개발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러시아는 20억 달러 차관제공

92) 그 동안 러·일간의 軍事交流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92.6 이래 정기적으로 양국 외무·국방당국자간 정책기획협의회가 개최된 가운데 무라다 방위국장 방러(94.11) 및 국방차관 회담(95.3 동경) 등이 개최되었으며, 93.10 공해상 함정·항공기 충돌사고 예방·구조를 위한 해상사고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 2회(94.9, 95.9)에 걸쳐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간 합동탐색·구조훈련이 실시되어 왔다.

93) 小川和男, “日ソ國交回復40周年に寄せて: 新しい善隣關係の構築をめざして,” pp. 6~7.

과 일본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구하였다.⁹⁴⁾ 하시모토 총리 방러시에는 극동개발을 위한 5억불 수출은행 용자 제공과 유지노·사할린스크 일본센터(93.11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에 총영사관 및 일본센터 기개설) 건설을 제의하는 등 극동개발에 대한 협력의향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극동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인 것이다.⁹⁵⁾

이처럼 특히 96년에 들어 러·일관계가 交流優先論에 입각한 관계발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背景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교류우선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변화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일본의 정책변화를 유도한 요인으로서 러시아측 요인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즉 전세계적 수준에서 전

94) 그 동안 일본은 소련방 해체후 G-7 정상회의 등에서 지원 약속한 총 46억5천만 달러의 경협자금중 10억 달러만 집행하고 93.12이래 원조를 중단하여 왔으며, 일본 기업들도 러시아의 부채미상환(약 12억 달러) 등을 이유로 투자기피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는 92년 33건 4억4천만 달러, 93년 14건 2억2천만 달러, 94년 5건 1억9천만 달러 수준을 보였다.

95) 極東開發과 관련, 현재 일본은 사할린해상 석유·가스개발사업(Project I/II), 사할린주 우그레고르스크탄전 및 연해변강의 아르크세이·니콜리스크탄전 개발사업 등 자원개발사업과 자루비노와 하산의 항만정비 등 인프라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약 7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베리아지역 유름첸스코에 유전지대에 인접한 안가르스크와 태평양 연안의 나호트카를 연결하는 전장 4,750km의 석유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10조m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하공화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및 전장 1,000km의 하바롭스크-나호트카간 석유파이프라인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아울러 노후되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하바롭스크 정유공장을 폐쇄하고 알제니예프지역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정유공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朝日新聞』, 1996年 8月 23日). 이 계획들은 한·중·일 등 동북아국가들의 21세기 에너지 수요에 대비한 것이나, 100~1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의 소요재원 조달문제 및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이르쿠츠크-몽골-중국-한국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과의 연계문제 등이 성사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방위외교를 도입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정책에서 러시아가 중국·북한·ASEAN 등에 대한 전방위외교를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문제 보류론을 공식화하고 일본에 대해 일면 강경자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접근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대러시아 관계개선 필요성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러·중 연계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러·중의 대일 공동전선 구축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방위 영역을 아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신미·일 안보체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통해 일본의 행동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정경분리정책이 효과가 없으며,⁹⁶⁾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득책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에너지·자원 수

96) 일본의 政經不可分 원칙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대러시아 외교적 영향력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이지만, 이는 오히려 逆效果만을 낳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측의 정경불가분 전술에 대한 강한 경계감이 러시아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91.4 고르바초프 방일 직전의 시기에 고르바초프가 약 28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대가로 일본에게 북방영토를 매도하려 한다는 말이 돌면서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대일정책을 제약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95.5 약 2,000명의 사망자를 낸 사할린대지진 발생시, 엘친 대통령은 일본의 지원을 북방영토문제 때문에 미리 거부하였다. 즉 정경불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되지도 않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다. 결국 정경분리를 택하여 경제적 유인을 부담없이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이 효과적인 것이다. 사실상 일본에서 정경분리 또는 확대균형론은 86.5 아베(安倍晋太郎) 외상의 방소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급차원에서 이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최근 러·일관계는 러시아가 강화된 역내 입지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러시아 전방위외교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러·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는 限界가 많다. 우선 첫째, 러시아측 요인으로서 북방영토문제가 쌍방이 공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과 방향으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 문제는 러·일 양국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내 중앙·지방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내 정치적 불안정도 러·일관계를 규정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트·엘친이 벌써부터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산·민족계의 득세는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측 요인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양국간 선린우호협력을 본격화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다. 즉 淸日戰爭으로 일본이 遼東半島를 획득하였으나 러시아가 三國干涉으로 이를 빼앗아갔으며, 소비에트정권 수립후 공산주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시베리아에 출병하였으나 소련은 약 60만명의 일본인을 장기간 억류하고 강제노역을 시켜 약 6만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그 후 45년 8월 소련은 중립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고 일본을 공격하였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북방4도를 부당하게 전리품으로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도와 경제를 부흥시키면 부메랑효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일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대일본 政策目標은 아마도 경제지원 등 실리를 획득하고,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아·태 진출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집약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들 목표 달성에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러·일관계는 협조를 모색하면서도 갈등과 대립을 내재하는 관계로 한계지어질 것이다.

IV.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책

1. 한·러 관계

1990년 9월 30일 한·소 양국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래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한·러간에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 양자관계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상황, 북한요인, 국제정세 등 제약요인이 작용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한·러 관계 현황을 정치·경제·군사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검토·분석한다.

가. 정치관계

한·러간에는 그 동안 정상회담이 5차례(90.6.4 샌프란시스코, 90.12.13 모스크바, 91.4.19~20 제주도, 92.11.18~20 서울, 94.6.1~4 모스크바) 열렸으며,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한 각종 각료회담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그 이외에도 체르노미르진 총리 방한(95.9), 부총리 상호 방문(쇼힌 92.5, 다비도프 95.5, 이그나텐코 95.7, 권오기 96.12), 국회의장 방한(하즈블라토프 91.12, 슈메이코 94.11) 등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지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계속되었다.

특히 한·러 관계는 94년 정상회담에서의 「상호보완적·건설적 동반자관계」 천명을 바탕으로 선린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1996년에도 두차례의 외무장관회담(모스크바 5.7, 자카르타 7.22)과 국방장관회담(11.4)이 개최되고,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간의 TV전화 대담(3.14)도 있었다. 정부차원의 인적 교류와 함께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한·러간 인적 교류는 수교 초기 러시아분을 타고 관광·상업을 목적으로 한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이 많았으나 러시아의 경제난 심화와 러시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저하 등을 반영하여 1993년을 기점으로 반전되어 「보따리장수」를 포함한 러시아인의 방한이 한국인의 방러 숫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⁹⁷⁾ 한편 양국간 정부·민간 우호친선단체도 다수 조직되어, 국회 차원에서는 한·러 의원협의회, 외무부 산하에는 한·러 친선협력회, 문체부 산하에는 한·러 문화협회가 각각 구성되어 등록되어 있다.⁹⁸⁾

정치분야에서의 한·러간 현안은 92년 옐친 방한시 양국간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된 이래 특별한 쌍무현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북한의 변화유도문제, 군사동맹조약 폐기후의 러·북한 관계,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서의 러시아의 역할문제 등 북한 관련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러·북한관계 부분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4자회담을 둘러싼 한·러간의 입장 차이만을 살펴본다.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이 제안되자, 러시아는 당일 즉시 외무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배제된데 불만을 표시하고 4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논평하였다. 그 후 공로명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루킨(Владимир П. Лукин) 국제문제위원회 의장(5.6), 프리마코프 외무장관(5.7), 이그나텐코 부총리(5.7) 등과 회담하면서 4자회담 제안 배경

97) 한국 기준으로 94년 입국 4만5천명 출국 2만8천명, 95년 입국 5만명 출국 2만9,600명이 이루어졌다.

98) 그 외에도 경제분야에서는 한·러 경제협회, 한·러 극동협회 등이 결성되어 정기교류를 하고 있고 한·러 문화원, 러시아연구회 등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과 러시아측의 이해와 지지를 설득하였으나, 러시아의 반응은 냉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4자회담 주장이 러시아가 그동안 제안해 온 한반도문제 해결의 다자주의적 접근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4자회담 제안이 접경 강대국인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와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동참하여 동북아지역내 세력입지를 확보하려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의도는 수차례에 걸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참여의사 표명(96.1.8과 4.18 파노프 차관, 6.29 프리마코프 장관)과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적 국제회의 개최 주장에서도 나타났다.

나. 경제관계

한국의 구소련·러시아와의 무역은 1980년대 후반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1988년 2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액이 불과 3년만인 1991년에 1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후 소련방 해체와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 과정에서 1992년의 경우 교역액이 급속히 감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보이다가,⁹⁹⁾ 1990년 12월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1992년 11

99) 92년 한·러 무역액 감소는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 즉 러시아 국내총생산이 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가 26.1배 상승하는 공황적 현상과 함께, 91년의 경우 경협차관을 기대하여 기일을 앞당기는 수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협차관 제공이 중단되고 러시아와의 교역확대 기대가 꺾이면서 한·러 경협이 일시에 냉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윤,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구조 분석,” 『슬라브학보』, 제11권 1호 (1996), pp. 266~267.

월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등을 바탕으로 1993년에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1994년과 1995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약 39%, 51%의 증가세를 보여 1995년 33억 달러(수출 14억 달러, 수입 19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¹⁰⁰⁾

1996년에 들어 한국정부는 모스크바, 연해변강,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내 3개 지역을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선정(2.1)하였으며, 삼성, LG, 대우 등 가전3사도 러시아와 CIS를 핵심 전략지역으로 규정하고, 유통망 확충, 현지공장 건설 등을 통한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어 한·러 교역규모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6년도 양국간 교역규모는 대러시아 수출주종품목인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가 연초부터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장되어 1996년 1~9월간 29억5,400만 달러(수출 15억6,600만 달러, 수입 13억8,800만 달러)로 연말까지 4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한국의 대외무역총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한 비율은 1.1%이고,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으나¹⁰¹⁾ 「보따리장수」까지 공식통계에 합산하면 그 비율은 훨씬 상회할 것이다.

100) 이는 한국의 대외무역 전체의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국의 총무역은 93년, 94년, 95년에 각각 전년대비 5%, 19%, 31%씩 증가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대외무역 규모는 91년 1,478억 달러에서 급감하기 시작하여, 92년 794억 달러로 반감하고, 93년에는 감소세가 조금 둔화되었다가 94년에야 증가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한·러간의 교역증대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구조 분석,” p. 267.

101) 島津朝美, “韓國の舊ソ連・東歐貿易動向: 日本の同地域貿易との比較,”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0卷 第12號 (1995年 12月), p. 45;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卷 第2號 (1996年 2月), p. 137.

<표 5>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통관기준)

	총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7	150 (87.6)	17 (39.8)	133 (96.4)	-116
1988	204 (35.7)	26 (49.4)	178 (33.9)	-152
1989	600 (193.3)	208 (698.3)	392 (119.6)	-184
1990	889 (48.2)	519 (149.9)	370 (-5.6)	149
1991	1,202 (37.6)	625 (20.4)	577 (56.1)	48
1992	859 (-28.5)	365 (-41.7)	495 (-14.3)	-130
1993	1,576 (83.4)	601 (64.7)	975 (97.0)	-374
1994	2,192 (39.1)	962 (60.0)	1,230 (26.1)	-268
1995	3,309 (51.0)	1,416 (47.2)	1,893 (53.9)	-477
1996.1-9	2,954 (29.5)	1,566 (74.6)	1,388 (0.2)	17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1991년까지는 소련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이다.

교역상품구조에서는 한국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자·전기류와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전통적 수출상품인 섬유류, 피혁제품, 식품류 등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면화, 철강품, 기계, 알루미늄·구리·주석·아연 등 비철금속, 목재, 석탄, 어패류 등 원재료 및 소재류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다.¹⁰²⁾ 이는 양국의 교역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2) 島津朝美, “韓國の舊ソ連・東歐貿易動向: 日本の同地域貿易との比較,” pp. 48~50.

러시아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은 약 400여개로 추산되며 40개 기업이 러시아 현지에 상주지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20개 대기업이 한·러 상품거래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 대우, LG, 삼성, 쌍용, 고합, 진도 등 7개 선두기업이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어 대기업 편중이 심하며, 지역적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극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⁰³⁾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1995년 6월말까지 총 77건 7,104만 달러 허가에 56건 4,174만 달러가 집행되었는데, 지역적으로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이 기간의 경우 對극동지역 투자가 총 43건 4,343만 달러 허가에 32건 3,032만 달러가 실행되어, 투자건수로는 57.1%(허가기준 55.8%), 투자액으로는 72.6%(허가기준 6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투자규모는 대부분 소규모로서 스페틀라야 산림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평균 4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대상은 수산물 가공, 선박수리, 목재개발·가공 등 자원관련 투자사업을 비롯하여 통신, 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¹⁰⁴⁾

1996년에는 모스크바대학 부지 15,000평을 49년간 임차(3억7,800만 달러 투자)한 한·러 무역센터(KRTC) 착공식(7.22; 99년 완공예

103) 김덕주, “한·러관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96.7.24), p. 8.

104) 李昌在, “한국의 對러시아 極東地域 投資: 현황 및 과제,”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p. 164~166. 95년 러시아에의 외국투자 총액은 27억9,670만 달러인데, 그 가운데 한국은 전체의 0.9%, 투자 1위 미국은 29.1%, 2위 스위스는 15.0%, 3위 독일은 10.5%이며, 일본은 2.7%, 중국은 0.2%를 각각 차지하였다.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卷 第7號 (1996年 7月), pp. 122~124.

정), 한보그룹의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7.8), LG상사의 사하 유연탄광 공동개발 참여(6.11),¹⁰⁵⁾ 나호트카 한국공단 건설사업 본격화,¹⁰⁶⁾ 기아자동차의 연산 5만대 규모의 칼리닌그라드 자동차조립공장 건설계획(2억5,000만달러규모) 등으로 대러시아 투자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극동지역개발 투자는 2005년까지 이르쿠츠크·사하지역 천연가스를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북경을 거쳐 충남 서천까지 연결한다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계획과 맞물려 있어,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시화되면 앞으로 더욱 본격화·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한·러 경제협회와 러시아 상공회의소간의 경제협력의정서가 체결(96.2.26)되어, 공동 시장조사, 경제사절단 교환 등 양국간 민간 경제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부산·블라디보스톡간 정기여객선도 주 1회 취항(7.20)하게 되었다.

한·러 경제관계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경협차관 상환을 위한 협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총 30억 달러의 대러시아 경협차관중 현재 14억7,300만 달러(은행차관 10억, 소비재전대차관 4억7,300만)

105) 한보그룹은 이르쿠츠크 코빅틴스크 가스전 소유주인 루시아석유회사의 주식 27.5%를 매입(96.7.8)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양사는 99년부터 연간 120만톤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르쿠츠크지역 가스생산량은 2010년경 연간 4,5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내반입량은 1,200만톤으로 2010년경 국내가스 소비량 2,400만톤의 5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상사는 사하공화국과 매장량 2억3,000만톤 규모의 에렐유연탄광 공동개발계약(총 510만 달러 투자예정, 33% 지분)을 체결하였다. 개발 첫해인 96년 연 50만톤을 생산하고 97년부터 100만톤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106)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내 파르티잔스크 지구 약 100만평(330ha)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나호트카 한국전용공단 조성사업은 92.4 추진되기 시작하여 92.11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본 합의한 후 95.3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 행정위원회간의 기본합의서 체결로 확정되었다.

가 집행되고 1991년말 이래로 추가집행이 중단되었다.¹⁰⁷⁾

<표 6> 한-러 경제협력차관의 내역

	총규모	대 주	차주	1991		1992 계획	1993 계획
				계획	집행		
은행차관	10억	산업은행 등 10개은행	소련대의 경제은행	10억	91.5 5억 91.11 5억		
소비재 전대차관	15억	수출입은행	소련대의 경제은행	8억	107건 4억7,300만	5억	2억
연불수출	5억	수출입은행	국내수출 업자	-	-	2억	3억
합 계	30억			18억	14억7,300만	7억	5억

그 후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방한(92.11)시 차관 추가집행 요구를 목적으로 소비재전대차관의 1992년 11월까지 이자 1,26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은행차관의 11월까지분 이자 6,000만 달러중 러시아지분(61.34%)인 3,680만 달러를 1993년 상반기중 알루미늄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소비재전대차관 12월분 이자 640만 달러도 납입(93.2.1)되었으나, 약속된 은행차관이자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파리클럽과의 협상에서 외채 원리금 상환을 2년 유예 5년 분할상환하고 파리클럽보다 여타 채권국들을 유리하게 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93.4.2)하였다. 그럼에도

107) 은행차관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비재전대차관은 건별 대출후 2년 이내 일시불 상환 조건이었다. 따라서 소비재차관의 원리금 상환기한은 93년말까지였으며, 은행차관은 94년부터 첫번째 분할상환하기로 되어있었다.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차관 원리금 상환에 성의를 보였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마침내 1995년 7월 한·러 양국은 93년도분까지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총 4억5,080만 달러로 대상금액을 확정(기준 3.9억 달러에 이자 5.5% 포함)하고, 이를 원자재 50%와 방산물자·헬기 50%로 95~98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95년 40%, 96년 35%, 97년 15%, 98년 10%의 비율)하였다.

<표 7> 한·러 경제협력차관 원리금상환 일정표

(단위: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92~93분 (기합의)	171.5	166.6	67.6	45.1	-	450.8
방산물자	74.6	79.6	33.8	22.5		210.5
헬기	14.8	8.8	1.8	1.2		26.6
원자재	82.1	78.2	32.0	21.4		213.7
94이후분 (미합의)	405(94) 243(95) + α	230	216	202	143	1,469+ α

* α 는 연체이자

이에 따라 1995~96년간 알루미늄과 헬기의 반입이 시작되었지만,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자 한·러 양국은 다시 협상을 개시하여 1996년 8월 95~96년 반입예정분 철강 9,000만 달러를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7,500만 달러와 헬기 1,500만 달러로 대체하여 반입하고, 러시아가 향후 상환일정을 준수할 경우, 상환예정 원리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연체이자 1,340만 달러를 탕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6년 7월말까지 러시아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분의 12%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향후 러시아가 합의대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된다. 더욱이 94년도 이후 상환도래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 군사관계

1991년 6월과 9월 주러시아 무관부와 주한 무관부가 설치되면서 개시된 한·러간의 군사교류·협력은 그 동안 군사교류 양해각서를 3차례 체결(92.11, 94.4, 95.5)하고, 해상사고방지협정(94.6), 군사비밀 보호협정(95.5) 등을 체결하는 등 인적 교류, 해군함정 교환방문, 군사정보 교류, 군사교육 교류, 무기·방산협력 등 각 분야에서 적지않은 진전을 보았다.

1993년 8월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함정의 부산항 방문으로 시작된 해군함정 교류가 그 동안 지속(한국해군함정의 93.9, 94.11 방러)되어 1996년에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러시아 해군 300주년 기념식(7.28)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였으며, 9월에도 한국함정이 블라디보스톡을 친선 방문하였다. 92년 11월 그라초프 국방장관 방한, 94년 4월 이병태 국방장관 방러, 95년 5월 그라초프 국방장관 방한에 이어, 96년 11월 김동진 국방장관의 방러가 이루어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이 대미 안보협력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사·교육교류를 중심으로 양국간의 상호 인지 및 군사적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데 반해, 러

시아측은 무기·방산기술협력을 포함한 군사협력에 한층 더 관심을 두어 왔다.¹⁰⁸⁾

이런 상황에서 특히 1996년 이후 무기·방산물자를 통한 경협차관 상환에 힘입어 무기·방산협력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T-80U 전차, BMP-III 장갑차, METIS-M 대전차유도탄, IGLA 지대공미사일 등 1억9,770만 달러 상당의 러시아제 무기가 도입되고, 이들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대대가 육군에 창설되었다. 현재 러시아 무기수출회사 「로스보오루제니에」, 서울지사가 설립(96.8)되어, SU-35/37 전투기, C-300V 방공시스템, 해군 방공시스템, 함정용 크루즈미사일, 블랙샤크 전투용 헬리콥터, Mi-26 수송용 헬리콥터 등의 도입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5년 5월 가서명되었던 「한·러 군사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이 96년말 서명 예정으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¹⁰⁹⁾

108) 沈敬旭, “91-96 한·러 군사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 국방연구원 한·러 군사관계 5주년 기념세미나(1996.9.17) 발표논문, p. 16. 심경옥 박사는 한·러 군사교류의 문제점으로서 위와 같은 교류·협력형태의 선호도 차이 이외에도 인식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은 과거 서방일변도의 제한된 군사교류 전통에서 비롯된 경협미숙으로 인해, 그리고 러시아는 구소련시절의 대동맹국 군사원조나 지원협력의 오랜 관행으로 인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109) 러시아의 대한 무기판매는 경협차관문제를 해결하려는 러시아 재무부와 무기시장을 개척하려는 군수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러·북한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러시아내 다른 정부부처의 견해와 배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Alexei V. Zagorsky, “The Roles of Major Power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21st Century: Russian Perspective,” presented to the 7th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hel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on November 4~6, 1996, Seoul, p. 18.

라. 기타관계

한·러 양국은 수교직후부터 科學·技術協力の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 12월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과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 및 원자력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차관급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왔다. 1991년 2월이래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항공·우주, 에너지, 항공재료, 자원, 분말재료 등의 분야에서 한·러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거나 설치중에 있으며, 민간기업의 현지연구소도 운영중에 있다. 정부간 79개 공동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수행중이며, 단·중기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협차관 상환과 관련하여 무기·기술이전이 진행되면서 첨단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활성화·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漁業協力과 관련, 한·러 양국은 1991년 9월 체결된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왔다. 1995년 정부간 어업쿼타의 경우 77,000톤(어종교환 22,000톤, 유상 55,000톤), 입어료 포란태 336\$/톤, 비포란태 205.6\$/톤으로 되어있다.

環境協力과 관련, 한·러 양국은 1995년 1월 제1차 환경협력공동위 개최이래 환경분야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환경오염이 국가간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 핵투기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 등과의 국제적 공조 또는 국제환경기구와의 다자적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온 大使館 부지 교환 및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 보상문제는 1996년 5월 공로명 외무장관 방러시 서울 정동의 구 배재고 부지 2,400여평과 모스크바시내 트루제니코프街 8번지의 부지 2,400여평을 교환하되, 구 러시아공사관 부지 보상은 공시지가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모스크바대사관 부지의 경우, 연방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와 모스크바市の 미온적인 반응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편 한·러 양국은 1996년 6월 모스크바에서 형사사범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갖고 조약문안에 가서명(6.13)하였다. 이와 함께 1996년 9월 윤관 대법원장의 러시아 방문시에는 한·러 민사사범공조협정 체결 추진도 합의(9.14)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최근 활발해진 인적·물적 교류에 따라 증가될 관세범·외환관리범 등 경제관련범죄 처리에 있어서 사범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형사범죄에 대한 사범공조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2. 러·북한 관계

구소련·러시아의 대북한 관계는 한·소 수교(90.9.30)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나, 러시아의 한반도 균형정책 추진 필요성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탈피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점차 복원되고 있다. 1992년 1월 로가쵸프(Игорь А. Рогачев) 외무차관과 1993년 1월 쿠

나제(Георгий Ф. Кунадзе) 외무차관의 북한 방문에 이어, 1993년 8월 6~16일간 북한경제대표단(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Foxtrot급 4척과 Golf II급 10척 등 퇴역잠수함 14척이 북한에 고철용으로 판매되는 등 경제·군사교류가 재개되었다. 그 후 1994년 5월 북한의 정부대표단(이인규 외교부 부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김일성 사망(94.7.8) 이후 파노프(Александр Н. Панов) 외무차관이 대통령특사로 파견(94.9.20~24)되어 김정일 정권 지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양국관계 복원이 본격화되었다.

가. 정치관계

러·북한관계 복원·유지 노력은 정치분야에서 특히 1996년에 들어 인적 교류의 증대로 반영되었다. 1996년 4월 이그나텐코(Виталий Н. Игнатенко) 부총리, 파노프 외무차관 등 러시아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90년이후 중단되었던 경제공동위원회와 외무차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쌍방은 러·북한 관계를 새롭게 확대·발전시킨다는 상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 외교부는 이 회담이 러·북한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쌍무관계를 각 분야에 있어서 확대·발전시키는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고 자평(4.18)하였다. 그 후 셀레즈노프 국가두마 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5.26~29)하였다. 의회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공산·민족계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가 셀레즈뇨프 의장이 공산당 소속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차원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96년의 경우, 황장엽 노동당 서기의 모스크바 방문과 주가노프 면담(2.6), 러시아공산당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당위 대표단의 평양 방문(2.10), 러시아자유민주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5.28), 러시아민족구국전선 대표단의 평양방문(8.10), 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9.7) 등이 그것이다.

러·북한간 정치분야 쌍무관계의 핵심은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폐기 또는 동 조약의 개정문제이다.¹¹⁰⁾ 이 문제는 쿠나제 외무차관의 93년 방북시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1.30) 및 김영남 외교부장(2.1)과의 회담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¹¹¹⁾ 1994년 모스크바 한·러

110) 61.7.6 모스크바에서 체결되고 9.10 평양에서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10년 기한으로 효력을 발생한 「러·북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제6조에서 체약 일방이 기한만료 1년전에 조약 폐기희망을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핵심 조항은 전문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관계」를 규정한 이념적 동맹조항과 제1조의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적 동맹조항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군사적 동맹조항은 이른바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것인데,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군사개입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걸림돌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조약상의 북한피침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북한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반도 분쟁상황을 선언할 수 있어 그 악용이 우려되어 왔다.

111) 쿠나제 차관은 군사개입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다는 방침하에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피침 여부를 판단한 후, 러시아의 헌법질차와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군사개입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 회담에서는 쌍무관계의 법적 기초의 변경 필요성

정상회담(6.2)에서 엘친이 동 조항의 사실상 사문화를 공언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 파노프 방북(94.9)시에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96년 조약 만료 시까지는 기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굳이 미리부터 거론하여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²⁾ 그러나 기한만료 1년전에 조약폐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약규정 6조에 의거하여 마침내 1995년 8월 조약 폐기와 새로운 우호조약 체결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새로운 「러·북한 기본우호관계에 관한 조약」 초안을 북한에 전달하였던 것이다.¹¹³⁾

그러나 1996년 9월 10일 러·북한 동맹조약이 정식으로 실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조약의 문안 작성과 체결문제는 새로이 부임(96.8.12 임명)한 데니스 소프(Валерий И. Денисов) 북한대사의 최대 과제로 될 것이나, 당분간 러·북한관계는 동맹조약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없이 통상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¹¹⁴⁾

과 북한의 대리시아 외채 상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나제는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문제도 거론하였으나, 북한은 이 문제가 러·북한간 쌍무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였다.

- 112) 파노프는 귀국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대한 군사원조 규정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침략일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침략의 본질은 모스크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표명하였다.
- 113) 96.7.22 한·러 외무장관회담에서 프리마코프 장관은 95.8 당시 신조약의 초안을 전달한 사실과 새로운 조약에서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배제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 114) 러시아와 북한을 군사동맹관계로 묶어 온 이 조약은 공식폐기 이전부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식 폐기조치는 실질적인 의미보다象

한편 새로운 조약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데, 구소련 국가들 이외에는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폐기는 분명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에 대한 규정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는 점일 것이다.¹¹⁵⁾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감안할 때, 러시아는 북한과의 최소한의 군사안보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즉 첫째, 한반도 내부 정세로서 한·미 군사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동맹조약을 전면 파기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러·북한 쌍무관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손상된다. 셋째,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다자간 안보체제 수립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관계 유지가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러시아 의회내 친북한 보수파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방위 강대국의

徵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안보를 지탱해 온 중·북한 동맹조약과 러·북한 동맹조약이라는 양대축 가운데 하나의 축이 무너지게 되며,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러·북한 군사동맹의 파기는 북한의 대남 전쟁도발 가능성을 그만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북한 동맹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관계개선을 더욱 적극화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러·북한 군사동맹 폐기로 인한 안보불안을 완화·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었고 탈냉전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러·북한 군사동맹조약의 폐기는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 유산을 하나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15)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구소련이 체결한 조약·협정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몽골과 인도 등과도 군사면을 배제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와 합치하는 것으로서 문제는 얼마만큼 「저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안보관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안보관련 규정이 채택된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단지 러시아와 북한에게 상징적 의미를 주는 차원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北韓 核問題를 둘러싼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되며, 둘째,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필요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다자주의적 국제협조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기본적인 정책기조이다.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이 IAEA의 대북한 사찰을 중심으로 IAEA와 UN의 틀 속에서 논의되던 시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핵 확산금지에 관한 러·미 공동성명」을 채택(92.6.17)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93.3.12)에 대해서도 북한의 NPT 존속 및 조약 부과 의무 준수 촉구성명서를 발표(93.4)하는 등 한·미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1993년 6월 미·북한 회담이 개시(1단계 뉴욕 93.6.2~11; 2단계 제네바 93.7.14~19; 3단계 제네바 94.8.5~19, 9.23~10.21)되면서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이 미·북한 간의 직접협상으로만 집약되자 러시아는 한·미와의 공조체제 보다는 다자주의적 국제회의 소집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8자회담 개최 제의인데, 1994년 3월 24일 추르킨(Виталий И. Чуркин) 외무차관은 모스크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인한 한반도정세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남

북한과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이 참가하는 8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 후 미·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94.10.21)되자 러시아는 외무부 공식논평(10.27)을 통해 이를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기초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NPT 기본원칙 준수·유지 문제, 한반도 비핵화 이행 문제, 러시아 국익의 유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8자회담 개최를 거둬 주장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다자주의적 국제회의 개최 제의는 한·미 양국의 4자회담 제의(96.4.19)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간의 관계복원·유지 노력은 현재 쌍방에 의해 상호 적극화할 必要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북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강화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킴으로써 ①대남한 외교에 있어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 ③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 추세와 중·북한간 유대를 감안할 때, 북한과의 관계복원·유지는 러시아의 동북아 역학관계 균형 유지에 필요불가결하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①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유지함으로써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모색하고 특히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러시아의 남한편중정책을 시정하여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북한간 전통적 유대관계와 최근 미·일의 대북한 접근 추세에 부가하여 러시아가 남북한 균형정책을 취한다면 북한의 대남 전략

환경이 크게 호전된다는 인식이다. ③구소련의 경제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산업·군사구조의 러시아와의 상합도, 소련유학파의 존재 등 인적 연계 등 북한의 내부적 대러시아 접근유인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북한관계가 실질적 차원으로 발전하기에는限界가 많다. 우선 쌍방이 모두 경제난을 겪고 있어 쌍무관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경제관계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 쌍방이 모두 상대방에 대해 적극적인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관계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일과의 실질관계가 발전할 경우, 러시아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입장을 균형있게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즉 약화되어 있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북한의 후원자 또는 최소한 남북관계에서의 균형자·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북한을 궁극적으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로지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로서 북한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만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경제관계

1980년대 후반이래로 구소련은 한국과의 수교 및 경제관계 확대

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과 북한과의 무역은 착실하게 증대하였다. 소련방 해체이전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소련이었으며, 북한 무역총액의 약 40%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소련방의 해체와 러시아의 시장경제정책 추진 이후 북한에 대한 배려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소련과 북한의 무역액은 구소련의 대북한 수출 감소로 인하여 198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계속 감소하였으며, 러시아가 시장경제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 경화 결제를 요구(90.11)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구소련은 1990년 이전까지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일정량의 석유를 우호가격으로 공급하였으나, 1991년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량을 대폭 삭감하여 버렸다.¹¹⁶⁾

현재 러·북한간 교역규모는 92년 2억9,200만 달러, 93년 2억2,200만 달러, 94년 9,600만 달러에 이어 95년에는 8,500만 달러로 떨어져, 95년 한·러간의 33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다. 주요 교역품목에 있어서 러시아가 알루미늄, 승용차, 화물차, 비료, 철강류, 콩 등을 수출하고, 알루미늄광, 전기제품, 아연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러·북한 경제관계는 사실상 계속 위축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를 복원·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되었다. 96년의 경우, 4월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북으로 6

116) 92년 2월의 경우 러시아의 대북한 석유공급은 기존의 10% 이하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BIS: Central Eurasia*, February 26, 1992, p. 32.

<표 8> 구소련·러시아의 대북한 교역현황

(단위: 90년까지 100만 루블, 91년이후 100만 달러)

	총액	대북 수출	대북 수입	무역수지
1960	102.7	35.5	67.2	-31.7
1961	140.5	69.3	71.2	-1.9
1962	674.8	210.1	464.7	-254.6
1963	540.2	168.5	371.7	-203.2
1964	147.2	74.6	72.6	2.0
1965	160.3	80.8	79.5	1.3
1966	160.1	77.0	83.1	-6.1
1967	196.5	99.3	97.2	2.1
1968	263.8	155.0	108.8	46.2
1969	295.3	181.4	113.9	67.5
1970	335.9	207.0	128.9	78.1
1971	452.3	330.1	122.2	207.9
1972	380.0	251.6	128.4	123.2
1973	357.3	224.0	133.3	90.7
1974	343.2	194.3	148.9	45.4
1975	338.2	186.8	151.4	35.4
1976	300.5	181.8	118.7	63.1
1977	328.7	164.7	164.0	0.7
1978	378.1	176.5	201.6	-25.1
1979	491.8	235.4	256.4	-21.0
1980	572.1	287.9	284.2	3.7
1981	529.2	278.9	250.3	28.6
1982	681.0	318.5	362.5	-44.0
1983	587.4	262.4	325.0	-62.6
1984	712.8	347.2	365.6	-18.4
1985	1,059.2	654.8	404.4	250.4
1986	1,207.9	757.2	450.7	306.5
1987	1,232.1	800.2	431.9	368.3
1988	1,601.9	1,062.2	539.5	522.7
1989	1,502.0	940.5	561.5	379.0
1990	1,499.0	886.6	612.4	274.2
1991				
1992	292	227	65	162
1993	222	168	54	114
1994	96	52	44	8
1995	85	70	15	55

* 자료: 90년까지는 小川和男, "舊ソ連の對社會主義諸國經濟援助と貿易," 「ソ連東歐貿易調査月報」, 第37卷 第3號 (1992.3), p. 37; 91년이후는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6), p. 922.

년만에 열린 「러·북한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에서 양측은 통상, 경공업, 임업, 합작회사, 건설, 광산개발, 나진·선봉 경제특구, 북한 정유시설 이용 등 8개 분야의 협력원칙에 합의하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의정서」를 채택(4.12)하였는데, 특히 러시아가 가동 중단중인 김책제철소와 대동강 배터리회사, 선진제철소에 원자재·부품을 공급하여 재건한 뒤 공동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안주탄광 개발, 10만kw급 동평양 화력발전소 건설, 북한 석유탐사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양측은 급감된 교역규모를 구소련 당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¹¹⁷⁾

그 이외에도 임업협정(95.2), 과학기술협력협정(95.6), 어업협력합의서(95.12)에 이어 수업업협조에 관한 합의서(96.10.12)와 구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공장의 재가동, 두만강개발계획, 시베리아지역 벌목문제 등에서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투자장려 및 상호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11.28)하였으며, 양측 과학원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도 체결(11.29)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投資保護協定 체결은 구소련의 지원하에 생산되었다가 현재 가동중단중인 북한의 생산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북한 경제관계 발전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화부족 등 심각한 경제난이 서로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어려운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러·북한간 국경철도(하산·두만강역)의 열차운행이 96년 5~7월과 9월 두차례 중단되었는데, 북한이

117) 「중앙일보」, 1996년 4월 21일.

러시아의 철도요금 인상(4년간 1,800배)에 따른 화차 사용료를 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쌍방간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가 강조되면서도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평양주재 통상대표부를 폐쇄하고 그 기능을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 상무부가 인수하도록 조치(9.10)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다.¹¹⁸⁾

둘째, 북한의 심각한 대러시아 外債 문제이다. 1995년말 현재 북한은 43억2천만 달러의 대러시아 외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¹¹⁹⁾ 러시아 자신도 서방의 외채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는 형편인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대외경협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외채와 무관하게 신규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서로 상대방을 바람직한 경제협력

118) 96.8 러시아는 경제난을 이유로 북한,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등 35개국의 무역관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대사관 무역담당관 산하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19)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방 해체직전 북한은 22억3,400만 루블(39억4,700만 달러)의 대소채무를 갖고 있었으나, 신생 러시아가 출범하면서 급격한 인플레이로 루블화 평가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2년 쌍방은 북한의 대러 채무액을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고려하여 32억 루블로 하되, 신용차관 17억 루블과 무역채무 15억 루블로 구분하기로 합의하였다. «Известия», 20 мая 1993г. 그 후 자료에 따라서는 루블화 평가방식이 차이가 있고 실제로 외채규모도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규모가 38억 루블(정부차관 32억 루블, 상품미수대금 6억 루블)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문의 인용수치는 통일원이 96.5.17 공표한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의 외채총액이 95년말 현재 115억1천만 달러인데, 러시아 43억2천만 달러, 중국 21억9천만 달러, 서방채권은행단 23억3천만 달러, 일본 9억1천만 달러, 기타 서방국가 17억6천만 달러라고 발표하고, 94년 북한의 GNP가 212억 달러였고 9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외채총액은 GNP의 50%를 훨씬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 상대방보다는 서방과의 협력에 주력하고자 한다.

결국 러·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유인은 현재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군사관계

러시아는 한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북한과의 기존 군사교류·협력관계를 최소한으로는 유지·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소련 해체후에도 삼소노프(Виктор Н. Самсонов) CIS 통합군 참모총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CIS 통합군과 북한간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문서」를 조인(92.3.2)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군사대표단 교환, 해군함대와 전투비행단의 상호방문 등 군인사교류를 중심으로 군사유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95년 8월에는 러·북한간 군사교류 협정 체결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여 왔듯이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공급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부품공급·장비유지 차원의 교류·협력은 적은 규모이나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93년 11월 퇴역잠수함 14척이 고철용으로 북한에 판매되고, 이것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미사일장착 잠수함에 대한 기술 이전 또는 고철이 아니라 실전에 전용될 가능성 등의 많은 의혹을 야기시켰다.¹²⁰⁾

120) 95년 5월 러시아내 친북단체인 「조선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대북한 군사관계 유지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군사교류·협력관계를 유지·확대하고자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공급은 통상적 무역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나마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반발과¹²¹⁾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 등 경제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크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향후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협력방향은 한반도정세와 미국 및 중국 등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설정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서 軍事協力協定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러시아가 이미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협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¹²²⁾ 즉 러시아는 미국과 인사교류·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93.9)하였으며, 중국과도 5년 기한의 군사협력협정을 체결(93.11)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군사협력협정도 이와 유사한 형식과 수준에 머

는 한국에 대한 무기공급을 즉각 중지하고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재개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5.24)하였다.

- 121) 역으로 북한은 한·러 군사교류·협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96.9.30)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T-80U 전차와 BMP-III 장갑차 등 군사장비 수출을 “불은 불에 키질하는 격의 무모한 처사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커다란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는 2중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조선반도 분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인 러시아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장비 반출로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122) 96.4.12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역의 안전보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국가들과 군사기술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러·북한 양측 군지휘부 인사의 상호 방문, 러시아제 무기체계의 유지와 교육을 위한 러시아 군사기술 전문가의 북한 파견, 군사정책에 관한 러·북한간 상호 정보교환,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 수출 모색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될 것이다.

라. 기타관계

북한의 人權과 脫北者 처리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대북한 관계 복원이 강조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여론과 한국의 입장을 의식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묵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러시아의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는 탈북자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96년 2월 주평양 러시아대사관 통상대표부에 북한인이 들어와 망명을 요구하였으나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여 마침내 권총자살하였다는 사건(2.14)에서도 시사된다. 한편 최덕근영사 피살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수사태도에서도 유사한 이중성이 발견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관련, 러시아의 核技術이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1993년 5월 북한체류 러시아 과학자들을 전원 귀국시켰다고 하나, 북한이 러시아의 핵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

한으로의 핵기술 유입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¹²³⁾

漁業協力과 관련, 러·북한 양측은 그 동안 1956년 「태평양 서북 지역 수산자원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수산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소련방 해체후 사실상 러시아측이 북한의 무상 어획할당량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어로행위를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어업협력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러·북한 양측은 어획할당량을 비롯하여 어로, 양어, 양식 등 전반적인 수산업분야에서 양측간 상호 협력을 위해 매년 어업공동위를 개최(95.12 블라디보스톡; 96.10 평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極東地域과의 경제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나즈드라젠코(Евгений И. Наздратенко) 연해변강 지사의 북한 방문시 양측간 농어업과 기계제작분야에서의 협력각서를 조인(95.3)하였다. 이때 나즈드라젠코는 에너지·어업·조선분야에서의 합작사업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건설업 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책방향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目標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

123) 「이즈베스찌야」는 북한 벌목노동자들이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강의 폐쇄탄광에서 비밀리에 상당량의 우라늄을 캐내 모처에 빼돌리고 있으며, 이것이 비밀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으며(«Известия», 22 июля 1993г.), 92년 10월 60여명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월 1,500~4,000달러의 봉급을 제외받고 북한으로의 출국을 기도하였고 12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Век», 23 января 1993г.; «Рабочий», 4 февраля 1993г.) 그후 쿠나제 외무차관의 방북(93.1)시 북한은 향후 러시아 핵기술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였다고 한다.

변환경 유지, ②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③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한반도 내부의 정세안정 차원에서 남북한간 갈등과 전쟁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험주의적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러시아의 아·태정책 추진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양자관계 차원에서 남북한 쌍방 모두에 대한 선린우호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러관계의 전면적 발전과 러·북한관계 복원·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 및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도움을 통해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가입을 실현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가 1992년 12월 발

표한 「외교정책문서」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이 ①국경지역에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②아·태지역 국제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 외교의 행동반경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²⁴⁾ 즉 아·태지역에서 러시아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내 정세변동의 시금석인 한반도정세 변화를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한반도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서 나타날 전반적인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변화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태정책의 전반적인 애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이 역내 정세변동의 시금석 또는 단초로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자고르스키 박사는 러시아 외교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은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러시아는 현재 유고슬라비아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는 세계적·지역적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아시아에서 90년대 러시아가 성취한 것은 ARF와 대중 전략관계이나, 이 두가지는 모두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에 큰 도움되지 못한다. ARF는 토론의 장에 불과하고 중·러관계는 중국의 군사패권화로

124) INTERFAX, December 1, 1992; FBIS-SOV-92-232, December 2, 1992, p. 5.

러시아를 오히려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정치·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선의 지역 (most appropriate area)이다.”¹²⁵⁾

그러나 현재 러시아가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積極政策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남북한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기 보다는 8자회담 개최 제의(94.3.24)와 4자회담 반대 등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더욱이 8자회담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도 사실상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IAEA와 UN이라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미·북한간 쌍무협상 차원으로 전환되자, 비로소 자국의 입지 확보를 위해 서둘러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강하며, 8자회담 자체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통하여 남한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난, 러·북한간 이념적 거리감, 중국요인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요인이 적지않다.¹²⁶⁾

125) Alexei V. Zagorsky, "The Roles of Major Power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21st Century: Russian Perspective," pp. 9, 10.

126) 여인곤 박사는 러·북한관계를 1992년~1993년 전반기의 악화기, 1993년 후반~1994년 전반의 회복기, 1994년 후반기이후의 재정립기로 구분하고 있다. 余仁坤, 「러·북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9). 러·북한관계는 표면적으로 이상과 같은 전개과정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소 수교후의 소·북한 관계악화는 사실상 소련이 북한을 포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한·소 관계개선에 반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소련·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남북한 균형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한편 실질적 차원에서 균형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 적어도 남북한 균형정책 또는 두개의 한국정책은 기본적으로 브레즈네프시대 말기 이후부터

그러나 한반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정책목표가 반드시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로서는 다른 代案이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점차 적극화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를 이용하여 아·태외교의 돌파구로 삼는다는 세번째 목표는 첫째와 둘째 목표에 이은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역내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역내 행동반경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타 역내국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통한 아·태 진출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미국은 러시아의 진출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최근 러·중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돌파구 개념」에 입각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아·태 정책 또는 동북아정책의 중추적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이 지금까지의 소극적·주변적 모습과는 달리 적극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또한 「전방위 적극외교」라는 러시아 외교의 새로운 정책추진방향에 의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수단은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兩者主義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소집 주장 등 多者主義로 대별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양자적·다자적 수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기별·상황별로 어느 한쪽에 실질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북한편중-남한편중-북한복원」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러·북한관계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대한 편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국내 러시아 전문가간에 공감되고 있다.

단을 모두 동원하여 한반도정책을 적극화·본격화할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는 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韓國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면적 관계발전을 모색한다. 한국과의 관계발전은 「돌파구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카드 및 일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러 군사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중국·일본과의 군사협력과 연계되어 군사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기술이전을 통해 러시아에게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

둘째, 러시아는 北韓과의 관계복원을 모색한다. 대규모의 정부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외교적 고립탈피 효과를 제공하는 등 김정일 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극동시베리아지역을 중심으로 쌍무적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북한의 경화사정으로 무기수출이 현저하지는 않을 것이나 부품공급 차원을 넘는 무기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군고위인사 교류와 합정 상호방문 등 통상적인 군사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북한의 외교고립·경제난 탈피를 위한 대외관계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할을 용인하는 바탕위에서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미·북한간 접근을 적극 지원·중재할 수 있는 틈새를 파고드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을 자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남북대화의 仲裁役割을 자임할 수 있다. 작게는 남북문화·학술행사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중재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95년 9월 체르노미르진 총리 방한시 제안된

한·러·북한간 3각협력이 한국의 자본·기술과 러시아의 자원 및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특히 극동시베리아개발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태평양함대 훈련에의 남북한 군대의 참관단 초청 등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중재를 남북한 쌍방과의 군사교류·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유리한 입지를 바탕으로 모색·추진하고, 남북군축협상 중재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多者主義的 提案을 계속한다. 예컨대 잠수함사건이 나자 유엔을 포함한 7자회담 개최를 재차 제의하였듯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의 북한 참여와 한국이 94.7 제창한 「동북아안보대화」(NEASED) 개최를 적극 주선할 가능성도 크다.¹²⁷⁾ 이와 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저비용의 참여도 적극 모색·추진할 것이다. 4자회담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미온적 반응을 보일 것이나, 4자회담 개최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4자회담의 확대·발전을 위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앞으로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러시아가 무언가의 관여를 계속

127) NEACD는 93.10 미국무부 지원하에 샌디에고대학 주최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96.1 북경회의까지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한·미·일·중·러 5개국의 학자와 정부 관료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간·비정부 차원의 회의이지만 동북아지역내 유일한 안보대화채널이다. 아직까지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역내 국가간 안보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증진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93.7 준비회의 참석후 현재까지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NEASED는 94.7 제1차 ARF에서 한국측이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간 정부간 안보대화 채널이다.

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킬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쌍무관계 강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천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이상과 같은 남북대화 중재정책들이 설령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중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쌍방에 대해 공히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認識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문제 해결 중재를 위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제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효과도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제안이 매우 修辭的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전방위외교정책」은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무언가의 제안을 거듭하거나 새로이 제기함으로써 현상변화를 부단히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V. 한·러 안보협력 방안

1. 기본방향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미국이 균형자·조정자로서 관리되는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인데, 체제유지를 위한 국제협조와 새로운 패권창출을 위한 국가간 대립·갈등이라는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체제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반영이 미국과 일·중·러가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1+3 체제」이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지위를 신장함으로써 신국제질서 속에서 일·중·러에 비견할 수 있는 국력을 신장·구비함으로써 동북아지역내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의 상층부 국가로 진입하여 「1+3 체제」를 미국과 한·일·중·러의 「1+4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나아가 한·미·일·중·러의 「5각 균형체제」 수립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 경제발전과 통일실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여 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데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국내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¹²⁸⁾

이런 기본개념에서 출발할 때, 러시아에 대한 정책도 경제발전과 통일실현을 통한 국력신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므로 한국의 對러시아 政策目標은 ①한·러간 쌍무관계 발전을 통한 경제·외교·군사적 국익 증진, ②러시아의 대북한 변화 유도과 한반도 평

128)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와 한국의 일반적인 외교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姜元植,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참조.

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 확보로 집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러시아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러간의 국익을 비교·분석한 바탕위에 정치·외교·군사·경제·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러 양국의 정책목표와 국가상황에 비추어, 양국관계가 여타 국가관계와는 달리 「호혜적 접근」과 「전면적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적극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 호혜적 접근

러시아의 대한 정책목표와 한국의 대러 정책목표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면, 사실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정책목표가 서로 어울어질 수 있다면 협력의 범위와 심도도 그만큼 커지고 깊어질 것이다.

먼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정책목표와 한국의 국익을 연관시켜 분석한다. 「IV장 3」에서 전술하였듯이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① 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 ②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③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첫째 목표인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를 위한 한반도 평화정착은 한국의 일차적인 안보정책 목표와 상합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인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 추구에서는 북한과

의 선린관계 유지·발전이 한국의 국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문제시되나, 연착륙 개념에서 남북관계를 볼 경우,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국익에 유효하다고 평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러시아 지원하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러·북한관계가 실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러·북한관계의 복원·유지가 남북한관계 개선 또는 한·러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목표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러시아의 경제실리 획득과 이를 통한 아·태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러시아의 국력신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계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나, 사실상 러시아가 현재의 국내 정치·경제혼란을 단기간내에 극복하고 명실공히 패권국가로 재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짧게는 10여년에서 수십년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정치·경제 안정과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러시아의 국력신장 가능성을 패권화의 우려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질서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통해 강력한 극동지역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 개발과정에 한국이 참가하여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이 부상하는 역동적인 러시아 극동지역을 우려와 경계의 차원보다는 협력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대한 정책목표는 적어도 한국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 한국 경제는 相互補完的 性格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한·러 경제협력은 경쟁·대립관계가 아니라 호혜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첫째, 무역분야에서 원·연료를 수출하고 내구소비재를 비롯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러시아의 무역구조와 원·연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무역구조간의 상호보완성이 뚜렷하다. 둘째, 직접투자분야에서 외국자본의 진출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처녀지인 러시아의 해외투자 유치 필요성과 거대한 러시아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의 투자 필요성이 상합한다. 셋째, 기술협력분야에서 러시아가 기술수출을 통해 경제실리를 거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 추세하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에게 기술대국인 러시아는 매력적이다. 넷째, 자원개발분야에서는 러시아는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개발에 국운을 걸고 있으나, 자원도입선의 다변화 및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진출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한·러 경제교류·협력은 경쟁대상국인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①쌍무관계 발전을 통한 국익증진, ②대북한 변화유도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라는 目標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목표는 양국간 정치·경제·군사교류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둘과구 개념」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강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러시아의 효과적인 경

제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고, 한·러 군사협력을 통한 한국의 전력 증강은 러시아의 경제실리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지렛대 확보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둘째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유익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은 러시아가 대북한 관계를 복원하면 할수록 북한카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하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여타 주변국과는 구별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왔다.¹²⁹⁾ 이는 결국 「돌파구 개념」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현상변경 나아가 통일과정을 통하여 러시아의 역할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적어도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면서 획득가능한 목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강대국 잠재력을 우려하지 않고 통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양극체제 붕괴이후 새로운 패권 보다는 세력균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화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나, 열세에 있는 러시아의 역내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서 한반도 통일

129) 일반적으로 주변국들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①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②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鄭圭燮·姜元植·文興鎬, 「동북아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16 (1992.12), pp. 112~123. 참조.

과정을 활용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강대국화에는 보다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러 양국의 안보협력은 互惠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점은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차별된다. 예컨대 중국과 일본은 역내 또는 세계패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한국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목표에서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소극적 지지 또는 반대측면에서도 구별된다. 대북한 정책에서도 갈등측면이 크며, 경제이익이 상호충돌하는 측면은 더욱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이 한국의 국익과 상합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은 결국 한·러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말하는 동시에, 한·러 양측이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경우, 발전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 전면적 접근

러시아의 「전방위 강대국외교」은 「미국주도의 공동관리체제」하의 신국제질서하에서 최상단에 있는 미국과의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천명함으로써 상층부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상층부 국가들을 포함하여 중간부 국가들과의 우호친선의 등거리 전방위외교를 통하여 실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국제질서의 새로운 패권 형성을 위한 국가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신국제질서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 러

시아가 패권을 지향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현단계 국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러시아가 앞으로 상당 시일동안 국내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스탈린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 전제체제로 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국력신장이 국제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발전을 모색할 경우,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판매가 부메랑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과 같은 사태 발생에 대해 보다 둔감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부에 속하여 상층부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상층부내 약세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러시아의 상층부내 살아남기」와 「한국의 상층부 진입하기」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결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약자간의 合從戰略이다. 즉 한·러 제휴를 통해 중·일의 영향력 확대에 견제·대항하면서 상호 실리를 확충하여 국력을 신장한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는 弱者의 국력 소진을 통한 중·일의 패권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國力の 相對的 比較優位를 고려한 대상층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군사라는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동북아의 「1+3 체제」에서 미국은 정치·경제·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 일본은 경제, 인구대국 중국은 정치, 영토대국 러시아는 군사로 각각 特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일본과 중국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이 동북아

군사정세의 결정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역내 군사정세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또한 경제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괄목할 만한 상황에 있으며 장차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구비할 것으로 예측되나, 당면해서는 미·일의 경제가 역내 정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특히 4자회담이 제안되고 있듯이 한반도문제 등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상층부 국가와 중간부·하층부 국가간의 관계 설정에서 상층부 국가의 특화부분에서 관계를 강화할 경우, 중간부·하층부 국가가 당해 상층부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예측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상층부 국가가 패권화를 추진할 경우 중간부·하층부 국가의 국력수탈을 통한 자국의 국력신장이 필요불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대일 외교에 있어서 경제 보다는 기존의 대일 경제의존도를 줄이면서 정치·외교협력에 치중하고, 대중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 변수를 고려한 정치·외교협력 보다는 경제협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층부 국가로서도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국력신장을 위해 진력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일방적이 아니라 호혜협력의 소지가 크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水之形 避高而趨下, 兵之形 避實而擊虛)는 손자병법의 격언처럼¹³⁰⁾ 우리의 국력신장을 위해서는 상층부 국가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그 부분에서의 실리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군사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반적

130) 「손자병법」, 李鍾學 역 (서울: 명문당, 1993), p. 256.

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장에서 전술하였듯이 경제난에 따른 군사력의 형해화가 진행중이어서 러시아는 이미 대외적 군사투사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러 군사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군사적 예측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더욱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토대국·군사강국으로 특화되는 러시아이지만, 오히려 러시아 영토의 잠재력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는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경제 등의 제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한국이 경제발전과 통일실현을 통해 상층부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요체는 「1+3 체제」에서 최상단에 있는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되 체제유지 비용분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력신장을 위한 여력을 저축하고,¹³¹⁾ 상층부에 있는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되 일·중의 패권화 노력에 우리의 국력이 함몰·소진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층부 약자인 러시아와는 「호혜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국력을 비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1) 「1+3 체제」가 「4각균형체제」 또는 어느 일국의 패권체제로 변형되면 한반도통일 실현이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은 일차적으로 「1+3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되, 동 체제의 이중적 특징인 협조와 대립측면을 활용하여 비용분담에 최소한 참가하면서 국력을 신장하여야 한다. 姜元植, “패권이후 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참조.

2. 정치분야 협력방안

한·러 정치관계에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 또는 고려사항은 러시아의 국내정세 변화, CIS 정세 변화,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한·러 정치분야 안보협력은 이들 영역에서의 안보위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화대응체계를 완비하고 호혜협력을 모색하는데 있을 것이다.¹³²⁾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 국내정세 변화에 대응

러시아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속의 변화와 발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95년 총선과 96년 대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권력투쟁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노정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외정책도

132) 한국은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상황, 경제난,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 등 제반 변수를 명확하게 분석·평가한 바탕위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러시아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러시아의 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 등에 대한 總體的 研究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국내의 러시아 연구가 러시아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러시아 연구는 냉전시대를 통하여 도외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미약하나마 이어져 온 러시아 연구도 변화된 러시아의 국내외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내에서의 러시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研究人力의 양성 뿐만 아니라 실무차원의 러시아 전문가 양성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러시아관련 전문인력은 한국 안보에 미치는 러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절대부족 상황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내정세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대러시아 정책이 모색·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러시아의 다양한 지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한세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사회가 전형적인 人脈社會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르노미르진·루시코프·레베지·쥬가노프 등 차기대권주자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행정부·의회의 주요 지도자들, 그리고 이그나텐코 부총리와 카라신 외무차관¹³³⁾ 등 대한반도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인물들과의 유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군부·의회 뿐만 아니라 경제계·언론계·학계·문화계 등의 지도자들과의 광범위한 교류채널을 형성하여 러시아내 親韓·知韓勢力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측 인사의 러시아방문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모색하고 영향력있는 인물의 경우 한국방문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의 공식 차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의 접촉 모색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러시아내 한국전문가 또는 한국관련인사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다. 예컨대 러시아 외무부와 학계의 한국 전문가들은

13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정책부서는 주한국 대사과 주북한 대사, 아·태담당 외무차관, 제1아시아국, 한국과 등이다. 카라신 아·태담당 외무차관은 파노프가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면서 후임으로 임명(96.7.27)되었다. 한편 이그나텐코 부총리가 차기 한국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Известия», 25 июля 1996г.

대체로 평양대사관 근무경력자 또는 평양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외교사절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야별 러시아내 차세대 지도자들과의 유대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유망한 30~40대 활동가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체제전환기에 새롭게 러시아사회를 움직이는 핵심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노비 루스키」(신러시아인)와의 인맥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러시아내 한국학을 연구하는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장차 한국전문가로 성장할 유능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도 지급함으로써 러시아내 한국학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친한·지한세력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비교적 싼 비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공산·민족계의 세력 강화추세를 감안하여 이들과의 유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산·민족계 인사의 북한 방문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적인 대한반도정책 입안·추진에 필수적이다. 공산·민족계가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외교를 적극 모색·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자민당·농업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우리측 정당의 정당외교도 가능하다면 모색·추진하되, 우리측 의회대표단의 방러를 통하여 공산·민족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러시아 의원대표단의 방한을 초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산·민족계 의원들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II장에서 러시아 대선결과를 분석하면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내 분권화현상으로 지방정부의 경제권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제관련업무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¹³⁴⁾ 러시아내 각 공화국이나 주(область) 또는 변경(край)과의¹³⁵⁾ 관계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한·러 경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모스크바에 치중한 한·러관계 설정에 대해 지방측의 반발 소지가 크며 더욱이 한국으로서는 극동지역 진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방과의 인적·물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차원에서의 지방정부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러시아내 지한파·친한파 형성을 위한 인적 교류 시 地方指導者와의 유대 강화에도 힘쓰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홍보하는 설명회 또는 상품전시회 등을 러시아내 주요 도

134)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96.1.25 외무부 자문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대외관계와 중앙정부의 외교목표를 조정·일치시키기 위해 연방 외무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지방정부에 파견하는 외무부 전권대표수를 20개 지방에서 37개 지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후 「러시아연방의 통일적 대외정책노선 실시에 있어서 러시아연방 외무부의 조정적 역할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96.3.12)되었다. 대통령령 전문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6 марта 1996г.에 실려있다.

135) 「크라이」(邊疆)는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프리모르스키(연해), 스타브로폴, 하바롭스크 등 6개 변방지역 행정단위인데, 대체적으로 적은 인구에 광활한 영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오브라스찌」(州)와는 다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으로 번역하여 왔으나, 행정단위의 명칭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일본에서는 邊區, 중국에서는 邊疆區, 북한에서는 邊疆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는데, 변구·변강구는 우리말에서 「구」의 개념이 「주」보다 하위개념이므로 적절치 않으므로 북한식 번역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시와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하바롭스크변강간의 협력강화협정 체결(96.9.17)처럼¹³⁶⁾ 한·러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의회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일본과도 연계시킬 경우, 환태평양경제협력 차원의 바람직한 협력모델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러관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高位級 對話를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을 만듦으로써 공동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한 각종 각료회담 및 실무자간의 회담을 빈번하게 개최하여 상호 현안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회담들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극동지역에 총영사관을 추가 개설하고,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한국센터를 극동지역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한·러간의 모든 가능한 제도적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 CIS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CIS 재통합문제를 검토하면서 앞서 논술했듯이 내부적 역동

136) 경상남도와 하바롭스크변강은 경제, 통상, 과학, 기술, 농업, 어업,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및 행정 등의 분야에서 양 지역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외에도 도시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모스크바(91.7), 동해·나호트카(91.12), 부산·블라디보스톡(92.6), 제주도·사할린주(92.1) 등이다.

성으로 인해 새로운 역내 질서 창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새로이 나타날 구소련권내의 국가통합체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CIS 재통합 움직임에 대한 주도면밀한 현상 분석과 그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대러시아·CIS 정책을 입안·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구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연방체제가 재차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CIS 국가간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유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IS 국가 전체의 공동관심사를 조정하는 중앙기구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러시아의 발언권이 보다 확대·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CIS 역내의 여하한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CIS 역내국가들과의 개별적인 유대강화방안을 모색·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CIS 국가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한 유대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유럽권(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중앙아시아권(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자카프카지에권(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및 발트권(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로 분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접근한다. 또한 대CIS 정책이 대러시아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입안·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CIS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정치·경제·군사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러시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려인들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고려인의 존재로 인해 관계발전이 용이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이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며 개발 여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교민정책 차원 뿐만 아니라 실리추구 차원에서 관계발전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CIS 역내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확대하고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유대강화를 위한 창구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 북한의 변화 유도 모색

러시아가 현재 러·북한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하여 러시아가 보다 실질적인 役割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촉구하고 개혁·개방조치 추진을 권고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며, 나아가서는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지지하면서 그 진전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러·북한간 3각 경제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러시아와의 쌍무관계 및 다자관계 속에 북한을 참여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기는 효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남북한과의 관계를 미리 정립해 둠으로써 러시아의 정국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한·러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資料와 情報을 입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구비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통해 자료·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미공개자료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회·정치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료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믿을만한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최적지역은 러시아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북한 변수를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한·러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러·북한 동맹조약 개정은 러시아의 대외관계 조정차원에서 한국의 개입없이도 이루어질 사항인데, 개정·폐기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러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대한관계에서 북한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대체로 러시아 스스로 북한의 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러시아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한 개방 유도 차원에서 러시아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청은 하되, 한·러관계 전반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 더욱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난, 러·북한간 이념적 거리감, 중국요인 등을 감안할 때, 러·북한관계 복원 또는 발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러시아의 대북한 관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한·러관계를 북한을 포함한 삼각구도 속에서 볼 것이 아니라, 쌍무관계로서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탈냉전적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외교정책 입안·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냉전적 발상에 얽매어 외교관계의 기준을 북한에 두는 제로·섬·게임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이제 북한이 외교정책 추진의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되는 기존의 냉전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러시아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매개된 3각구도가 아니라 쌍무관계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주변국도 한국에 대해 이른바 북한 카드를 이용하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이며, 현상유지 차원의 분단 유지·관리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 현상변경의 통일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의 협력 모색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소외되고 4자회담에서 배제됨으로써 고조된 러시아의 불만을 감안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발언 및 언론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만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인식하는 바탕위에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이라는 대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북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사회적 혼

란을 틈탄 러시아 핵기술과 관련부품의 북한 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그 반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북한 협상구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KEDO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데,¹³⁷⁾ 한국은 러시아가 그동안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참여하여 왔으며, 양자차원에서 러·북한간 원자력사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고,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KEDO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³⁸⁾

물론 러시아는 자국의 경수로 기술과 신포관련 축적자료를 배경으로 KEDO에서 최소한의 비용분담으로 최대한의 역할 수행을 추구할 것이나, 러시아가 KEDO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KEDO 참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대의 핵심사업에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입지 차원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협력과 관련해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한편 4자회담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계속 부정적·미온적인 반응

137) 러시아는 파노프 외무차관이 KEDO 참여를 언급(1.8 러시아국영방송 보도; 4.18 방북시 기자회견, 북한이 참여 권유)한데 이어,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이 러·일 외무장관회담(6.29 리용)에서 KEDO 참가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참가한 ARF 의장성명(7.23)에서도 KEDO 지원의사가 표명되었다.

138)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9), p. 86.

을 보일 것이나, 만일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여 4자회담 개최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4자회담 지지 표명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원칙에 입각하여 4자회담이 실시될 경우에도 의제를 정전협정 대체문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회담에서 배제된 러시아를 위무할 필요가 있다. 즉 4자회담을 한반도문제 전반을 다루는 다자회의가 아니라 정전협정 대체라는 법률적·제도적 차원에 한정하고, 그 때문에 참가자 자격도 정전협정 서명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4자에 한정하였다는 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단 평화가 마련되면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하에 국제적 평화보장을 공고히하고, 그 후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이며, 주변국의 역할은 부차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 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의 북한 참여 및 정부간 대화채널(NEASED)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서의 한반도문제 논의도 남북한 군비통제문제 등 동북아 안보환경 전반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통일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논의대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역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전향적이다. 이런 점에서 양국간

에는 협력의 여지가 많다. 먼저 한국은 북한의 NEACD 참여를 러시아가 유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NEASED로 발전하거나 또는 러시아가 새롭게 주장할 수도 있는 정부간 다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한·러 양국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성립을 위한 한·러간 협의기구」 창설을 제의하고, 이를 모태로 역내 다자안보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다.

3. 경제분야 협력방안

한·러간 경제협력의 호혜성·상호보완성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은 경제실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한·러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는 1억5천만명 인구의 시장규모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으며, 셋째, 서방선진국들이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우주·항공을 비롯하여 소재·야금·레이저·환경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넷째,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한·러 경제교류·협력의 여지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한·러 경제교류·협력은 통상, 투자, 경협차관, 한·러·북한 3각협력, 관광개발, 과학·기술협력, 러시아의 세계경제 참여지원 등의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인식과 제도적 차원의 조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통상·투자 및 극동진출 확대

현재 한·러간 통상관계는 교역액이 그리 많지 않으나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완성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천연자원을 수입한다는 현재의 대러시아 무역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함으로써 양국간 통상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수출 주종상품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높이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의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³⁹⁾ 예컨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지 직매장과 A/S센터 설치·운영 확대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러시아 경제상황 변동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 관세 및 세율 등의 잦은 변동으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각종 협정을 체결·개정함으로써 변동된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틀을

139) 이윤,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구조 분석,” p. 287.

제시함으로써 통상관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부·민간 차원에서 러시아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연구·정리하여 러시아 진출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정보 전산망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공공 상품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상품전시회 또는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販促戰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들간의 공동보조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상품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모스크바 중심에서 벗어나 러시아내 주요 도시와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 무역관의 확대 개설과 자유경제지역내 국가차원의 보세창고 설치·운영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수출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대러시아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 투자가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인식을¹⁴⁰⁾ 바탕으로 한국의 투자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投資 誘導措置를 취해

140) 러시아는 한국의 「원자재 구입과 완성품 수출」구조는 러시아 경공업기반을 망실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산업투자·공동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그 동안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러시아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러시아는 현재 수입차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우자동차는 우즈베키스탄공장(96.7 준공, 연간 20만대 생산)에서 생산된 승용차를 관세동맹을 이용하여 외국 자동차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 무관세 우회 수출하고 있다.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가치를 판단하여 해외시장에 접근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수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¹⁴¹⁾ 이는 선진국 투자자들이 러시아를 유망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한국도 이와같은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

러시아측은 앞으로의 한·러경협 발전을 위해 몇가지의 긍정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째, 기초과학과 기술발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과학집약적 제품의 공동 생산, 둘째, 두만강지역개발 사업에서의 긴밀한 협력, 셋째, 극동에서의 기계제작공업 참여, 관광사업분야, 조선·항구 운영사업 등 투자분야의 다원화 등이 그것이다.¹⁴²⁾

향후 한·러간 투자확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고율의 세금과 관세, 경직된 관료제, 법률의 수시 변동 등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21세기를 대비하면서 필요한 현지경험과 인맥을 구축한다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41) 영국 EIU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한 해외투자가 94년 10억 달러, 95년 20억 달러이었으며, 90~95년 누계 44억 달러였으나, 96~2000년은 27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역경제」, 1996년 4월, p. 177.

142) 유세희,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러관계: 한국측 관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p. 271~272.

둘째, 근시안적 관점에서 러시아를 단순히 상품판매시장 또는 자원공급지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론 원료 채굴 및 에너지·자원개발투자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모색·추진되어야 하지만, 그 이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수득하여 새로운 투자가치를 창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러시아가 현재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군수산업의 민수화과정 또는 투자가치가 높은 기계제작부문 등 공업기업의 사유화과정의 참여 등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우주·항공·광학·통신·합금소재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건설투자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활성화하여야 한다. 미·일·중 등 역내국가들은 현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선점을 위해 이 지역내 하부구조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건수에 있어서 중국(40%), 일본(17%), 미국(16%), 한국(10%)의 순서이며, 투자규모에 있어서 미국(32%), 중국(18%), 일본(15%), 한국(9%)의 순서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다.¹⁴³⁾ 특히 극동지역은 러시아내 여타 지역에 비하여 지정학적 인접성, 풍부한 천연자원, 공업 및 과학기술 잠재력,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 상대적으로

143) 李載裕, “러시아 極東地域의 外國人投資 現況과 사회경제적 역할,”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129; 李載榮, “개혁 이후 러시아 極東의 經濟現況과 外國人投資,”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p. 238~248 참조.

저렴한 생산요소, 정치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투자가치가 주목된다.¹⁴⁴⁾ 한국도 극동지역의 항만·도로·호텔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고 동 지역 자원개발을 본격화하여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전용의 항만시설 확보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개발 투자의 경우, 대규모인 동시에 장기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투자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국제금융지원을 확보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러·북한 3각협력 추진

1995년 9월 체르노미르진 총리의 방한시 제안된 바 있는 한·러·북한간 3각협력은 한국의 자본·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을 이상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러간의 쌍무적 경제협 발전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개방효과라는 안보적 측면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각협력이 가능한 사업분야로는¹⁴⁵⁾ 대외무역화물을 철도차량에서 화물선으로 환적하기 위한 북한 나진항구의 이용, 제철·화학기업, 탄광·조선·선박수리기업, 섬유·경공업기업 등의 현대화사업, 농수산물의 생산, 약초재배, 치료센터 건설, 관광을 위한 토지·경작지·해안지역 임대 등을 들 수 있다.¹⁴⁶⁾

144) 李載榮, “개혁 이후 러시아 極東의 經濟現況과 外國人投資,” p. 256.

145) 러시아 외무부가 94년초 제안해 온 3각협력 가능 사업목록은 余仁坤,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pp. 77~79 참조.

146) M.L.티타렌코, “極東의 社會經濟의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측 관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p. 289.

3각협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불명확하나 구체적으로 실리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체제위협요인이 최소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¹⁴⁷⁾ 적어도 한·러·북한간 3각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 또는 두만강경제특구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체제위협 효과를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평양에 유리한 기초위에서 3각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3각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한·러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모색·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러·북한의 제안을 공동 검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도 있다.

한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3각협력이 매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TRADP는 현재 개발방식을 둘러싼 관련국간의 대립으로 계획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자루비노 항만확충사업이 중·러간 협력과 일본의 자본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다. TRADP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

147) 96.3.18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관 광명일 경제담당공사는 러시아하원 지정학 문제위원회의 「야쿠츠크, 북한, 한국 가스공급계획안」 청문회에서 사하 가스전 공동 개발에 대한 체르노미르진 총리, 김우중 대우회장, 김달현 북한 부총리간의 의정서 서명(92.6)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또한 북한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가스관의 북한 통과에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96.5.6 이그나텐코 부총리는 공로명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96.4 이그나텐코 방북시 러시아측이 구소련이 건설한 북한 공장의 현대화사업을 3각협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으로서 이 계획의 성공적 시행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계획하에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본유치가 필요하다.

다. 경협차관문제의 전향적 해결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의 결정 등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발전 지원 차원에서 러시아의 외채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5년 7월의 합의에 따라 기집행된 14억7천만 달러의 대러시아 차관에 대해 적어도 93년분까지의 원리금을 방산물자와 현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파리클럽 회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3국과 채무상환교섭을 할 수 없다는 협정(93.4.2)에 입각하여, 94년이후 상환도래분에 대한 교섭과정에서 장기분할상환이라는 파리클럽 방식의 원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와 함께 기합의된 93년분까지의 상환분에 대해서도 향후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상환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협차관에 대해 적지않은 不滿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이 30억 달러 차관 제공을 약속하였으나 1991년 12월이래 14억7천만 달러를 집행한 후 추가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그 동안 여타 채권국에 비해 한국의 차관상환문제에 성실하게 대응하여 왔으나, 한국은 파리클럽의 파격적인 상환조건과는 달리 그동안 원금과 이자는 물론 이자의 이자까지 가혹하게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향후 경협차관 상환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금상환이 불가한 상황에서 방산물자 또는 현물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경협차관문제를 대러시아 외교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협차관 상환을 매개로 군사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현물상환의 경우에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현물 뿐만 아니라 민영화대상 국경기업의 주식으로의 상환방식도 모색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가 전세계적 추세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불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오히려 한·러관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크다.

둘째,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채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파리클럽의 선례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쌍무적 차원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환유예기간과 추후 상환방식을 결정하거나 또는 파리클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파리클럽 방식이 사실상 무상 제공과 다름없다는 인식에서 남아있는 채무를 전면무상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상환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대러시아 외교정책의 목표와 전체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한국의 정책목표, 한·러관계의 재정립 필요성, 러시아의 경제능력, 러시아의 채무상환에 대한 세계적 추세, 대국민 설득 가능성 등이 총체적으로 점

검되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여 두고 싶은 것은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國民輿論이 경협차관 상환문제 뿐만 아니라 한·러관계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초 30억 달러 제공약속 자체가 굴욕외교라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조건 우리 측이 크게 손해본 거래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현재 30억 달러가 모두 제공된 것도 아니고 제공된 14억7천만 달러에 대해서도 한·소수교를 통해 이룩된 반대급부가 이미 충분히 그 가치를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그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어떤 형태로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한·러관계의 가일층 발전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경제협력 제도화 추진

러시아 국내정세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나 과도기 시장에는 일찍 진출할수록 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고, 위험이 있는 곳에 보다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한·러관계가 상호보완성을 토대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여타 다른 경쟁대상국과의 경제교류·협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출기반을 구축한다는 신중하면

서도 꾸준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에서 야기되는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1992년 11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부총리급 經濟共同委員會를 개최함으로써 한·러간의 제반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공동 강구·시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무급 경제회담도 정례화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러관계 긴밀화 차원에서 러시아의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는 곧 러시아로 하여금 한국을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관계로 격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될 것이며, 쌍무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국 경제관계를 국제기구의 틀 속에서 다자관계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사분야 협력방안

최근 증대되고 있는 한·러간 군사교류·협력은 한·러 안보협력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근간으로 해 온 안보구도 속에 한·러 군사안보협력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군전력 증강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는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경욱 박사는 한·러 군사협력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남북대치구도하에서의 제한적 협력과 통일지향구도에서의 자주적 협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군 전력 증강을 위해 기존 무기 체계 및 군수장비와의 상호운용성(совместимость)을 저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체계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⁸⁾ 한편 한·러 군사협력을 통해 한국은 한국군의 자주방위력 향상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러시아내 군산 복합체 인맥과의 유대 강화,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과정의 참여를 통한 경제실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어 등 對北 波及 效果, 경협차관문제 해결 등의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러 군사분야 협력방안을 군사교류형태 다양화, 무기·기술이전 확대, 군사협력 제도화채널 구축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한다.¹⁴⁹⁾

148) “현재처럼 남북간에 대치구도가 지속되는 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므로 한·러간 군사관계는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미간 안보협력 내용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내에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소멸되고 남북한간에 평화로운 공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이 한반도 통일지향구도에 진입하게 되면 ... 즉 한반도 방위의 한국 주도체제로 점차 전환하게 되면 대미 의존도가 약화될 전망이므로 한·러간 안보대화과 군사협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실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국의 자주방위력 향상을 위해 긍정적 요소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 무기체계나 기술도입은 기존 무기체계 및 군수장비와의 상호운용성을 저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시점부터는 러시아도 미국과 다른 동북아 주변국들이나 서유럽 우방국들과 다름없는 우리의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인 협력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沈敬旭, “91~’96년 韓·러 軍事關係 評價와 展望,” 한국국방연구원 한·러 군사관계 5주년 기념 세미나(1996.9.17) 발표논문, pp. 12~13.

149) 한·러 군사분야 협력방안은 沈敬旭, “91~’96년 韓·러 軍事關係 評價와 展望”; 沈敬旭, “交叉承認 完成後 韓國의 對러 安保政策,” 「國防論集」, 제32호 (1995년 겨울), pp. 56~85 등을 많이 참조하였다.

가. 군사교류 확대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한·러 군사학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신뢰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지상이나 해상 야전 훈련에의 상호 참관초청(매년 2회 가능), 개별 군사시설의 실제 운용상황·군사훈련·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용상황에 대한 소개를 위한 상호 초청방문(매년 2회 가능), 군사교육기관에의 상호 초청방문과 교육과정 소개(매년 1회), 양국 군사정책과 신뢰·안전증대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군지휘부 인사 및 군사학 관련학자간의 공동회의·세미나 개최(매년 1회), 군사전략·기술적 정보교환을 위한 비공개 회의, 군사위성분야 협력을 위한 자문 등이다.¹⁵⁰⁾ 이를 종합하여 한·러간의 군사교류 증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 양국군 고위인사의 상호 방문·교류를 정례화하고 국경일 및 군관련 경축일에 축하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 군지휘부내에 상대국에 대한 이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양국 국방부와 각군 및 관련기관의 실무진간의 접촉을 확대하며, 군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교환 방문연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간 함정교류를 정례화하고, 적절한 시기에는 항공기 상호방문도 검토·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평양함대에 한국 해군 연락장교를 상주시키는 등 한국 해군과 태평양함대와의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구축함으로써 선진 해

150) V. A. Bogdanchikov, "지난 5년간의 러·韓 軍事關係 평가," 한국국방연구원 한·러 군사관계 5주년 기념 세미나(1996.9.17) 발표논문, p. 7.

군전략·전술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사학과 관련한 연구교류를 활성화한다. 안보·국방관련 한·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요원을 상호 파견함으로써 양국간 또는 다자간 안보협력 가능성과 군사관계를 조망하고, 양국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공동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 무기체계 통합에 대비하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러시아제 도입무기에 대한 장비교육차 파견되고 있는 군사교육 교류를 적극 활성화·확대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군사교육기관 이외에도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도 단·중기 연수생을 파견하여 러시아 군사관련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을 양성한다. 한편 러시아 장교를 한국 군사교육기관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호혜주의적 토대를 구축한다.

나. 무기·기술이전 확대

경협차관 상환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방산·군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존 무기체계 및 군수장비와의 상호운용성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의 무기체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제 첨단 무기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전술개발·정보획득·전쟁억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이후 남북한 무기체계 통합과 무기도입선 다변화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한다.

둘째, 서방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전을 꺼리는 방산

기술을 최대한 이전받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선진 첨단기술 보유국으로서 유일하게 「기술의 공개·판매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기술협력대상국으로서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도입선의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94년 이후분 경협차관 상환협상에서는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는 상환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완성품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⁵¹⁾

셋째, 무기도입과 첨단기술 이전·협력이 과학·기술분야 전반의 협력관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등 기술자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고, 최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시장에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협차관 상환분만으로 한·러 군사교류·협력을 모색·추진하기에는 장애가 많을 것인 바, 궁극적으로 울곡예산과 연계하여 러시아제 첨단무기와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군사협력 제도화채널 구축

한·러간 군사교류·협력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양국간 국방장관회담을 정

151) 러시아와의 방산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는 다목적 경전투헬기 개발사업, 차세대 장갑차 개발사업, SU-35 개발사업, M-SAM 개발사업, 장거리 SAM 개발사업, 차세대 잠수함사업, 무기체계 평가모델 공동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례화하는 동시에 「한·러 군사협력협의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군사교류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양국 고위장성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한·러간 군사안보 현안 및 주변안보환경 동향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설회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양국간 위기관리의 제도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994년 6월 한·러 해상사고방지협정이 체결되어 공해상 위기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협력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자국 영해·영공에서의 상대국 항공기 및 선박 활동에 대한 안전보장, 해상운송로와 항공교통망의 안전관리, 우발사고시 통신망을 포함한 포괄적 협조체제 구축, 국제테러에 대한 공동대비책 모색 등의 영역에서의 안보협력방안이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5. 기타분야 협력방안

정치·경제·군사 이외의 분야에서 한·러간 안보현안이나 한국의 안보고려사항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은 극동지역에의 한인정착 문제, 핵폐기물 투기 방지 등 환경협력문제,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사범공조 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극동지역에의 한인정착 지원

극동 연해변강(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연해주) 지역에서의 고려인 정착

문제는 스탈린시대 고향을 잃고 강제이주당한 한인교포들을 원상 회복시킨다는 인도주의적 차원 뿐만 아니라, 한국이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연해변강에 고려인이 재정착하여 자치체 또는 한인촌을 구성하게 되면, 러시아내 탈북자의 현지정착지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북한관련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인 극동정착문제가 정부의 중요한 안보현안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소련 거주교포는 89년 1월 현재 438,650명이며, 그 중 러시아에 107,051명(24.4%), 우즈베키스탄 183,140명, 카자흐스탄 103,315명, 키르기스탄 18,355명, 타지키스탄 13,431명, 투르크메니스탄 2,848명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 321,089명(73.2%), 그밖의 지역에 10,510명(2.4%)가 거주하고 있다.¹⁵²⁾ 연해변강지역에는 91년초 현재 8,500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³⁾

그 동안 120개 이상의 민족이 모여사는 超다민족국가인 구소련에서는 스탈린시대에 적성민족이라는 불명예로 강제 이주당한 민족이 많으며, 이것이 민족분쟁의 불씨를 만들어 왔다. 그후 칼미

152) 島津朝美, “韓國の舊ソ連・東歐貿易動向: 日本の同地域貿易との比較,” p. 56. 백영옥 박사는 92년 12월말 현재 해외교포가 139개국 4,702,422명인데, 그 중 95.1%인 4,478,334명이 미·일·중·구소련에 살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250만명 정도가 중국과 구소련에 살고 있고 구소련 교포는 46만명이라고 한다. 미국 142만명, 일본 68만명, 중국 192만명(길림성 110만, 흑룡강성 45만, 요녕성 23만), 독립국가연합 46만명이다. 白英玉,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25 (1993.12) 참조.

153) V.L.라린, E.A.플락센, “재소한인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조사 결과 분석,” 「러시아研究」, 제1권 2호 (1994 하반기), p. 167.

크, 체첸, 크립, 타타르 등은 독립공화국의 지위를 얻어 1957년 명예가 회복되었고, 독일인은 독일인문제 협의를 위한 독·러 공동위원회를 1991년 설치하고 92년 7월 10일 독일인자치지역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볼고그라드주에 자치지역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폴란드, 쿠르드, 핀란드족 등은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자치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소련 최고인민회의가 “모든 민족의 강제이주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죄로 간주하면서 더 이상 소련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1991년초 러시아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피억압민족의 복권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자, 강제추방된 한인의 연해변강으로의 복귀문제와 한인자치체 수립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당초 재소한인들은 명예회복과 연해변강 지역에서의 자치체 수립에 강한 의욕을 보였는데, 강제이주에 대한 명예회복은 그후 93년에 실현될 수 있었으나,¹⁵⁴⁾ 자치체 수립주장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1991년초 이래 한인지도자들은 극동 연해변강지역에 한반도 면적의 10분의 1정도인 2만km² 규모(나호트카 북방에서 달네고르스크까지 남북 120여km 동서 60~70여km의 해안지형)의 「고려인 자유경제특구」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 구상에 대해 당초 러시아

154) 러시아 고려인협회는 한인의 명예회복, 연해변강 등지로의 자유귀환 허용, 러시아 국적취득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러시아 한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법안은 93.1.27 최고회의에 상정되어 민족회의(3.31)과 연방회의(4.8)에서 각각 채택·통과됨으로써 4.9 발효되었다.

연방정부는 물론 연해변강 정부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한인특구가 실제로 행정적·영토적 자치체를 의미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국의 자본·기술과 고려인의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¹⁵⁵⁾

그러나 한인특구 또는 자치주 수립계획은 고려인들이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한 요구만을 앞세워 러시아인 사회의 경계심만을 자극하였다는 측면이 적지않다. 결국 고려인 지도자들의 지나친 활동에 경각된 러시아 연방정부와 연해변강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과 고려인단체간의 이견으로 자치주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고¹⁵⁶⁾ 연해변강내 한인촌 건설계획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4월 명예회복이 되자 러시아 고려인협회(회장 이올레그)는 4.17 한인촌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서쪽 150Km 지점인 모스크바주 샤흘스카야구역의 총면적 130만²규모(약 39만3천평)에 130여 가구의 「고려인촌」을 건설하고, 점차 하바롭스크, 연해변강 및 카프카스지방에도 이와 같은 한인촌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155) 예컨대 박미하일 고려인협회장과 허진 「고려일보」 사장의 인터뷰(92.1.17)에 따르면, 나호트카에서는 91년말 고위관리를 고려인협회에 보내 한인특구에 나호트카를 포함시킬 경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고 한다. 91년초 당시 쿠즈네쑨프(Владимир С. Кузнецов) 연해변강 지사는 한인특구를 허락하고 한인의 조기 이주를 촉구하였으나, 소련붕괴후 나즈드라젠코(Евгений И. Наздратенко) 지사는 한인이주는 반대하지 않으나 자치주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56) 한인단체 지도자의 지나친 활동은 V.L.라린, E.A.플락센, “재소한인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조사 결과 분석,” pp. 168~169 참조.

실제로 연해변강 지역에도 한인촌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하바롭스크 남동쪽 8백여km, 나호트카 북쪽 40km 지점인 파르티잔스 크지구내 水淸(Сучан)이라 불리우던 외곽 25ha 지역에 10년동안 5천명 규모의 한인촌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촌을 여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하에 1989년 89명의 중앙아시아 한인으로부터 1만 루블씩(당시 단독주택 1채에 2만5천 루블)을 모금하여 땅을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후 급격한 인플레이로 1천배나 상승한 건축비로 인해 현재 임시거처에서 300여가구(회장 김블라디미르)가 모여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후 나호트카 한국전용공단 설립이 합의되고 6만명의 필요 노동력중 4만2천명을 고려인으로 고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공단 설립이후에는 연해변강 지역 한인촌 설립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되었다.

지금까지 한인촌 건설구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다. 「중앙일보」(96.1.14)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가 재러 고려인 112,000명의 지위향상 및 한인문화 부활을 위해 1994년 3월 기준 1,710억 루블(약 600억원)을 들여 연해변강 5개와 자카프카지에지역 5개 등 3,500~4,000명 거주규모(60~65% 주민을 한인으로 구성)의 한인촌을 건설하고, 31~39억 원 규모의 국제러·한대학을 설립하며, 현재 모스크바에 1개뿐인 한국어교육학교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공립학교 24개와 유치원 87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미 연해변강 9개 지역에서 한인촌 건설에 필요한 620ha 토지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필요재원 총 1,710억 루블중 732억 루블은 연방정부가 유

무상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족부 산하에 구성될 집행위가 한국을 비롯한 외국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방정부에 대한 세제특혜 등의 조치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¹⁵⁷⁾

전체적으로 보아 연해변강 지역에 한인자치체를 설립하려는 구상은 적어도 「고려인촌」 수준에서는 재정문제만 해결된다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연해변강 재정착문제는 러시아 연방정부와 연해변강 정부의 입장 뿐만 아니라, 연해변강 현지러시아인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까지도 극동 이주를 꺼려하고 있는¹⁵⁸⁾ 실정이므로 대규모 이주를 통한 자치체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해변강 지역에의 한인 재정착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자극요인과 부정적 저해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肯定的 측면은 첫째, 극동지역 개발에 필요불가결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구적 관점에서 극동지역의 최대의 현안은 중국 인구의 유입문제인데, 러시아 국적의 한인 노동력의 유입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동시에, 국경과 세관관리를 위한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범죄율도 낮춘다.

157) 95.12 러시아연방 민족부가 89개 연방구성주체에 보낸 「러시아 고려인과 고려인문화 부활을 위한 정부종합프로그램」에 관한 보도, 「중앙일보」, 1996년 1월 14일.

158) 90년대 초반에는 중앙아시아 한인들중 이주희망자가 40%에 달하였으나, 94년에는 10%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A.V.오스트롭스키, 「社會經濟的 변화에 따른 大衆意識構造의 변화」, p. 154.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정세가 몇 년전과 달리 비교적 안정화되어 신변 불안도 줄어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데 굳이 낯선 극동지역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해변강 지역의 농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한인의 경작능력과 근면성은 러시아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단기간내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한인의 재정착은 필수적으로 한국의 자본·기술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否定的 저해요인도 적지않다. 첫째, 현지 민족간의 갈등이다. 기존 거주자와 한인 이주자간의 이해충돌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 가능성과 함께 증대될 한인공동체의 연대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영토적, 측면에서의 우려이다. 이와 함께 인접한 중국측 한인자치지역과의 국경을 무시한 광범한 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병존한다.

셋째,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족의 이주와 같은 새로운 현상변경에 대한 관료주의적 불안감 또는 보수적 타성이다.

넷째, 연해변강 지역의 한인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어 실제로 영토적 자치체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측면이다. 물론 이 점은 한인공단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 가능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해변강 지역에서 한인이 러시아연방내 연방구성주체의 하나로써 자치체를 설립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규모의 한인마을을 개설하고 그것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치관구 또는 자치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民間 次元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체첸사태 이후 소수민족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있고, 민주화·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극동지방은 일본과의 북방4도 문제로 영토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내정간섭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 차원에서 기업활동시 고려인을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한인촌 건립위원회」 등을 고려인과 국내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결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각종 사업을 강구·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政府 次元에서는 나호트카 한국공단을 비롯한 배후시설 건립 등 연해변강 지역개발 지원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특히 러시아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 교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강구·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僑民廳을 신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교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환경협력

러시아의 환경문제는 대기오염문제, 핵발전소 방사능오염문제, 수질오염문제, 삼림자원 관리문제, 야생동물 보호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안보연관을 갖는 동해에서의 핵폐기물 투기문제를 중점 검토하고자 한다.¹⁵⁹⁾

159) 러시아의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金鍾鳴, “러시아 環境問題의

러시아는 1993년 4월 2일 핵폐기물투기백서를 공표하고 66년부터 92년말까지 러시아근해 10개 구역에 액체폐기물 123,497m³와 고체폐기물 21,842m³ 등 총 145,339m³를 투기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 3년동안 90년 6회, 91년 7회, 92년 4회 등 모두 17회에 걸쳐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6개 지역이 블라디보스톡 근해 동경 132도 북위 40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 외무부가 국회 환경특위에 제출한 「러시아백서」(93.11.9)에 따르면, 동해 9지역에서는 74~92년간 77회(고체 63회, 액체 14회)에 걸쳐 총 32,000m³가 투기되었으며, 60~92년간 동해 5지역에서는 총 7,800m³(액체 15회), 동해 6지역에서는 총 5,000m³(고체 18회, 액체 6회), 동해 10지역에서는 17,000m³(액체 6회), 동해 1지역에서는 16,000m³, 동해 2지역에서는 3,100m³의 핵폐기물이 투기되었다고 한다.

러시아가 버린 고체폐기물중에는 폐기된 핵잠수함 원자로 2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폐기물은 러시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의 냉각수와 세척수 등 액체폐기물이 대부분이며, 블라디보스톡 근처의 해군수리소에서 핵잠수함 수리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 해군 당국은 저장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인해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¹⁶⁰⁾

현재 러시아에는 구소련시대에 생산된 무기급 플루토늄 130톤,

現況, 「러시아研究」, 제1권 제1호 (1994 창간호), pp. 152~174 참조.

160) 보도되기로는 러시아는 93.10 또 다시 900톤의 액체폐기물을 블라디보스톡 남동쪽 약 190km 해상에 투기하였으며, 11월중 800톤을 동일장소에 추가 투기할 예정이었다.

농축우라늄 1,200톤 등 10만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감축과정(START I/II)에서 플루토늄 보유량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발사기지, 핵연구소 및 폐기물 저장소 등 핵관련시설의 80% 정도에는 핵물질 자동기록장치가 없고 보안장치도 허술하다. 더욱이 폭발사고나 고장으로 퇴역한 태평양함대 소속 핵잠수함들이 탑재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제거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핵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밀거래가 93년 27건, 94년 25건, 95년 13건 이상이나 적발되었으며, 바르수코프(Михаил И. Барсуков) 연방보안국 장관이 테러범의 핵물질 탈취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경고(96.2.27)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라크·북한·리비아 등 핵무기 개발 희망국으로의 핵물질 유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6년 4월 19~20일간 모스크바 핵안전정상회의(G-7,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원전 안전도 증진, 핵폐기물 처리, 핵물질 안전관리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러시아는 97년까지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원칙(런던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밝히고, 북극·극동지역에 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국제적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의 일차적 피해당사국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쌍무적 관계에서 환경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동해바다에 핵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된다는 측면 때문에 우리측이 한·러간의 쌍무적 관계로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상 환경안보라는 것은 특정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한국 이외에도 일본과 북한이 일차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일·북한이 러시아와 협조하여 이 문제를 공동 협의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태평양 넘어 미국과의 공동보조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가 전세계적인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환경단체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세계적인 공조체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망된다.¹⁶¹⁾

다. 탈북자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 협력

탈북자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탈북통로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탈북자 처리를 위한 협조문제와 러시아내 북한별목공 인권문제 등이 한·러간의 새로운 안보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러시아가 脫北者의 身邊保護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정식 외교절차를 통해 탈북자를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등 기본적으로 관용정책(policy of tolerance)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 또는 영주권 부여와 같은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북한과 1957년

161) 미국과 일본은 96.1.11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약(총 2,500만 달러규모)을 체결한 바 있다. 건설비용은 러시아 핵폐기물 위해 설립된 1억 달러 규모의 국제출연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체결한 「사범공조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¹⁶²⁾

북한은 탈북자를 범법자라고 주장하여 러시아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탈북자는 난민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국제관례상 難民의 概念은 1951년 「난민협약」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었는데, 현재에는 정치적 난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나 생명의 위협으로 초래되는 인도적인 난민까지도 보호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에서 반정부적·반체제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외탈출을 체제에 대한 저항적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 판정받아야 하며, 특히 일차적인 탈출동기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탈북자에 대해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난민으로 판정·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탈북자가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권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되, 러시아가 이미 1993년 10월 「난민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가입하였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체약국의 의무인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추방 금지, 국경에서의 입국거부 금지, 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 금지, 국제관례상의 기본적인 인권존중 및 표준처우 확대, 난민 지위의 결정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¹⁶³⁾

162)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96), pp. 13~15.

163)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협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의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와 함께 정부는 러시아내 탈북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여론에 호소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우리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러간의 외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탈북자문제는 탈북자의 신분안정화를 유도하고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의 개입을 유도·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러시아가 자주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판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UNHCR의 중재와 개입을 통해 난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UNHCR의 보호하에 탈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이주하거나 러시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망명자처리법」을 제정(95.8.1)하여 난민의 국적취득 및 정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의 러시아 정착은 극동지역 한인촌 건설 및 탈북자문제 해결에 공히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국경봉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에 대비하여 탈북자문제에 대한 한·러간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되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 현실적으로 난민의 지위 인정과 인도적인 보호권 부여는 현지국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국제법상 난민 자격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난민이 소재하는 현지국이 이를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현지국의 요청에 의해 UNHCR이 난민 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러시아내 북한 별목장의 인권유린 실태와 관련, 러시아가 인권관련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66년 채택 76년 발효)에 따라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침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거나 러시아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내에는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와 아무르 지역에 67년 구소련·북한간 합의에 의해 북한 별목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별목장내에는 자체 감옥이 있어 규정 위반자에게 무릎 사이에 통나무를 끼우거나 다리 족쇄와 코 쇠고리를 채우는 등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처벌이 성행하고 현장의 즉결처형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인도적 처우에 불만을 품은 탈출별목공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¹⁶⁴⁾

러시아 정부는 북한 별목장의 인권유린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탈출별목공을 추적할 수 없도록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한 신분증이 작업장과 거주지역에서만 유효하다는 러·북한간 임업협정(95.2.24 갱신) 14조 5항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러시아의 시정 촉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64)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pp. 13~15.

VI. 결론

러시아는 면적 1,708만km²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서쪽 끝 칼리닌그라드에서 동쪽 끝 베링해까지 무려 11개의 시간대를 가진 유라시아대륙국가. 아직 한번도 인류의 발자취가 닿은 적이 없는 태고의 땅에 무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120개 이상의 민족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초다민족국가. 6만km 이상의 길고 긴 국경에 접경국만해도 16개국인 국가.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인식속에 냉전에서 패배한 국가, 가난한 국가, 혼란스러운 국가로 각인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 구소련은 미지의 국가였다. 90년 한·소 수교로 말미암아 갑자기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나라로 되었지만, 우리의 눈에 비친 구소련의 모습은 가게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로 표상되듯이 물자부족과 무기력이었다. 더욱이 소련공산당과 소련방이 스스로 붕괴되고 15개 구성공화국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소련·러시아는 완전히 망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지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벌여왔던 초강대국 소련의 엄청난 국가능력도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혼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가능력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의 모습은 전환기 사회 특유의 혼란이라고 보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20세기를 통털어 세

계의 반쪽을 지배해 온 소련식 사회주의이념과 체제가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동과 어려움인 것이다. 더욱이 다른 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적 양상보다 러시아의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게 비춰지고 있으나, 그것도 러시아의 많은 문인들이 「어머니 대지」를 노래하고 있듯이 넓은 대지속에 모든 것을 천천히 용해하여 새로운 것을 생성하여 온 러시아 지성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러시아적인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련방 해체와 신생러시아 출범이후 러시아의 국내외정책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그 점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모습은 혼란스럽고 무원칙하게 비추어졌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정책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도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환경 속에서 러시아가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발전전략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양극시대의 한쪽 극으로서 누렸던 구소련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광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혀 새롭고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러시아는 무엇인가」라는 기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구하고자 준비되고 논술되었다.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가 또는 동반자인가? 위협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동반자라면 어떤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하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 안보개

념에 입각하여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한·러관계와 러·북한관계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II장 러시아의 안보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비록 지금 전환기적 혼란과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엘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권력투쟁 양상이 노정되고 있으나 좌우를 통합하는 새로운 중도주의이념과 정책이 강조되면서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없이 안정속의 발전을 보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단기간내 경제성장과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나, 95년이후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막대한 부존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러시아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경제난에 따른 국방비 대폭 삭감과 국민의 신뢰저하로 인해 병력 부족, 주택 부족, 급료 지체, 보급 중단, 무기·장비 횡령, 마약 유행 등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150만의 대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CIS 재통합과 관련해서는 구소련과 같은 연방이 출현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러시아의 적극적인 근외중심정책과 역내 국가들의 필요에 따라 CIS 보다는 결속력이 강한 형태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합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여 러시아가 당면하여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점이 논술되었다.

「III장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에서는 러시아가 친서방정책을 탈피

하고 변화된 국제질서속에서 새로이 「전방위 강대국외교」라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이는 NATO 확대문제, 군축문제, 지역문제 등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균형자·조정자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현안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는 미국의 돌출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여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는 「강대국외교」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모든 부문에서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대립·갈등소지를 줄여 강대국들의 대러시아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지원을 확보하여 국력을 신장하려는 「전방위외교」로 집약된다. 이와 같은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무기수출외교와 경제지원 획득외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경제지원 획득을 위해 과거 「소극적 구걸외교」를 추진하였던 것과는 달리, 서방이 러시아를 냉전을 종식시킨 승리자의 일원으로 대우하여 체제전환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땅히 분담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요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동북아시아 수준에서 이와 같은 전방위 강대국외교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천명과 남북한 등거리외교 및 적극적인 극동지역 개발의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을 자극하여 러·일관계 진전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함께 여기에서는 러·중관계 및 러·일관계 발전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IV장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서는 우선 한·러관계와 러·북한관계가 정치·경제·군사·기타 분야의 교류·협력현황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①러시아 극동지역의 평화로운

주변환경 유지, ②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실리추구, ③아·태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의 한반도정책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이와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방위 강대국외교」의 연장선상에서 ①한국과의 전면적 관계발전 모색, ②북한과의 관계복원·유지, ③남북대화의 중재 자임, ④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제안 지속 등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논하였다.

「V장 한·러 안보협력 방안」에서는 한국의 대러 정책목표와 러시아의 대한 정책목표가 서로 상합되어 상호모순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러 양국관계가 서로 호혜적인 동시에, 동북아 역내 역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러시아와 국력을 신장하려는 한국이 서로 약자간의 승從戰略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중·일과의 관계발전이 한국의 국력소진을 통한 중·일의 패권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避實虛擊戰略의 차원에서 한·러관계는 정치·군사·경제 등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한·러 관계의 호혜적·전면적 접근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고려인의 극동지역 재정착문제, 동해에서의 환경문제,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 등에서의 협력방안도 검토·제시하였다.

구한말이래 제정러시아가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우리와 러시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숙명적인 관계를 가져왔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정치·외교·경제·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 저멀리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 지구 반대편

에 있는 유럽국가로만 볼 수 없다. 지금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의 접경국가로 된다. 더욱이 극동지역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모스크바·러시아」가 아니라 「극동러시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러시아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력신장과 통일실현이라는 한국의 국가목표 실현에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러간의 호혜적·전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姜元植.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과 對內外政策 展望」.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4-04. 1994. 3.
- 姜元植. 「統一韓國의 등장에 따른 東北亞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7. 1994. 12.
-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서울: 훈민정음, 1996.
- 白英玉.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25. 1993. 12.
- 余仁坤.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 9.
- 余仁坤.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03. 1994. 9.
- 鄭圭燮·姜元植·文興鎬. 「동북아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2-16. 1992. 12.
- 통계청. 「러시아 주요경제사회지표」. 1995. 12.
- 「손자병법」. 李鍾學 역. 서울: 명문당, 1993.
-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a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orker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96.
- Buzan, Barry. *People, States &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2nd ed. Boulder, Co.: Lynne Reinner Publishers, 1991.

Вачнадзе, Георгий, «Военные мафии кремля». Москва, книга, 1994г.

Зевелева, А. И. под пед. «Истор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России».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1994г.

Ковалев, А. В. «Политика США и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0г.

Мясников, Владимир С. «Договорными статьями утвердили».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1996г.

Окуньков, Л. 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ституция и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актика». Москва, ИНФРА-М-НОРМА, 1996г.

Орлова, Н. В.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России: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Москва, юрист, 1994г.

Пак, Б. Д.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осква, 1993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Наука, 1985г.

«Кто есть кто в России и в ближнем зарубежье». Москва, Новое время, 1993г.

2. 논문

姜元植. “러시아의 外交環境變化에 따른 새로운 外交政策方向.” 「中蘇研究」. 제17권 제4호. 1993/4년 겨울.

姜元植.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러·日의 立場과 解決 展望.” 「統一研究論叢」 (민족통일연구원). 제1권 2호. 1992.

姜元植. “패권이후체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 『中蘇研究』. 제19권 제3호. 1995년 가을.

高在南. “轉換期 러시아 外交政策方向 變化分析.” 『러시아研究』. 제1권 제1호. 1994 창간호.

김덕주. “한·러관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6. 7. 24.

金鍾鳴. “러시아 環境問題의 現況.” 『러시아研究』. 제1권 제1호. 1994 창간호.

金泰虎. “1990년대 中·러 軍事協力の 현황과 전망.” 『中蘇研究』. 제20권 제1호. 1996년 봄.

라린, V. L., E. A. 플라센. “재소한인의 연해주 이주에 대한 연구: 여론조사 결과 분석.” 『러시아研究』. 제1권 2호. 1994 하반기.

朴濟勳.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추진방향.” 『러시아研究』. 제2권 제1호. 1995 상반기.

보가투로프, 알렉세이.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관심과 극동군사력의 장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대회(1996. 8. 27) 발표논문.

스코르바추크, I. D. “소련붕괴 이후 極東地域의 정치변화와 현황.”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沈敬旭. “'91-'96 한·러 군사관계 평가와 전망.” 한국 국방연구원 한·러 군사관계 5주년 기념세미나(1996. 9. 17) 발표논문.

沈敬旭. “交叉承認 完成後 韓國의 對러 安保政策.” 『國防論集』. 제32호. 1995년 겨울.

沈敬旭. “러시아 무기수출정책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研究』. 제1

권 제1호. 1994 창간호.

안현수 역. “엘친 대통령의 안보교서.”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양현수. “러시아와 동구의 안보관계: 동구의 나토가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제11차 학술대회(1996. 11. 8~9) 발표논문.

오스트롭스키, A. V. “社會經濟的 변화에 따른 大衆意識構造의 변화.”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유세희.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한·러관계: 한국측 관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이윤. “한국과 러시아간의 무역구조 분석.” 『슬라브학보』. 제11권 1호. 1996

李載榮. “개혁 이후 러시아 極東의 經濟現況과 外國人投資.”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李載裕. “러시아 極東地域의 外國人投資 現況과 사회경제적 역할.”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李昌在. “한국의 對러시아 極東地域 投資: 현황 및 과제.”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전홍찬. “러시아연방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질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12권 제1호. 통권 제23호. 1996년 봄·여름.

티타렌코, M. L. “極東의 社會經濟的 변화와 러·한관계: 러시아측 관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韓鍾萬. “러시아 聯邦政府와 地方政府의 極東地域 개발계획: 가능

- 성과 한계점.” 『中蘇研究』. 제20권 제2호. 1996년 여름.
- Bogdanchikov, V. A. “지난 5년간의 러·韓 軍事關係 평가.” 한국국방연구원 한·러 군사관계 5주년 기념 세미나(1996. 9. 17) 발표논문.
- Gordon, Anne. “中蘇 국경분쟁 調整에 관한 고찰.” 『中蘇研究』. 제19권 제3호. 1995년 가을.
- Adomeit, Hannes. “Russia as a ‘Great Power’ in World Affairs: Images and Reality.”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Vol. 71, No. 1. January, 1995.
- Alexandrova, Olga. “The ‘Third World’ in Russian Foreign Policy.” *Aussenpolitik*. Vol. 47, No. 3. 1996.
- Andrews, Josephine, Kathryn Stoner-Weiss. “Regionalism and Reform in Provincial Russia.” *Post-Soviet Affairs*, Vol. 11, No. 4. October-December 1995.
- Aron, Leon. “Russia Between Revolution and Democracy.” *Post-Soviet Affairs*. Vol. 11, No. 4. October-December 1995.
- Baldwin, David A.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Vol. 48, No. 1. October 1995.
- Ball, Deborah Yarsike, Theodore P. Gerber. “The Political Views of Russian Field Grade Officers.” *Post-Soviet Affairs*. Vol. 12, No. 2. April-June 1996.
- Dawisha, Karen.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Near Abroad and Beyond.” *Current History*. Vol. 95, No. 603. October

- 1996.
- Derleth, J. William. "The Evolution of the Russian Polity: The Case of the Security Council."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1, 1996.
- Drobishev, Yevgeni. "Russia's Korea Policy in Need of an Overhaul." *Far Eastern Affairs* (Moscow). No. 1, 1996.
- Fish, Steven. "The Advent of Multipartism in Russia, 1993~95." *Post-Soviet Affairs*. Vol. 11, No. 4. October-December 1995.
- Goetz, Roland. "Russia's Economic Potential as a Basis for its Foreign Policy." *Aussenpolitik*. Vol. 47, No. 2. 1996.
- Goetz, Roland. "Russian Security Policy Options and their Price." *Aussenpolitik*. Vol. 47, No. 3. 1996.
- Hoehmann, Hans-Hermann, Christian Meier, "Before and After Yeltsin's Election Victory on the Prospects of Western Cooperation with Russia." *Aussenpolitik*. Vol. 47, No. 3. 1996.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 Lucas, Michael R. "Russia and Peacekeeping in the former USSR." *Aussenpolitik*. Vol. 46, No. 2. 1995.
- Lukin, V. "Russia's Entry to the Council of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42, No. 2. March-April 1996.

- Malcolm, Neil, Alex Pravda. "Democratization and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Vol. 72, No. 3. July 1996.
- Markus, Ustina. "Imperial Understretch: Belarus's Union with Russia." *Current History*. Vol. 95, No. 603. October 1996.
- Moiseyev, V.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 Nossov, Mikhail. "Russia an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ar East." presented to the 7th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hel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on November 4~6, 1996, Seoul.
- Pichugin, B.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s Eastward Expansion."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42, No. 1. January-February 1996.
- Rutland, Peter. "Russia's Unsteady Entry into the Global Economy." *Current History*. Vol. 95, No. 603. October 1996.
- Schneider, Eberhard. "Moscow's Decision for War in Chechenia." *Aussenpolitik*. Vol. 46, No. 2. 1995.
- Simes, Dimitri. "The Return of Russian History." *Foreign Affairs*. Vol. 73, No. 1. January/February 1994.
- Solomon, Andrew. "Russian Election Postcard." *Current History*. Vol. 95, No. 603. October 1996.
- Surovell, Jeffrey.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Alliance:

- Soviet and Post-Soviet Perspectives.”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al Politics*. Vol 12, No. 2. June 1996.
- Timmermann, Heinz.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Russia: The 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al Politics*. Vol 12, No. 2. June 1996.
- Treisman, Daniel. “Why Yeltsin Won.” *Foreign Affairs*. Vol 75, No. 5. September/October 1996.
- Vujacic, Veljko. “Gennadiy Zyuganov and the ‘Third Road’.” *Post-Soviet Affairs*. Vol. 12, No. 2. April-June 1996.
- Walt, Stephen M.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June 1991.
- Wettig, Gerhard. “Moscow’s Perception of NATO’s Role.” *Aussenpolitik*. Vol. 45, No. 2. 1994.
- Zagorsky, Alexei V. “The Roles of Major Powers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21st Century: Russian Perspective.” presented to the 7th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held b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on November 4~6, 1996, Seoul.
- “National Interests in Russi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42, No. 2. 1996.
- 角田安正. “エリツィン政権の内部構造.” 「海外事情」. 第44巻 第9號. 1996年 9月.

江畑謙介. “CFE削減に悪しき前例生んだチェチェン紛争.” 「世界週報」. 1996年 9月 17日.

江畑謙介. “「畫餅」に終わる?: ロシアの徴兵制廃止.” 「世界週報」. 1996年 6月 18日.

袴田茂樹. “日露關係改善への五つの課題.” 「外交フォーラム」. No. 98. 1996年 10月.

島津朝美. “韓國の舊ソ連・東歐貿易動向: 日本の同地域貿易との比較.”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0巻 第12號. 1995年 12月.

服部倫卓. “96年ロシア大統領選の全貌.”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巻 第7號. 1996年 7月.

寺谷弘壬. “經濟の40%を牛耳るロシア・マフィア.” 「世界週報」. 1996年 7月 23日.

上野俊彦. “エリツィンはこうして勝利した.” 「世界週報」. 1996年 8月 20~27日.

小川和男. “大統領選挙の裏で進む市民の窮乏.” 「世界週報」. 1996年 5月 28日.

小川和男. “日ソ國交回復40周年に寄せて: 新しい善隣關係の構築をめざして.” 「ロシア東歐經濟速報」. No. 1037. 1996年 10月 15日.

柴崎嘉之. “農業荒廢を放置する政府に高まる不信.” 「世界週報」. 1996年 6月 4日.

岸田芳樹. “レベジはポスト・エリツィンのトップランナーか.” 「世界週報」. 1996年 8月 13日.

音羽周. “ロシア大統領選挙後の経済政策をめぐって.” 「ロシア東歐
経済速報」. No. 1029. 1996年 7月 25日.

井澤正忠. “エリツィン政権の直面する経済問題.” 「海外事情」. 第44
卷 第9號. 1996年 9月.

中居孝文. “揺れ動くロシアの連邦制: 連邦條約から権限分割條約へ.”
「ロシア東歐経済速報」. No. 1026. 1996年 6月 25日.

陳潔華. “太い人脈に支えられて「密月」に戻った中ロ關係.” 「世界週
報」. 1996年 7月 30日.

秋野豊. “プリマコフ外交を評價する.” 「海外事情」. 第44卷 第9號.
1996年 9月.

コンスタンチン・サルキソフ. “ロシアに民主的な市民社會の基礎がで
きた: 北方領土は當面「特別區」に.” 「世界週報」. 1996年 9月
10日.

ロシア東歐貿易會. “始動するロシアの極東長期發展プログラム.”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第41卷 第6號. 1996年 6月.

ロシア連邦經濟省マクロ經濟豫測局. “大統領選後のロシア經濟: マ
クロ經濟の「安定化」と悪化する財政狀況.” 「ロシア東歐貿易
調査月報」. 第41卷 第7號. 1996年 7月.

3. 기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통신」.

FBIS: Central Eurasia.

Moscow News.

Washington Post.

«Известия».

«Красная звезд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егодня».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Труд».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ロシア東歐經濟速報」.

「ロシア東歐貿易調査月報」.

「ロシア政策動向」.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연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한·러 안보협력방안 연구

研究報告書 96-2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